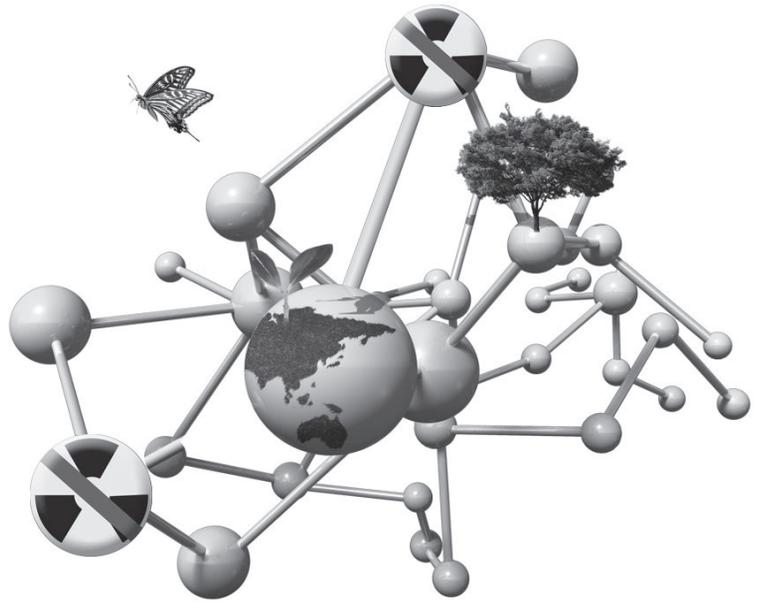


새로운 핵위험시대, 지속 가능한 평화의 모색 Sustainable Peacebuilding in the New Era of Nuclear Insecurity

주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연구단

일시 · 2013. 4. 24 (수), 09:00~17:30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층) 무궁화홀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평화인문학연구단



학술회의 프로그램

등 록 09:00~09:30

개회식 09:30~10:00

개회사 :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축 사 : 류길재 (통일부장관)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제1회의 : 지구적 핵확산과 분쟁양상의 변화 10:00~12:00

사 회 : 장달중 (서울대)

발표1 :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지역 안보 함형필 (국방연구원)

발표2 : 이란의 핵개발과 중동 지역 안보 서정민 (한국외대)

발표3 : 핵무장과 분쟁양상의 변화 황지환 (서울시립대)

지정토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성철 (서울대), 인남식 (국립외교원)

오찬 12:00~13:20

제2회의 : 동북아 각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13:20~15:20

사 회 : 박인국 (서울대, 전 유엔대사)

발표1 : 중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차이젠 (蔡健, 푸단대)

발표2 : 일본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나카토 사치오 (리츠메이칸대)

발표3 :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박영호 (통일연구원)

지정토론: 정재호 (서울대), 진창수 (세종연구소), 서주석 (국방연구원)

휴식 15:20~15:30

라운드 테이블 :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 15:30~17:30

사 회 :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제안1 : 동북아의 대안적 아키텍처 구상 전재성 (서울대)

제안2 : 과학기술과 평화 이영희 (가톨릭대)

제안3 : 평화의 감성과 문학 오수연 (소설가)

패 널 : 변진흥 (종교인평화회의), 서균렬 (서울대), 이태수 (인제대)

발표자 및 토론자



Program

- **Registration (09:00~09:30)**

- **Opening Ceremony (09:30~10:00)**

- **Welcoming Remarks**

Park, Myoung-Kyu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ngratulatory Remarks**

Ryoo, Kihl-Jae (Minister of Unification), Oh, Yeon-Cheon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ssion 1 : Nuclear Proliferation and Modes of International Conflicts (10:00~12:00)**

Chair : Chang, Dal-Jo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Ham, Hyeongpil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 **Iran's Nuclear Program and Regional Security in the Middle East**

Seo, Jeong-M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Nuclear Armament and Modes of International Conflicts**

Hwang, Jihwan (University of Seoul)

Discussants : Cho, Seong-Ryoul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Kim, Sung Chul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Nam-sik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 **Lunch (12:00~13:20)**

- **Session 2 : Responses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13:20~15:20)**

Chair : Park, In-kook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to the UN)

- **China's Responses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ai Jian (Fudan University)

- **Japan's Responses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Nakato, Sachio (Ritsumeikan University)

- **South Korea's Responses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ark, Young-Ho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scussants : Chung, Jae Ho (Seoul National University)

Jin, Chang Soo (Sejong Institute)

Suh, Choo Suk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 **Coffee/Tea Break (15:20~15:30)**

- **Roundtable : Comprehensive Approach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15:30~17:30)**

Chair : Park, Myoung-Kyu (Director of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 **Designing on Alternative Architec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Chun, Chae-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Peace and Scientific Technique**

Lee, Young Hee (Catholic University)

- **Peaceful Sensitivity and Literature**

Oh, Soo Yeon (Writer)

Discussants : Byun, Jinheung (Korea Conference of Religion for Peace)

Suh, Kune Yul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Tae-Soo (Inje University) & participants



목 차

제1회의 : 지구적 핵확산과 분쟁양상의 변화

-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지역 안보 _____ 09
함형필 (국방연구원)
- 이란의 핵개발과 중동 지역 안보 _____ 23
서정민 (한국외대)
- 핵무장과 핵정책의 변화 _____ 41
황지환 (서울시립대)
- 지정토론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성철 (서울대), 인남식 (국립외교원) — 55

제2회의 : 동북아 각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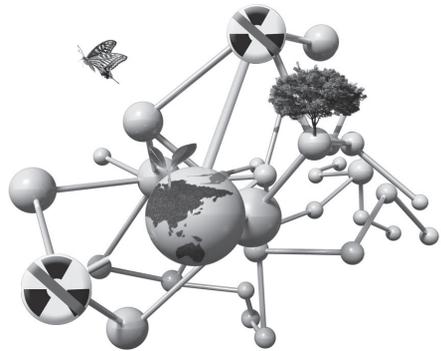
- China's Responses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_____ 67
차이젠 (蔡健, 푸단대)
-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일본의 대응 _____ 95
나카토 사치오 (리츠메이칸대)
-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_____ 113
박영호 (통일연구원)
- 지정토론 : 정재호 (서울대), 진창수 (세종연구소), 서주석 (국방연구원) — 129

라운드 테이블 :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

- 동북아의 대안적 아키텍처 구상 _____ 137
전재성 (서울대)
- 과학기술과 평화 _____ 145
이영희 (가톨릭대)
-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_____ 149
오수연 (소설가)
- 패 널 : 변진홍 (종교인평화회의), 서균렬 (서울대), 이태수 (인제대) _____ 155
발표자 및 토론자

부 록

- 北朝鮮の核開発計画に対する日本の対応 _____ 163
中戸祐夫(命館大学国際関係学部)
- 참가자 약력 _____ 179



| 제1회의 |

지구적 핵확산과 분쟁양상의 변화

-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지역 안보**
함형필 (국방연구원)
- **이란의 핵개발과 중동 지역 안보**
서정민 (한국외대)
- **핵무장과 핵정책의 변화**
황지환 (서울시립대)
- **지정토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성철 (서울대)
인남식 (국립외교원)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지역 안보

함형필 (국방연구원)

I. 서론

-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안보의 직접적 위협이자 동북아 지역안보, 나아가 전 지구적 핵확산 금지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
 - 북한은 NPT 가입국가로서 임의 탈퇴 후, 2006년 10월 9일 첫 번째 실험을 실시했고,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 1874호가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26일 2차 핵실험에 이어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음.
 - 북한은 NPT 체제하에서 핵개발(수평적 핵확산)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며, 북핵 폐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는 불안정해질 것

- 핵확산에 관한 상반된 주장¹⁾
 - 한 가지 주장은 핵무기의 점진적 확산이 오히려 지역안보에 안정적 역할을 증대할 것이라는 것임.
 - 상기 주장의 핵심은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안정을 촉발하는데,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과정은 매우 느리기에 완만한 확산은 확산이 일어나지 않거나 급격한 확산보다 낫다는 것이며,
 - 핵무기 보유 결과 억제력과 방어력이 강화되어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며 핵무기가 부여하는 책임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논리임(Waltz).

1) Sagan and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5).

- 그러나 핵확산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핵 제2세대(2nd Nuclear age)'에서 장차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군부가 장악하거나 민간정부의 핵통제가 취약하기에 위기 시 핵무기 사용을 조장할 수 있는 군사적 편향을 가지기 쉽다고 인식함.

○ 본고는 북한 핵능력의 실체 및 성격, 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을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지역 안보에 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임.

II. 북한 핵개발과 전쟁양상의 변화: 전략, 능력, 사용 가능성

1. 북한의 전략적 노선 변화

○ 북한은 2008년 8월 김정일 건강악화 이후 전략적 노선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임.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de-facto)' 지위 확보를 추구²⁾

-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란 NPT 체제하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핵보유국'을 의미

-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노선 변화는 정권의 생존전략 및 체제안정화 전략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구체적으로 드러남.

- 현재의 정국은 김정은 개인의 독단적 결정보다는 당 차원에서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 등 후견세력에 의해 기획되고 조정되고 있다는 시각이 대세

○ 정권이양기(2009~2011)에 해당하는 2009년부터 북한은 장거리로켓 시험발사(2009.4.5), 2차 핵실험(2009.5.25), 천안함 폭침(2010.3.26),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2010.11.12), 연평도 포격(2010.11.23) 등 일련의 강경책 및 도발을 구사하면서 핵개발 노력을 가속화함.

2) 함형필, 「3차 핵실험이후 북한 핵능력 평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가」, 한국국방연구원(KIDA) 동북아안보정책분석, 3월 14일.

-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도 강경기조를 지속함. 즉 2012년 2.29 합의를 파기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2012.4.13)하였고,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으로 명시했으며, 2차 장거리 로켓발사(2012.12.12)와 3차 핵실험(2013.2.12)을 감행
- 특히 당중앙위 전원회의(2013.3.31)에서 핵보유국으로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전략적 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비핵화 전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천명함.
 -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2013.4.1)에서 법령《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함.
 - 동 법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이며, 특히 북한의 핵전략 및 정책을 법적으로 정당화했다는 의의가 있음.
- 북한이 파악하는 핵보유국의 전략적 요건
 - 정치적으로 NPT 체제하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사용가능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투발할 운반수단을 보유하는 것이며, 군사적으로 대미 핵위협 능력을 보유하고 대남 절대적 군사우위를 확보하는 것
 - 결국 남한, 일본 등을 핵인질(nuclear hostage)화하여 미국과의 정치·군사·경제문제 타결을 시도함으로써, 정권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남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북 주도하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북한은 핵보유국(군사강국), 사상강국 위에 경제강국의 토대를 마련하여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최우선 국가전략목표로서 달성하고자 함.
 - ‘경공업대회’를 개최하여 인민생활개선 등 경제부흥전략을 추진
 - 핵보유 인정받으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미
 - 새로운 판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협상력을 배가하기 위해 대남위협 활용
- 김정은 유서에서 대남 군사우위에 근거한 통일전략을 분명하게 언급³⁾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3) 이윤걸,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서울: 비전원, 2012), 21~23쪽.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 것”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가문의 종국적 목표이다. 정은이 대에 안 되면, 그 후대에 가서라도 무조건 통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 남조선정권하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이나 통일이 불가능하다. 남조선의 다음 정권과의 관계에서 사상적으로 철저한 우위를 차지하며 그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경제,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의 심리적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堂堂히 올라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하며 국제제재를 풀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 현재 북핵은 김정은 정권에 생존전략의 기본수단인 반면 대외전략의 핵심수단이자 통일대업 완수를 가능케 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인식 및 활용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위협의 의미는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 상황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핵인질’ 상태의 한국을 위협하는 것

2. 북한의 현존 핵능력⁴⁾

- 북핵 관련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북핵 능력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해임.
 - 그간 비핵화 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차단, 정권의 대국민 책임회피,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방지하는 차원 등을 고려, 대체로 보수적인 판단을 해옴.
- 통상적 핵무기 개발과정은 ① 핵물질 확보 》② 기폭장치 개발 》③ 핵폭발장치 제조 및 핵 실험 》④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및 운반수단 탑재 》⑤ 전력화(핵무기 양산 및 지휘통제체계 구축) 및 고급 기술(핵융합 등) 개발 》⑥ 작전배치(독트린 정립) 단계로 진행
 - 북한은 현재 4~5단계의 중간 정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즉 남한에 대해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거의 정확한 평가임.

4) 2013.3.7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주관 국방정책토론회 발제문,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과 우리의 전략적 대안」 참조 요약.

○ 북한의 핵물질 확보 추정량

- 10kt 플루토늄 1기 제조에 약 3~4kg 플루토늄 사용 가능
- 북한이 보유한 Pu 총량은 약 40~43kg으로 10~14기 핵무기 제조 가능
- 비밀시설에서 연간 핵무기 2기를 제조할 수 있는 약 30kg가량의 HEU 생산 유력
- 북한은 2010년 이후 6~8기의 우라늄탄 제조 가능한 HEU 확보 추정

○ 내폭형 기폭장치 제조 능력 및 우라늄탄 보유 추정

- 3차 실험에서 HEU 내폭형 핵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나, 플루토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 불가

○ 특히 1, 2차 핵실험에 비해 다소 증대된 10여kt 수준의 폭발력을 발휘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 가능한 '내폭형 핵무기 디자인' 완성 가능

- 당초 예상보다 위력이 못 미치나, 북한이 지하갱도의 특성을 고려 위력을 조정했을 가능성도 존재

○ 일정 수준의 소형화·경량화 달성 추정

- 2, 3차 핵실험 성공, '80년대 이후 100여 회 이상 고폭실험 등 고려 시 소형화 달성 가능하며, 소형화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려 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
- ICBM급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대 중량의 trade-off를 고려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충분히 미사일 탑재 가능한 수준임.

○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중·단거리 작전배치 탄도미사일로서 스커드 600여기, 노동미사일 200여기 등을 포함하여 대략 1,000여기 탄도미사일과 IL-28항공기 보유

- 특히 핵탄두 탑재가 유력한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400~1,300km로서 남한 전역 공격 가능
- 최근 북한은 △GPS 기술을 활용하여 수m 정도의 CEP 확보, △TEL을 활용하여 이동 능력/생존성 증진, △로켓개량을 통한 장거리 투사능력 향상에 주안

○ 핵보유국 기준 현 핵능력 수준 평가

- '사실상의 핵보유국'은 단순히 핵무기 몇 기를 가졌다고 성취되기보다, 신뢰성 있는 핵억제력 구비라는 요건의 충족이 필수적

- 신뢰성 있는 '핵억제력'은 △핵전력의 생존성(survivability), △운반체계, △핵무기 자체의 안전성, △핵무기 방호 체계, △승인되지 않은 사용의 위험성 방지 체계, △지휘통제시스템, △핵사용 독트린(targeting and doctrine), △충분한 핵무기 위력과 수량, △합리적 개발·운용 비용 등 구비될 때 달성
- 북한은 아직 초보적 수준의 핵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비록 '사실상의 핵보유국'에는 못 미치지만 소량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향후 북한은 동북아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핵파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에 일정 부분 핵능력을 과시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현대화된 핵·미사일의 지속 개발 및 핵능력 확대 추진이 예상된다.
 - 1st strike를 받은 후 생존전력을 가지고 2nd strike가 가능한 수준의 핵무기 보유 및 실전배치
 - HEU 생산(1,500kg) 및 핵무기 보유량 증대(50~100여기 수준)
 - 미국을 목표로 한 ICBM 기술 확보(융합형·증강형 핵무기)
 - 생존성 보장을 위한 mobile 체계 및 잠수함 투발체계 확보
 - 전략적 융통성 차원에서 스커드, 노동, KN-08, 대포동미사일 등에 탑재 가능한 다양한 탄두 개발

3.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고찰

-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국제정치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음.
 -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인식과 △사용 가능한 무기이나 핵무기 사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이 큰 상황에 따라 억제된 것이라는 대립적 견해 존재
 - 오늘날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인식이 보편적임.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외적 적용을 꺼려하는 일반적 경향 존재
- 특히 핵무기 사용 불가능론자들은 2차 대전 외 사용전례가 없어 실제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 주장⁵⁾

5) 한용섭, 「핵무기 없는 세계: 이상과 현실」, 《국제정치논총》, 제50집 2호, 2010, 260-262쪽.

- 핵무기는 정치적 무기이지 군사적 무기가 아님. 따라서 북핵위협 존재하나,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
 - 북한은 미국의 강력한 핵보복(억제능력) 정책을 의식하여 정권붕괴 또는 국가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을 결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즉 북핵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사용될 것이므로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고 평가
- 반면 Sagan, Montbrial 등 학자들은 “국내 정치가 불안한 개도국과 후진국의 비이성적인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있다면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미 국방대 James J. Wirtz 교수는 약자의 낙관주의로 인해 약자들은 강자들이 억제책을 시행한다는 공약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
 - 즉, 군사적으로는 전략적 기습을 통해 상대의 우세한 군사력을 우회하여 억제책을 무력화할 수 있음(군사적 해결책).
 -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략적 제약으로 억제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수 있음(세력균형의 역설).
 - 약자는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비용을 감내할 의지가 있으나, 강대국은 일반적으로 비용을 감수할 의지가 부족(사회적 제약)
-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하게 답할 수 없음. 북한의 지도자가 비이성적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북한 정권의 특수성과 향후 북한이 처하게 될 특별한 상황에서는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 북한 불안정 상황 ⇒ 핵통제 불안정 / 군사도발 ⇒ 핵 사용으로 연계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 증대
 - 특히 다음과 같은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① 북한의 체제적 특성: 선군정치적 군사문화
 - 1인에 집중된 의사결정구조, 편견, 책임회피성 관료문화 정착
 - ↳ 횡적 소통단절, 비탄력적인 의사결정, 기관이익 우선주의
 - ② 최고사령관의 성향과 통치방식
 - 체제 위기상황 탈피를 위한 고강도 위기조성 및 적대감 고취
 - 군사도발 감행으로 내부단결 / 위기국면 돌파 시도
 - ③ 국지도발사태가 대규모 군사충돌로 비화(escalation)될 가능성

○ 북한의 핵사용에 관한 전략적 딜레마

- ① (전력의 전반적 열세) 핵사용을 배제하고 자신의 재래식 전력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쟁 승리 또는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 ② 핵사용 없는 전쟁에서의 실패는 곧 정권의 붕괴 위기 초래⁶⁾
- ③ 미국에 의한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
- 『2010 NPR』에서 NPT 탈퇴 및 위반 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 제외 명시
- ④ 약자의 낙관주의에 근거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오관 가능성: 선별적·제한적 핵사용 시 미군이 핵대응 하지 못할 것으로 오관
- 위기 상황 시 핵사용에 대한 강한 유혹, 궁지에 처할 경우 자포자기식 핵사용 선택

○ 북한 정권의 현실 및 상황인식에 의해 핵사용 가능성 좌우

- 핵개발 목적을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라고 수차례 천명(합리성)
- 현재 핵의 역할을 상대방 공격에 대한 억제 및 자국의 방어력 제공이라는 일차적 목적에 국한
- 다만,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수사적 대남 핵위협 활용
- 북한정권의 합리적 의사결정 고려 시 미국의 핵대응 회피 위해 가급적 핵사용 배제
- 하지만, 전쟁억제 실패 등 극한 상황 처한다면 공세적인 핵사용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도 존재함. 즉 유사시 전쟁승리 위해 적극적인 사용 불사(결정적 순간)

4.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분석

○ 확률은 낮지만, 가능성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북한의 평시 핵 도발 유형은 △핵테러(방사능테러 포함)와 △핵위협(공갈) △핵확산 △핵실험 등이 있음.

- 핵테러는 무장공비 침투 또는 테러리스트 위장을 통해 사회혼란 조성 차원에서 시도
- 핵위협은 수사적 위협으로부터 다양한 수준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국지도발 상황에서 우리 측의 능동적 억제전략을 제한할 목적으로 협박(공갈)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북한이 핵무기 제조 물질이나 관련 기술을 제3국으로 명백히 이전하는 핵확산 사례의 경우 도발로 간주 가능(예, 이란으로 원심분리기 이전)
- 핵실험시 기존 핵실험과 차별된 위력 및 수량증가 또는 융합 등 기술진전을 시도

6) 사람은 이득보다는 위험에 더 큰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손실회피(loss aversion) 반응을 보인다. Amos Tversky and Daniel Kahneman, "Loss Aversion in Riskless Choice: A Reference-Dependent Mode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4(1991), pp 1039~1061.

○ 북한의 실행가능한 핵테러 유형

-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원인 미상의 사고 가장 등 다중위협을 시도할 가능성
 - ① 핵무기나 간이 핵폭발장치(소위 핵가방 또는 핵배낭)를 이용한 테러
 - ② 방사능살포무기(RDD 또는 Dirty Bomb)나 방사능누출무기(RED)를 이용한 테러
 - ③ 방사능을 누출시킬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 & 사보타주
- 테러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 상정 가능, 무엇보다 북한이 시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가능, 사전 의사결정기준 마련 필요

○ 평시 △북한체제의 불안정 상황 △국지도발 상황에서 위기고조(escalation)에 따라 북한의 핵사용 도발 가능성 증대

- 초기 적극적인 위기관리 전략 구사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할 필요
-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강력한 보복 의지 천명하되, 과도한 자극으로 불필요한 오해 및 위기고조 방지

○ 전시 북한의 핵사용 결정은 핵사용 적기와 표적(targeting)에 따른 공격형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

- 북한 정권 지도부가 핵사용 시기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요소
 - ① 시간 경과될수록 북한 핵전력의 생존성 감소 > 초기사용 바람직
 - ② 전쟁승패 결정적 관건: 미 한반도증원전력 차단 > 증원이전 핵사용 필요
 - ③ 기습 및 선제타격의 효과
 - ④ 전쟁후반부로 갈수록 핵무기 효용성 감소 > 중반부 위기탈피라는 제한적 사용만
- 일반적으로 북핵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식되나, 핵무기 사용의 효용성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되므로 최적의 사용시기가 존재함.

○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가용한 핵공격 옵션

- 작전수준과 공격형태, 공격시 고려하는 표적종류에 따라 다양한 공격 구상 가능
- 전략적 수준에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대량살상공격과 전자기펄스(EMP) 공격, 전략적 군사표적에 대한 공격, 핵폭발 시위 등을 구사 가능
- 전술적 차원에서는 소규모 정밀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전사급 이하 부대 및 제한된 군사표적을 목표로 하는 공격을 선택 가능

① 이외에도 북한은 실제적인 핵폭발을 하지 않더라도 핵을 무기화 삼아 억제전략과 위협전략, 무사용 등의 옵션 선택 가능

○ 공격옵션의 선택은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 △군사전략적 고려, △핵무기 보유수준과 기술 수준, △국제사회의 반응 및 대응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상

- 제시된 공격유형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조건이 없다는 가정 아래서는 북한은 자신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유리한 공격옵션을 선택
- 실제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고려요소는 식별 불가능

○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직관 제공 차원에서 북한의 핵공격 우선순위를 판별하기 위한 분석 시도(5가지 평가기준 적용)

- ① 가치성: 전쟁승리에 대한 가치 기여도;
- ② 안전성: 적의 대량보복 회피 가능성;
- ③ 효과성: 비용대비 효과;
- ④ 정당성: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제재 회피;
- ⑤ 용이성: 군사적 · 기술적 이행가능성.

[표 1] 5가지 평가요소에 의한 북한 핵공격 유형별 평가 현황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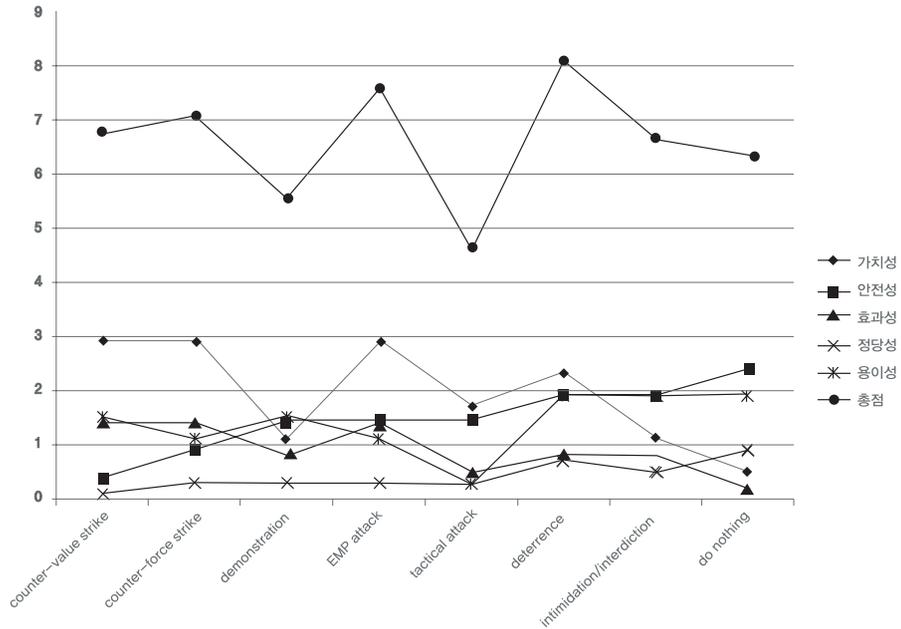
핵공격유형 (가중치)	가치성 (0,3)	안전성 (0,25)	효과성 (0,15)	정당성 (0,1)	용이성 (0,2)
counter-value strike	10	2	10	2	8
counter-force strike	10	4	10	4	6
demonstration	4	6	6	4	8
EMP attack	10	6	10	4	6
tactical attack	6	6	4	4	2
deterrence	8	8	6	8	10
intimidation	4	8	6	6	10
do nothing	2	10	2	10	10

※ 평가점수 예시) Very high(10), High(8), Medium(6), Low(4), Very low(2)

7) 평가요소별 10점 만점, 평가요소별 가중치 고려

-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델파이 기법 적용 가능하나, 개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유형별 · 요소별 점수 부여

[그림1] 북한의 핵공격 유형 평가



- 요컨대, △핵억제, △EMP 공격, △대군사공격, △핵위협, △대가치공격, △사용배제, △과시적 사용, △전술적 사용 순으로 사용이득 증대
 - 전면전 발발 시 전략적 이득이 큰 <핵억제 옵션>과 <EMP 공격>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

○ 북한의 예상 가능한 핵도발 시나리오

- 전·평시 한미 핵 및 재래식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핵억제 의존
-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 EMP공격 선택 유력
- 북한의 초기단계 추가 옵션은 한국군 작전사 등 전략표적 위주의 제한된 대군사
- 한미연합군이 반격을 시도할 경우, 한미연합군의 기동전력에 대한 대군사공격 시도
- 전쟁 중반부 정권위기 초래 시 인구밀집 도시나 산업시설에 대한 대가치공격(counter-value strike)이나 대량살상공격 선택할 가능성

III. 북한의 핵무장이 갖는 안보적 함의

1. 한반도 차원

- 북한의 핵능력 수준은 남한을 대상으로 對가치 타격 및 對군사 타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근본적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존속되는 상태에서는 불가불 미국의 핵보복에의 노출이 불가피, 전반적 차원에서 억제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표 2]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 현 핵능력 수준 평가

구 분	대 미	대 남
생존성	×	△
운반체계	△	○
안전성	△	△
방호	○	○
미승인사용 방지	△	△
지휘통제체제	△	△
표적화와 교리	×	△
핵무기 & 비용	×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직접 타격능력 미구비 • 핵무기 수량 · 위력 · 신뢰성 제고 필요 • 향후 제한적 도시타격만 가능 • 생존성 취약, 다양한 타격수단 미구비 * 핵능력 수준 극히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직접 타격능력 구비 • 핵무기 수량 · 위력 충분 • 도시/제한적 군사표적 타격 가능 • 생존성 구비, 다양한 타격수단 미구비 * 상당 수준의 핵능력 구비

○ 한반도 분단구조의 고착화 불가피

- 북한은 체제보장과 정권 연장을 위해 핵능력 활용을 강화, 대남 핵인질 전략과 핵위협에 기초한 한반도 대결국면의 장기화 시도
- 특히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대세
- 또한 북한이 시시때때로 핵위협 카드를 활용한 강압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남한 내 우려감 증대
-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재반입론 제기 등 억제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 증가
- 대북 유화정책 구사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 확대

- 북한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재래식 분쟁이나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
 - 강도 높은 도발빈도의 증가가 전적으로 북한의 핵무장 탓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우선 추구를 시도하면서 국지분쟁의 증가 현상 대두
 - 핵무장한 군사강국이라는 자기최면에 의해 보다 과감한 군사도발 시도의 개연성 증가

-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억제력을 제공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불가피하고 남북 군비 경쟁이 불가피
 - 남한은 미국과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한미연합억제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도 선제타격 및 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독자적 억제역량 강화 추구
 - 북한은 남한 대비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에 처해 있어 불가불 이를 상쇄하기 위한 비대칭 수단으로서 핵무기 적극 활용(병진노선에 반영)
 - 병진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재래식 전력 분야를 축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관찰이 필요

2. 동북아 차원

- 동북아 안보 구도의 고착화 가능성 증가
 -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은 한미일 3각 협력 구도 유지의 필요성 부각
 - 한반도 안정화를 명분으로 북-중-러 3각 협력 필요성 강화
 -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무장한 북한이 안정화되는 것

- 미-중 간 협력-경쟁 구도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 동북아 안보구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며, '탈냉전기 신대립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임.
 - 한국 및 일본 등에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동맹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
 - 미국의 강력한 비확산정책과 확장억제 제공으로 한국 및 일본 등의 핵무장 가능성이 낮으나, 북한의 핵무장 장기화는 지속적으로 동북아의 핵도미노 가능성을 촉발하는 요인
 -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 개입 명분(MD체제 강화, 한반도 전력배치, 연합훈련 등)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이것은 중국의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데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

- 특히 중국은 주변국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으로 북한이 전략적 차원에서 독자적 위상을 갖는 것을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함으로써 중국의 대북개입 강화 요인

IV. 결론

-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 및 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
 - 국제비확산체제의 사실상의 붕괴를 의미
 - 동북아 다자안보레짐 형성의 기회 상실로 연결
 - 동북아 핵도미노 촉발요인 강화
- 단기적으로 미국의 통제로 동북아 핵도미노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안정적인 핵전력을 구축하고 미-중 간 국력의 격차가 점차 감소해감에 따라 동북아에서 핵도미노가 발생할 확률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적 핵확산이 대규모 전쟁을 방지하고 부분적 세력균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과 호전적 통치술,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한국 및 동북아에는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
- 한국은 북핵에 대한 억제력과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해 가면서 북핵의 근원적인 제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이란의 핵개발과 중동 지역 안보

서정민 (한국외대)

I. 들어가는 말

“이란 핵개발 좌시하지 않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월 14일 이스라엘 채널2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모든 옵션이 실제로 테이블에 있다”며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장기화하는 이란 핵개발 사태에 대한 서방의 압박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가 오히려 이란에 대한 핵개발 저지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만이 아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국제사회 곳곳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조치와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란 핵개발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장기 내전으로 빠져든 시리아 사태의 책임을 이란에 돌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아비브 코차비 소장은 14일 “이란이 시리아 정부군에 지난 수개월 동안 무기지원을 크게 늘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생명줄을 연장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이란의 인권침해를 문제 삼았다. 11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외무장관 회의는 이란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계속 자행하는 데 대응해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가하는 이란인 제재 리스트에 9명을 추가했다. 이란 정부가 야당 인사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재판도 없이 구금하고 처형하는 데 대한 EU의 조치였다. EU는 이미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원유금수 조치와 무역 및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같은 이슬람권인 아랍권의 움직임도 최근 심상치 않다. 이란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3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제30차 아랍 내무장관회의의 성명이 한 예다. 아랍권 22개국 내무장관들은 “이란이 바레인과 예멘 내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난 성명을 채택

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은 2월 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드러났다. 영화 ‘아르고’가 작품상, 각색상, 그리고 편집상을 받았다. ‘아르고’는 1979년 11월4일 이란 테헤란에서 시위대에 점령된 미국 대사관 직원 6명을 구출하려는 중앙정보국(CIA)의 실제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다. 이란 당국은 이 영화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국내 상영금지 조치는 물론 제작사를 고소한 상태다.

이란이 최근 다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3차 핵 실험이다. 국제 비확산 체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서방에게 이란 핵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북한과 달리 아직 ‘진행형’인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은 이미 민수용 한계인 20%를 넘었다. 무기제조에 필요한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은 의지만 가지면 시간문제다. 즉, 이란도 국제사회가 설정한 ‘레드라인’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P5+1’이 2월 말 이란과의 협상에서 20%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과 국외 반출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란이 북한과 같이 통제 불능한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 핵 비확산 체제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란과의 협상과 조치에서 국제사회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월 말 26~2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진행된 이란과 ‘P5+1’ 간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수년간의 협상이 이어져 왔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좇이지 못하고 있다. 석유 금수 등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에 대한 효과도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 경제에 분명히 충격을 주고 있지만 결정타는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이란은 파키스탄과 가스관 건설을 강행하는 등 제재를 피해 활로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가속할 수 있는 신형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후보지 16곳을 새로 선정하는 등 핵 개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분석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월 5일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제임스 매티스 중부사령관도 의회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경제 제재와 외교로 막으려는 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란이 협상으로 시간을 벌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것이 매티스 사령관의 분석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시나리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초강경 보수파(네오콘) 핵심인사였던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3월 1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핵무기 확보 전 핵시설 공습 여부와 관련, 최종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동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로 이미 혼란 속에 있는 중동에서 새로운 전선을 펼치기가 부담스럽다.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을 어렵게 탈출한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더욱 그렇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직접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 백악관 안보회의 중동국장인 플린트 레버레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테헤란으로 가기'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핑퐁외교로 중국을 개방으로 이끌어낸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I. 강성·강경해지는 이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중동에서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전문가들은 두 국가를 꼽는다. 이라크와 이란이다. 영토, 석유 등 천연자원, 그리고 인구 면에 있어서도 두 국가는 다른 어느 아랍권보다도 가장 큰 경제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석유자원으로만 따진다면 단연 사우디아라비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지만 이란과 이라크는 다른 아랍국들과는 달리 수자원을 가진 나라들이다. 나일강을 가진 이집트도 있지만 석유자원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이라크와 이란은 고대부터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문명을 꽃피웠다. 특히 이란의 경우는 중동에서 최고의 조건을 가진 나라다. 앞서 언급한 천연조건 외에도 8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사우디의 경우 방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해 3000여 만에 불과하다. 다른 걸프지역 산유국들도 비슷한 사정이다. 석유수입 덕택에 잘 살 수는 있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 바닷물을 담수화해야 마시고 쓸 수 있다. 강이 없어 농경이 발달하지 못해 많은 인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란은 720km에 달하는 카룬강을 비롯해 10여 개의 큰 하천이 있다. 북부지역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풍부한 수원들이 곳곳에 위치한다.

모든 조건에서 이란은 중동 내 최대 발전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하지만 이란도 예전의 강대국의 지위를 근세에 와서는 상실했다. 영국의 식민지배에 이어 부패한 왕정 때문에 이란의 정치·경제는 제3세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왕정을 타도했지만, 뒤를 이은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하에서 이란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와의 8년간 전쟁(1980-1988)을 겪기도 했다. 혁명과 444일간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억류되는 수모를 당한 미국으로부터 현재까지 34년간 외교적 압박을 당해왔다. 이란의 '부활'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란의 속적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이 그 시작이다. 건원지간인 인접국 지도부가 스스로 붕괴의 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991년 다국적군에 대패한 이라크는 포괄적인 경제제재와 남부와 북부지역에 대한 비행금지조치로 크게 약화됐다. 반면 이란은 점차 회복하고 있었다. 보수주의 종교 세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느리지만 경제개혁이 진행됐다 1997년부터 8년간 집권한 모하메드 하타미 대통령의 개방정책으로 긍정적인 개혁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2003년 미국 주도 동맹군이 무기력해진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이란에게는 큰 기회로 다가왔다. 최대의 적인 이라크 수니파 정권은 무너지고 시아파 종교 세력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적대 국가가 이란의 맹방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변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수니파인 아랍국가 지도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크게 반대하기도 했다. 후세인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면 이라크 인구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시아파가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카이로 알-아흐람 전략연구소의 무함마드 술탄 박사는 "9.11 테러이후 중동 내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나라는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이다."라고 지적했다. 제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기도한 이스라엘로서는 안보를 위협하는 아랍국 이라크가 사라졌다. 이란으로서는 최대의 적(이라크)을 또 다른 적(미국)이 알아서 제거해 준 셈이 된다.

이란이 핵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도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였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후 이라크에 대한 군사조치설이 확실해지는 시점이었다.¹⁾ 내부적으로는 급증하는 인구 때문에 실제로 전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에 몰두할 미국이 이란에 대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기도 했다. 핵개발 강행을 위한 내부 여론

1) Nathan Gonzalez, *Emerging Iran: The Rise of a Middle East Powerhouse and America's Strategic Choice*(Westpoint: Praeger Publishers, 2007), pp 121~123.

조성에도 적기였다. 이라크 전쟁설과 침공으로 인한 이란 내 반미감정이 더욱 거세지면서다. 이라크 전쟁에 승리를 거둔 미국이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란 내에는 강경파들이 더욱 영향력을 강화했다. 예상을 깨고 2005년 대선에서 초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가 승리를 거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Ⅲ. 우려 속의 아랍권

2006년 5월 3일 카타르의 국왕은 이란 공식방문 마지막 날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환송식에서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국왕은 “아랍 페르시아만 지역의 영광과 화합을 위해 월드컵에 진출한 이란 축구대표팀을 초청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칼리파 국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끼어들었다. “학교 다닐 적 국왕도 페르시아만으로 불렀을 텐데... 영국에서 학교를 다녀 잘 몰랐나?”라고 공격했다. 칼리파 국왕은 얼굴이 붉어졌다. “어쨌든 이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라고 받아치고는 앉아버렸다. 이란과 걸프 국가들을 가르는 바다의 명칭에 대한 양측 간 오래된 갈등이 불거져 나온 사건이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아랍권은 아랍만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인근에서는 여러 섬들은 양측 간 소유권 분쟁 중이기도 하다. 이란이 강성해 질수록 영토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랍권의 우려다. 이를 반영하듯 영국의 권위 있는 지도제작사인 콜린스는 이 바다를 그냥 ‘만(灣, The Gulf)’ 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카타르 정상간 발생한 이 해프닝은 이란 핵 사태를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이란과 걸프아랍국간의 긴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 단면이다. 아라비아반도 동부 해안을 낀 걸프협력기구 수니파 6개국은 한결같이 이란의 핵개발 및 군사강국화에 초긴장상태다. 이란이 강성해질수록 여러 모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자국 내 시아파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UAE 등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정도로 친미성향의 정권들이 통치한다. 이 때문에 반미 강경기치를 내세우는 아흐마드네자드 대통령이 이들에게겐 위협요소다. 반면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을 ‘친미 하수인’ 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란 언론은 이번 카타르 국왕의 방문도 핵 사태 관련 미국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폄하했다. 이란-서방 핵 대치는 이처럼 아랍 국가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다. 점차 더 강경해지고 있는 이란

정부와 미국 주도 서방 간 전쟁이 발생한다면 아랍권은 더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슬람권인 이란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미국을 드러내놓고 지원하기도 어렵다. 이미 이라크 전쟁과 점령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란의 핵무장으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아랍권은 분열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국내정치상황, 이란 그리고 미국과의 이해관계, 국민 여론 등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나올 것이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아랍권은 또 한 번 대지각변동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랍권이 불안해하는 이유의 본질은 이란의 강대국화다. 같은 중동·이슬람권이지만 민족과 언어가 전혀 다른 이란이 지나치게 큰 힘을 갖는 것에 대해 아랍권은 반기지 않는 눈치다. 가장 큰 두려움은 이란의 군사대국화에서 온다. 고유가덕분에 오일달러가 크게 늘면서 이란의 무장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이미 중동 내 군사대국으로 급부상했다. 이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신형무기들을 내놓았다. ‘신성한 예언자(Holly Prophet)’라는 작전명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신형미사일 ‘코사르(Kowsar)’의 발사에 성공했다. 이 기능은 이란이 이미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고체연료 추진제와 결합돼 ‘샤함-4’ 미사일에 장착될 전망이다. 사정거리 3000여km에 달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대형 군함과 잠수함을 파괴할 수 있는 고속 어뢰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후트(고래)’로 명명된 이 어뢰는 수중에서 초속 100m의 속력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어뢰중 하나다. 헬기와 제트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공대함 및 공대지 겸용’ 첨단 미사일 ‘누르’를 시험 발사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란의 적극적인 전략무기 개발은 이라크 전쟁 이후 가속화했다. 지역정세가 어수선해지고 핵문제로 인한 서구와의 대치가 시작되면서다.²⁾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당선직후 “국가와 민족 그리고 자원수호를 위해 강력한 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거리 미사일의 실전배치와 최초 잠수함 건조,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개발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뤄졌다. 여기에 여러 차례 소형위성도 쏘아 올려 정보전에도 가세했다. 이란의 중무장화는 두 가지 목적에서다. 미국·이스라엘 등이 계획하는 ‘경제제재→군사적 제재’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시용’이다. 때문에 핵 문제가 고조되는 시점마다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하곤 한다. 수만의 병력과 잠수함,

2) Anthony H. Cordesman, "Iran and the United States: The Nuclear Issue," *Middle East Policy* 15(1), pp 19~21.

전투기 등을 동원해 군사력을 과시해 왔다. ‘이란은 이라크와 다르다’ 라는 점을 확실히 알려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겠다는 의지를 최소한 대내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장기적인 목표는 중동의 패권이라고 할 수 있다. 범아랍 군사전문 주간지 알-디파(국방)는 2012년 4월호에서 “이란의 실질적인 위협은 재래식 전략무기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방과의 핵 대치도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재래식 대량살상무기 개발하기 위한 ‘눈가림’ 이라는 분석이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과 터키에 이어 중동 내 최대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란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이스라엘과 걸프 친미국가들이 우려는 당연하다.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이란의 역내 영향력 강화도 아랍권에 큰 불안요소를 등장하고 있다. 이란의 패권야심은 이라크 전쟁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8년간의 전쟁을 치른 적대국 이라크의 위협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등장한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와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라크 전쟁이후 2년만인 2005년 7월 이라크와 이란의 관계개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시아파 출신 이브라힘 알-자파리 이라크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사실상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1967년 이후 약40여년 만에 이라크 정상이 각료급 인사 10여명을 이끌고 테헤란에 도착했다. 당시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부통령은 이라크 대표단에 “이라크를 우리의 형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에 시아파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한 최대 환영표시였다. 알자파리 총리도 “불편한 기간도 있었지만 양국의 유대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양국 간의 화해는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우의를 과시했다.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양국 국민 간 남아있는 반감에도 불구하고 양국 지도부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 화해와 협력을 결정했다. 아픈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우선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리적 정책변화로 볼 수 있다.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에너지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라크는 이란의 도움을 청해왔다. 이라크는 원유를 이란으로 보내고 그 대신에 휘발유·등유 등 석유제품을 받기위해 바스라-아바딘항구간 40km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급히 요청했다. 양국은 또 경제성이 뛰어난 남부 국경지대의 유전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양국 간 안보협력도 논의됐다. 이라크로선 치안안정이 급선무기 때문에 이란의 협력이 필요했다. 알자파리 총리는 “양국이 1600km의 국경을 맞댄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테러세력 침입차단을 이미 이란에 요청해왔다. 이란으로서도 반정부무장단체인 ‘무자히딘 칼크’의 이라크 내 활동을 막아달라고 이라크에 부탁했다.

중동권에서도 인구 면에서 최대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다른 아랍권은 경계하는 눈치다.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신생시아파 정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경제·군사대국인 페르시아민족의 이란이 종교적으로 동질성을 띠는 아랍권의 이라크와 뭉치면 막강한 정치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미 이라크 전쟁 직후 나오고 있었다.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등장한 이라크 시아파 주권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협력을 향후에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 시아파 내 주요 정파인 이라크이슬람혁명최고위원회(SCIRI)와 다와당 모두가 친이란 인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다와당 대표인 알-자파리에 이어 주권정부 총리직에 오른 누리 알-말리키도 이란에서 망명생활을 한 정치인이다. 때문에 아랍권에서 이란에 관한 최대 화두는 ‘시아파 초승달(Shia Crescent)’ 시나리오다. 2004년 12월 요르단의 압달라 국왕이 직접 언급까지 한 표현이다. 이라크가 시아파 국가로 변모하면서 이란의 정치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시각이다.³⁾ 현재 이슬람권 인구의 10%정도인 시아파가 중동의 전면에 나서면서다. 이라크 내 시아파 정권의 등장으로 이란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강화됐다. 문제는 이란의 영향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을 축으로 시아파 동맹이 서(西)로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남으로는 쿠웨이트·오만·예멘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수니파 국가들에는 적지 않은 시아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아파 초승달이 등장하게 되면 요르단, 사우디 등 상당수 국가들이 초승달모양의 시아파 권역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V. 선제공격 카드 만지작거리는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대국화, 영향력 확대, 핵개발 등으로 인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중동 내 국가는 단연 이스라엘이다. 미사일 공격을 가했던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은 사라졌지만 이란은 실제로 더 큰 위협으로 이스라엘에 다가오고 있다. 이미 반이스라엘 단체인 레바논 내 시아파 민병조직 헤즈볼라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양국관계는 수십 년 전부터 적대적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란은 이스라엘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특히 아흐마디네자드

3) Ray Takeyh, *Hidden Iran: Paradox and Power in the Islamic Republic*(New York:Holt Paperbacks, 2007), pp 20~23.

4) Manuchehr Sanadjian, "Nuclear Fetishism, the Fear of the Islamic Bomb and National Identity in Iran", *Social Identities* 14(1), pp 77~78.

대통령의 대(對)이스라엘 악담으로 양측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핵개발을 둘러싼 서방의 압력이 거세질수록 이란은 물귀신처럼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⁴⁾ 이란의 핵개발이 현재 중동 내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약2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에 대항한 이란의 핵무장 노력이 적지 않은 중동인들도 지지를 보이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독설은 2005년 10월부터 시작됐다. 10월 26일 이스라엘에서 자폭공격이 발생한 직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들의 의지 속에 일고 있는 새로운 물결이 이슬람 세계의 얼굴에 남아 있는 오점을 제거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렇게 말했다. 그는 이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과 서방권이 일제히 반발하자 “내 발언을 비난하는 것은 자유”라고 태연하게 반응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지지를 보였다. 4일 후인 30일 하메네이는 이란 관영 IRNA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틀림없이 시오니스트 체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종교지도부의 지지에 힘을 얻은 아흐마드네자드는 그해 12월14일에도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이 일종의 지어낸 얘기라고 말했다.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성된 이스라엘 건국운동에 국제사회의 동정여론을 확산시킨 촉매가 됐던 홀로코스트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6년 4월 14일에는 테헤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원 회의에서는 “시오니스트 정권은 한차례의 폭풍이 닥치면 제거될 썩고 마른 나무”라고 발언했다. 4월 24일에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유대인들은 원래 살았던 장소(유럽)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11일에는 인도네시아 방문 중 “이스라엘은 악에 기초한 지속될 수 없는 정권”이라며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948년 건국 이후 벌인 수차례의 전쟁에서 아랍권 국가들에 패배를 안긴 이스라엘은 비아랍 이슬람권 국가인 이란의 말 공세에 위축되는 기색 없이 맞서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2006년 4월 29일 발행된 독일 신문과의 회견에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을 “정신병자”로 규정했다. 그는 아흐마드네자드가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던 나치독일을 이끈 “히틀러처럼 말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올메르트 총리는 또 “이런 사람이 핵무기를 수중에 넣도록 놔두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사회가 견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란 태생인 모세 카차브 이스라엘 대통령도 대이란 설전에 가세했다. 그는 5월 2일 알자지라 방송 회견에서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차브 대통령은 또 “이란이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슬람권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설전 속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스라엘의 존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자세다.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안보를 최대 현안으로 고집하는 이스라엘 내부 지도부는 선제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아직 무기 생산까지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공격으로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발상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입장정리는 지난 해 초에 가시화됐다. 2005년 1월 24일 크네셋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인 모사드의 메이어 다간 국장은 “국제사회가 너무 늦기 전에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회 보고서에서 다간 국장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돌아설 수 없는 단계(point of no-return)”에 거의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을 자급자족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에 기초해서다. 의회보고를 받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부총리는 이날 이란을 이스라엘의 최대 안보위협국이라고 지목하면서 공격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총리는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에서 “외교·경제적인 압력으로 이란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누구라도 나서서 군사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설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에후드 바라크 국방장관은 2011년 11월 20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란에 대해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IAEA 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 시몬 페레스 대통령과 연이어 이란 공격설을 언급한 이후 또 다시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미국 등 서방국가의 자국 핵시설 공격을 가상한 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 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는 11월 21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수를 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선제공격 시 역사에서 사라질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란 대학생 수백 명이 16일 중부 이스파한에 있는 우라늄 변환 시설 주위에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한데 대해 이란인들은 만약 공격당하면 목숨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용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 시나리오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10여 년간의 전면적 경제제재로 무력화된 이라크와는 달리 이란의 군사력을

볼 때 미국이 전면전을 행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다. 또 이스라엘은 이미 1981년에도 이라크의 오시라크(Osirak) 핵 시설을 공중 폭격하여 후세인의 핵 무장화 시도를 무력화시킨 경험이 있다. 미국도 전면전 보다는 제한적인 공격으로 중동권내 반발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⁵⁾ 이를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 군관계자들은 2005년부터 이미 몇 차례의 실무자 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논의해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란으로의 최단 공격로인 이라크 영공 통과 시 미군과 항공통제방안도 토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또 2006년 4월말 이란 핵 프로그램 감시용 위성을 발사했다. 시베리아에서 이란 핵시설들을 감시하는 에로스(Eros) B 위성이었다. 지상에 있는 70cm의 물체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이 위성을 통해 핵시설 감시는 물론 대이란 공습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범아랍 일간 알-하야트는 당시 보도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공격설에 대해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공격이 발생할 경우 어떤 세력이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해왔다. 아흐마드네자드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란 군은 이제 강력한 군대로 컸다”면서 “어떠한 침략자라도 손목을 잘라버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치욕의 표징을 새길 것이다”고 공언했다. 또한 이라크가 했던 것처럼 전쟁발발 시 이스라엘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2011년 5월 2일 이란혁명수비대의 모하마드 이브라힘 데흐가니 장군은 “미국이 어떤 도발을 할 경우 우리의 첫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V. 분열된 아랍권의 대이란 시각

아랍권은 이란의 현재 움직임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란과 아랍권의 불편한 관계는 오래된 것이다. 7세기 초 이슬람이 발현하고 아랍 이슬람제국이 가장 먼저 타민족과 벌인 가장 큰 전쟁은 637년 카디시야 전투다. 페르시아제국과의 한 판 승부였다. 이 전투에서 이슬람군은 대승을 거두고 페르시아에 이슬람을 전파했다. 하지만 집권 수니파 세력에 반발해 이라크를 거점으로 시아파가 발생하면서 타민족인 페르시아는 주류가 아닌 시아 이슬람을 신속히 받아들인다. 압바시아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가 몽골의 침입으로 몰락하고 후에 이슬람 제국의 수도가 터키 이스탄불로 옮겨지면서 페르시아는 16세기 사파비드 왕조가 시아 이슬람을

5) Alireza Jafarzadeh, *The Iran Threat: President Ahmadinejad and the Coming Nuclear Crisis*(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국교로 선언한 이후 독자적인 시아 이슬람국가를 유지해왔다. 중동권이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맞이한 이후에는 아랍권과 이란 간 큰 불화는 없었다. 이란에 등장한 친서방 샤 왕정이 온건한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랍권에 등장한 독재공화정권이나 왕정들도 이란에 특별히 반감을 표현하지 않았다. 특히 걸프지역의 친미 왕정들은 당시 미국의 중동 내 거점으로 부상한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중동의 정치 강국 이집트도 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이란에서 도피한 팔레비 국왕에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현재도 팔레비 국왕의 묘는 카이로의 리파이 모스크 내에 위치했다.

그러나 1979년 발생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아랍권에도 큰 충격이었다. 이슬람을 이념으로 이용한 민중혁명으로 독재 왕정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집트를 비롯한 상당수 아랍 국가들도 이슬람 과격세력의 준동으로 정치적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은 아랍권 이슬람운동단체들에게 투쟁을 위한 ‘모델과 목표’를 제시했다. 1980년에는 이 같은 목표를 시행하려는 과격세력의 공격으로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도 암살당했다. 같은 해 이라크의 선제공격으로 이란-이라크 전쟁도 발발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념 수출’을 두려워한 아랍권은 전폭적으로 이라크를 지원했다. 걸프 아랍왕정들은 물자는 물론 엄청난 전쟁비용을 이라크에 제공하기도 했다. 전쟁을 시작으로 대부분 아랍 국가들은 이란과의 외교관계도 단절했다. 이 같은 반감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시리아, 수단 등 강경국가들을 제외한 대다수 아랍 국가들은 아직도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2011년 무바라크 정권의 몰락으로 등장한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 정권만이 최근 이란과의 관계정상화라는 포괄적인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중동인들의 이란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이란의 군사대국화와 핵개발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걸프지역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이란과 인접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멀리 떨어진 이집트, 시리아, 수단 등 국가들에서는 이란 핵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 속에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이란에 대한 중동인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국가에서 상당수 과격세력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란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정권을 비난하기도 한다.⁶⁾

6) Nihat Ali Ozcan and Ozgur Ozdamar, "Iran's Nuclear Program and the Future of US-Iranian Relations," *Middle East Policy* 16(1) (Spring 2009), pp 122~126.

서구에 의해 중동과 이슬람권이 테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전반적인 군사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이 2010년 말 실시한 여론조사가 이 같은 여론 변화를 반영한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예”라고 답한 14%의 응답자 대부분은 걸프지역 출신이라는 해설도 나왔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10%였다. 범아랍 시사주간지 알-마사히드가 2011년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4%의 응답자가 이란도 핵무기를 가져야한다고 답했다. 물론 나머지 66%는 중동이 비핵화지대가 되어야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역사적인 반감과 외교관계도 단절될 정도로 현재의 감정도 좋지 않은 이란에 대해 30%가 넘는 응답자가 핵개발을 지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10여년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라크 전쟁이후 극에 달하고 있는 중동권의 반미·반서구 감정이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이용하려는 이란의 움직임도 바쁘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독설과 비난도 이를 의식한 것이다. 이란은 또 서방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자, 중동에서는 처음 5000만 불이라는 대팔레스타인 지원금을 내놓았다. 이란은 또 중동 내 과격단체들을 규합해 ‘반미 이슬람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현 집권세력인 무장단체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외에도 여러 나라의 이슬람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고 있다. 이란은 특히 시리아와의 연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레바논 하리리 총리 암살사건 개입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시리아에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란을 가장 먼저 찾은 외국 정상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였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첫 해외 국빈방문지도 역시 시리아였다.

현재 아랍권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 또 다른 중동 내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유가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걸프지역 산유국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란과 서방국 간 중재역할도 나서고 있다. 걸프협력기구(GCC) 외무장관들은 여러 차례 모여 이란 핵개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2011년 GCC 정상회담에서는 “중동 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들 걸프국들의 중재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GCC 회원국들이 모두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중동 각국 내 반서방 단체들과 여론을 이용해 서방과의 핵 대치에서 지지기반을 구축한다는 계산이다. 중동권내 독재정권과 국민간의 괴리현상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전술이다. 이라크마저 무너진 현 상황에서 “이라크마저 서방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동인들에 뇌리에 점차 새겨지고 있다.

Ⅵ.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미-이란의 ‘치킨게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은 2011년 12월 31일을 전후로 정점에 이르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면서다. 모든 유전이 국영인 이란과의 원유거래는 중앙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조치다. 이에 대해 이란은 2012년 새해 첫 날 핵 연료봉 자체 생산 사실을 발표하고 중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어 2일에도 장거리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장거리 지대함(地對艦) 미사일인 카데르(Kader)와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인 누르(Nour)였다. 핵 연료봉 자체생산을 발표해 핵탄두 제조에 근접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핵탄두 운반능력까지 보여준 것이다. 이란 해군은 또 이날 열흘간의 기동훈련을 마치면서 호르무즈 해협봉쇄를 위한 전술 훈련을 감행했다. 이는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서방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강경하다. 이란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미국에서는 이란에 대한 공격설이 제기됐다. 공화당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은 2012년 1월 1일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이란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군사행동을 취할 것임에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1월 8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행동을 취해 해협을 다시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을 다시 배치하고 있다. 더불어 영국도 최신형 구축함 HMS 데어링호를 기존에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다른 자국 함대에 합류시키는 것을 결정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이란은 현재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킨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치킨게임이란 두 사람이 서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다. 따라서 당장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란의 해군 전력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무력충돌로 연결될 공산이 큰 해협 봉쇄를 이란이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미국으로서도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에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군사작전을 선불리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군사행동으로 석유수급에까지 문제가 생기면 세계 경제는 한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분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측에서 확실한 명분을 갖게 될 경우 언제라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요르단의 전략연구소 무스타파 하마르네 소장은 2012년 1월 10일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충돌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사적 행동에 대한 이념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행동을 위한 명분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마르네 소장은 또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현실인식의 오류와 오산(miscalculation)에 빠질 경우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사력 우위를 과신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종교적 그리고 민족적 신념이 확고한 이란이 맞서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양측의 충돌 위기는 환경변화 혹은 촉발제의 등장에 따라 언제라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란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란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받고 있다. 석유금수조치인 국방수권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질적으로 적용되면서 이란은 더욱 강경하게 서방과 맞서거나 타협하거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란 경제의 기반인 석유수출에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즉각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의 어떤 후보도 이란에 대해 사태 발생 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데니스 로스 전 백악관 중동담당 특별보좌관은 2012년 1월 9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에 의한 이란 제재에 실패할 경우 의심 없이 군사력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에서 유대인 로비 파워를 의식해서라도 명분이 생기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이란 정권과 핵 시설을 목표로 이미 이스라엘은 2011년 11월 여러 차례 공격설을 제기해 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에후드 바라크 국방장관, 시몬 페레즈 대통령 등 이스라엘 지도부가 당시 한 목소리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통해 핵시설이나 핵 관련 전문가 혹은 정치적 책임자에 대한 공습이 될 것이다. 이라크에서와 같은

전면 지상전으로 확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란은 과거 2003년 전쟁 당시 이라크 혹은 2011년 리비아와는 크게 다르다. 이라크와 리비아는 평평한 사막지역으로 군사작전이 용이했다. 은폐 및 엄폐 가능한 지형이 적어 공군력을 앞세운 다국적군이 손쉬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란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프간에서 다국적군이 고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란은 더불어 중동 내 주요 군사대국 중 하나다. 터키와 이스라엘에 이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정규군 40만 그리고 공화국수비대 12만과 더불어 100만 이상의 예비군을 운용하고 있다. 전투기와 잠수함을 조립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012년 1월 7일 이집트의 알-아크바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군사력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분명 차이가 난다”며 “이란의 군사력이 향상돼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 서방 그리고 특히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군사력이 서방과 대적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면전을 통해 이란을 제압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Ⅶ. 맺음말

현재 이란과 서방의 극한 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 왜 현지 점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의 대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11월 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유엔 기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11월 8일 발표된 IAEA의 이란 핵 개발 관련 보고서는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골자로 한다. 1) 이란은 핵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2) 이란의 여러 핵실험 중 일부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핵무기에 사용된 고성능 폭약 실험, 기폭장치 개발도 의혹이 있다. 4)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샤하브3’에 핵탄두 탑재 가능한 기술개발 의혹 있다. 5) 핵무기 사용 목적으로 컴퓨터상의 부품 성능 시험 실시 가능성 크다. 그동안 IAE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관해 조심스런 입장만을 피력해 왔다. 내부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강한 의심을 가졌지만 공식적으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지켜 왔다. 2009년 11월까지 사무총장을 지낸 이집트 출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위협은 과대포장된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관해 IAEA가 심증뿐 아니라 물증

까지도 일부 확보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IAEA는 “광범위한 첩보를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IAEA 보고서에 대한 이견도 있다. 이란은 핵탄두 관련 모의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력이 핵무기를 만들 수준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북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IAEA가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뉴욕타임스는 “실험이 덜 조화로운 방식으로 실시됐다는 데 IAEA 조사단이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BBC 방송도 “이란이 핵무기를 학습 중”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외신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지만 IAEA는 보고서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란은 또 단 한 차례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없다. 최고 종교지도자와 대통령 모두 자국 내 제조업 투자를 위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시종일관 언급해 왔다. 알리 아스카르 솔타니 주IAEA 이란 대사는 지난 해 11월 10일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AEA의 보고서는 모두 가능성과 의혹을 언급하는 것”이며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설과 바로 이은 IAEA 보고서는 현재의 중동의 새로운 정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튀니지와 이집트에 이어 리비아와 예멘 정권도 붕괴한 상태다. 여기에 시리아 독재정권도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아랍권 시민혁명의 가장 큰 중동 내 파급효과는 이란의 부상이다. 이란을 견제하던 친미 이집트 정권이 붕괴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내부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정치에 몰두하면서 이란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미 이란을 축으로 하는 ‘시아파초승달’ 즉, 시아파 정치블록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서방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집트 정권 붕괴 후 이란은 자국 군함을 1979년 이후 최초로 수에즈운하를 통과시켜, 지중해에서 시리아와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결국 이란의 영향력 강화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최근 이란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 카드를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란의 영향력 강화는 미국과 서방이 추구하는 대중동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두 지도자 모두 당분간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움직임에 따라 군사적 옵션이 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은 결국 협상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전쟁은 양측에 모두 큰 부담이다. 전비 및 병력 손실 등 군사적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라크 및 아프간의 정황 악화, 걸프만 및 호르무즈 안전항행 제한, 이란 내부 개혁세력에 대한 탄압 심화, 세계 경제의 악화 등 복잡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결국 서방의 향후 대이란 움직임은 ‘외교적 노력 - 경제 제재 - 군사적 압박’ 세 가지 옵션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고전적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극단적으로는 제한적 정밀타격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 군사적 옵션이 이란 핵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란 핵문제는 장기화할 것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미국과 유럽은 이란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06년 12월부터 이미 4차례나 수위를 높여가며 대이란 경제제재 결의안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참여하는 미국주도 독자적 이란제재에도 중국, 러시아 등이 동참하지 않으면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차원의 고강도 제재와 군사적 조치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중국은 ‘어부지리’로 한국, 일본, 유럽이 철수한 이란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란 사태에 대해 우리가 차분하고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가져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우리의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이란 석유가 9.6%를 차지한다는 수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란은 우리의 대중동 최대 교역국가다. 두바이로 향하는 상당량의 수출품이 궁극적으로는 이란으로 향한다. 여기에 이란은 새로운 자원으로 보고로 알려진 카스피해 남부를 접하고 있는 국가다. 이런 시장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예외 대상국가 지위가 유지되도록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이란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다. 핵 개발을 통해 역내 패권국가로 부상하려는 이란에 대응하여 주변의 걸프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적 안보 및 세력균형 유지를 위해 서방과의 군사적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월 말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신예 F-15SA 전투기 84대의 수입과 기보유한 F-15 70대의 성능 개선을 위해 300억 달러의 계약을 미국과 체결했다. UAE도 35억 달러 규모의 첨단 미사일 요격시스템 고고도방어체계(THAAD)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라크도 F-16 전투기, M1A1 탱크, 야포 등 공격형 무기를 포함함 1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지역 방산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도 최근 급변하는 중동의 군사적 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 부상하는 방산 수출시장을 명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핵무장과 핵정책의 변화: 핵무기 포기 거부 사례를 통해 본 북한 핵문제¹⁾

황지환 (서울시립대)

I. 문제제기

1. 핵무기 포기 거부의 모델 제시

이 글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포기를 거부한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현재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모델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적·정책적 노력은 국내외 학계를 막론하고 북한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그동안 2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만큼이나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와 접근법이 제시되었지만, 기존의 분석과 설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는 북한 문제를 세계정치나 핵확산의 장(arena)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북한을 독특하고 특수한 행위자로 인식하여 북한 그 자체만을 두고 접근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책 자체가 일관적이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사후적 모습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핵문제라는 이슈의 중요성과 관심의 정도에 비해 북한의 행동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적 모델 작업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핵위기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북한의 외교정책에 관한 일관된 모델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핵위기의 전개과정에 따라 당면한 상황에 대한 추측성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그 해법 역시 엄밀한 모델에 의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제시가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중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핵무기 포기를 거부한 국가들이 어떠한 이유로

1) 이 글은 저자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발표 형태의 미완성 원고입니다. 저자의 동의 없이 인용을 절대로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핵무기 포기를 거부하게 되는지에 대한 일반론적인 원인 모델 분석이 없었다.

둘째, 북한을 독특한 행위자로 보는 경향은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비슷한 경험을 했던 국가들의 경험을 북한 문제에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이 어느 정도 독특한 행위자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핵확산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국가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몇 가지 비슷한 경로로 설명될 수 있다. (Sagan 1994/95).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본격화한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 거부 사례도 비슷한 몇 가지 원인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핵무기 포기 모델에 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존재했지만, 핵무기 포기 거부 사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합법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어서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력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핵무기 포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는 2013년 2월 현재 3차 핵실험까지 진행하여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이 된 북한 사례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동안 비확산 연구자들과 정책분석가들은 북한의 핵포기 방안에 몰두하여 리비아 모델이나, 우크라이나 모델, 남아공 모델 등 핵포기 사례와 모델에 관한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황지환 2012). 하지만 북한이 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른 포기거부 사례와 비교하여 논의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모델, 인도 모델, 파키스탄 모델을 중심으로 기존 사례를 재해석하고 핵무기 포기거부의 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다. 특히 비확산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이 이 세 국가의 핵무기 불포기의 과정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북핵 위기 그 자체의 과거 전개과정과 북한의 행동방식뿐 아니라 미국이 과거에 경험했던 다른 사례들의 교훈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포기 거부 사례의 행동방식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노력이나 그 사례들을 북한 문제에 적용하는데 대한 분석의 한계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셋째, 일부 몇몇 선행연구는 제한적이거나 이전의 핵 포기 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사례가 북한 문제에 가지는 의미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각 연구는 개별적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에 머물고 있다. (제성호 2012, 김준석 2008). 이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거부 원인을 기존의 논의대로 안보불안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이의 비교·연구하여 핵무기 포기거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기존의 여러 사례를 비교·분석하면 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몇 가지 원인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국가의 사례에서는 존재했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변수들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과 조건들이 여러 사례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변화(variation)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핵무기 포기 거부 의 원인에 대한 몇 가지 가설(hypothesis)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핵포기 거부의 이론적 모델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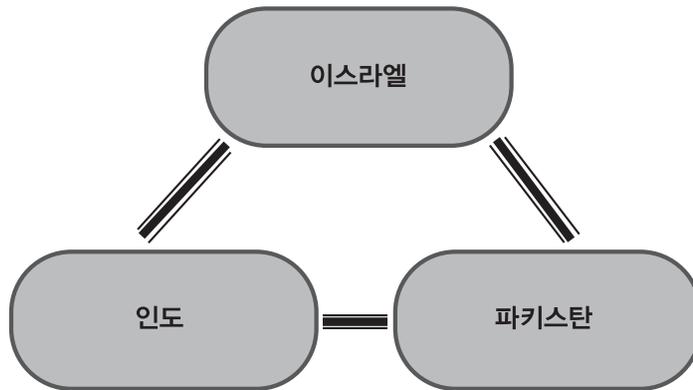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은 북한 핵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모델을 제시하여 커다란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는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접근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핵무기를 갖고자 했던 국가들의 행동방식과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지만, 왜 어떤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포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하여 모델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북한 핵 문제가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했던 이유는 북한 문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서도 기인하지만, 다른 포기 국가 사례에서는 존재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핵포기 거부국가들의 조건과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원인을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중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가설들과 모델을 통해 북한 문제가 기존에 걸어온 길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여, 새로운 모델은 결국 한반도 주변의 국내외적 상황변화와 방향에 대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상당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핵무기 포기 거부 사례의 비교 연구: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핵무기 포기거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핵무기 포기 거부 국가들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포기 거부의 가설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NPT상의 합법적인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제외하고, NPT 비가입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를 통해 핵무기 포기거부의 가설설정을 시도한다. 이 세 나라 이외에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다양하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국제

사회의 압력 속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였다. 반면, 북한은 2005년 2월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제4의 핵무기 포기 거부국이 되었다. 따라서 이 세 국가의 사례는 북한의 핵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핵무기 포기거부 모델 개발을 위한 변수와 가설설정 등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위해 세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핵무기 포기거부의 세 사례



1. 이스라엘의 핵개발과 핵무기 포기거부

1970년대 중반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사타트(Anwar Sadat) 대통령이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아라파트(Yasser Arafat) 의장은 이스라엘이 3~5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이스라엘이 10~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제성호 2012: 160).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그동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C(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은 주로 안보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Sagan 1996/97). 2차대전 이후 겨우 국가설립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중동의 이슬람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국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영토나 인구 규모가 다른 중동국가들에 비해 작으면서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대칭적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무기의 보유 욕구는 독립

초기부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례와는 달리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는 서방국가들이 사실상 많은 도움을 주었다. 1950년대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였고, 영국 역시 비밀리에 이스라엘에 핵심적인 핵물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선희 2006: 89).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 핵 프로그램에 이스라엘을 참여시키고 연구용 원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케네디 행정부 시기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기는 했지만, 연구용 원자로 사용될 우라늄을 공급하여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비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핵 모호성(nuclear ambiguity)을 유지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지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직접적으로 핵과 관련된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NPT의 규약에 통제를 받거나 IAEA의 감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NPT 출범 당시 지지를 선언하고 유엔총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으나 현재까지 NPT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에 의한 핵시설 사찰도 받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대 이스라엘 제재는 거의 없었다. (허남성 2003: 205-206). 이스라엘은 국제 비확산체제의 통제 밖에 있으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국가와는 달리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도전을 받지 않았다.

2. 인도의 핵개발과 핵무기 포기거부

1950년대 인도 수상 네루(Jawaharlal Nehru)는 인도의 전통적인 국제정치관에 따라 다소 이상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네루는 핵무기 개발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핵무기 폐기 운동에도 앞장섰었다. 네루 수상은 1954년 유엔 연설에서 보편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체결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도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사실이다(김준석 2008: 129-130). 하지만 네루 정부는 사실상 평화적인 용도의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은 반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높은 과학기술 수준이 신생독립국 인도의 국가적 위신을 높여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시 인도의 경제수준에서는 우리가 따르는 원자력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네루 정부하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 인도의 핵무기 개발은 바로 네루 시기에 쌓여진 기술적 기초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흔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무장은 양국 간 갈등과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인도의 경우는 파키스탄뿐 아니라 중국의 핵보유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했다. 1960년대 초반 인도와 중국사이에 국경분쟁이 발생했는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히말라야 국경지대를 침공하여 약 14,000 평방마일에 해당하는 인도영토를 무력점령했지만, 인도군은 변변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퇴각했다. 또한 국경분쟁이 발생한 지 정확히 2년 뒤인 1964년 10월 중국이 핵 실험에 성공하여 인도내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사실 인도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던 바바(Homi Bhaba)는 이미 1958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역설하고 있었다.

결국 1964년 12월 사스트리(La Bahadur Shastri) 인도 총리는 핵무기 개발의지를 천명하였다. 인도 국내에서 경제적 비용과 평화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으나, 1965년 9월 파키스탄과의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인도의 안보상황은 또 한번 위기에 휩싸이게 되어 핵무기 보유 욕구를 강화시켰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소련이 중재를 시도하였지만, 중국이 파키스탄에 외교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군사적 지원까지 경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디 정부는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당시 간디 수상이 현실주의적인 고려에 기초한 안보정책을 추진하면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급진전하였는데, 인도는 1970년대 초반 핵 무장의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인도의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은 국내정치적인 고려에서도 촉진되었다.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로 인해 인도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간디 정부는 국내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었으며,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1974년 핵 실험을 실행하기에 이른다. 또한 1998년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BJP의 집권과 함께 핵 실험이 실행되었다는 점 등이 국내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특히 세이건(Sagan, 1996/97: 67-68)에 따르면, 1974년 인도의 핵 실험을 전형적인 국내정치 모델의 사례로 해석된다. 세이건은 핵 실험에 대한 인디라 간디 수상의 결정이 군부와 외무성의 고위 관리들을 배제한 채 수상의 개인 보좌관들과 과학 기술자들의 조언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JP의 등장이 1998년의 핵 실험 재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그 이전 정부들 역시 핵 실험 옵션을 지속적으로 고려해 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인도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특히 미국은 IAEA의 승인없이 핵 원료의 재처리와 농축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는 국가에 특정 종류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인도가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좁혔고, 결국 인도는 1974년 이후 대외적으로 '핵 자제(nuclear restraint)'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Ollapally 2001: 931). 하지만,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인도의 안보환경을 상당부분 변화시키게 된다. 1970년대 이후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소련의 붕괴는 인도의 입장에서는 캐슈미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으며, 첨단무기를 이전해 줄 수 있는 파트너의 상실을 의미했다. 또한 여전히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평형추 역할을 하던 동맹국의 상실을 의미했다 (김준석 2008: 134-136).

3. 파키스탄의 핵개발과 핵무기 포기거부

인도의 핵실험에 이어 파키스탄 역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1987년에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칸(A. Q. Kahn) 박사가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키스탄이 전력을 다해 핵무기 보유를 위해 경주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인도의 복합적인 요인과는 달리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인도와의 캐슈미어 지역 영유권 분쟁 및 인도-파키스탄의 군사적 충돌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된다. 캐슈미어 분쟁에서의 현상의 변경에 대한 파키스탄의 욕구가 직접적으로 핵무기의 개발을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파키스탄의 핵 무장은 기본적으로 인도의 핵 무장에 따른 대응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파키스탄은 독립 이후 약 20여 년 동안 핵무기 개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민간정부나 군사정부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또한, 독립 이후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는 파키스탄 군부 지도자들로 하여금 핵 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반테러전쟁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파키스탄이 가지는 입지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이래 파키스탄은 미국의 봉쇄정책에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파키스탄은 중국 및 소련에 가까운 지정학적 요인과 더불어 군부의 강력한 반공주의 노선으로 인해 냉전기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비동맹(non-alignment) 노선을 고수한 인도와는 달리 파키스탄의 안보상황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절실하게 필요하게 했고 이러한 미국-파키스탄 관계가 유지되는 한 현상변경의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파키스탄은 중대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우선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발발이다. 캐슈미어를 둘러싼 인도와의 전쟁으로 파키스탄의 국방능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고, 국내적으로도 인도와의 협상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정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한편, 인도와의 전쟁의 외중에 미국과의 긴밀했던 동맹관계의 이완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함에 따라 파키스탄의 안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미국과의 동맹 약화는 인도-파키스탄의 전쟁뿐만 아니라 196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데탕트의 흐름에서도 촉진되었다. 인도와의 관계와는 달리 세계냉전의 데탕트는 파키스탄의 안보환경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과는 더욱 컸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당시 인도와 국경분쟁으로 대립하던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보다 획기적인 안보 강화 정책을 모색하게 되며, 핵무기 개발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4년 인도의 핵 실험 소식은 파키스탄 내 핵무장 반대여론을 잠재웠고, 부토 정부는 인도의 핵 실험 한 달 뒤인 1974년 6월 14일 핵무기의 개발을 결의하게 된다 (Ahmed, 1999: 183).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이나 인도와는 달리 미국의 강력한 압력과 제재 위협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인도의 핵실험 이후 국제비확산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도의 핵실험 이후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계획이 미국에 의해 좌절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핵보유가 파키스탄의 핵보유 욕구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 파키스탄 제재는 점점 강화되었다. 미국은 프랑스에 압력을 행사하여 파키스탄에 대한 우라늄의 농축을 위한 핵 재처리 시설의 판매를 포기하게 하였고,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파키스탄을 직접 방문하여 부토 수상에게 핵 무장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압력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했듯이 소련의 침공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행사해 오던 각종 압력을 사실상 철회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1980년대 동안 파키스탄의 핵개발 노력은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위협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함께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는 다시 감소하게 되었고, 미국은 다시금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인도와의 갈등이 재개되면서 파키스탄의 핵보유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1998년 5월 인도가 핵실험을 감행하자, 파키스탄 역시 이에 맞서 핵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으나,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반테러전쟁을 벌이면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은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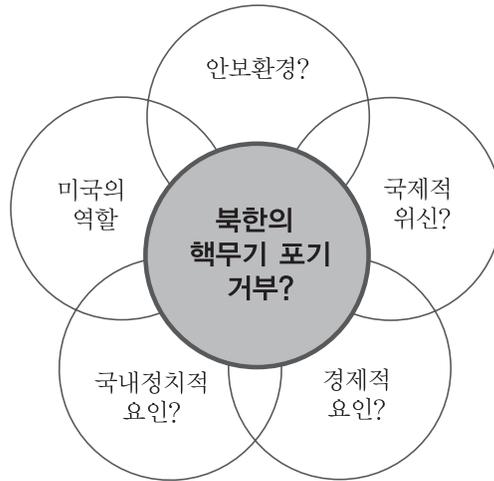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국내정치적 요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포기를 거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Khan, 2006: 504-505). 부토와 칸 박사 같은 정치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은 인도의 핵 무장 가능성이 제기되기 훨씬 전부터 파키스탄의 핵 무장을 역설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에 유리한 국제정치적 상황이 도래했을 때 오랫동안 준비된 아이디어들과 계획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1958년 이래 군부가 파키스탄의 국내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 역시 파키스탄의 핵 무장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지닌다(김준석 2008: 146-147). 파키스탄 군부는 인도와의 군비경쟁에서 파키스탄이 열세에 처하는 상황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무릅쓰고서라도 핵 무장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국제적인 위신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Sagan 1996/97). 파키스탄이 프랑스, 중국, 인도처럼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대인도 관계에서 위신은 파키스탄의 대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Ahmed, 1999: 195).

III. 핵포기 거부 모델의 가설설정 및 북한 핵문제 적용²⁾

이러한 사례연구는 핵무기 포기거부의 원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변수와 이에 기초한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국가들의 안보환경이나, 국제적 위신, 국내정치적 요인, 혹은 경제적 요인 및 미국의 역할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사례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핵무기 포기거부의 결정에 이르게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설명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비교연구를 통한 가설 설정과 모델의 제시 는 어떠한 원인 때문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과 재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거부하는지를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가능할 것인지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완성되지 못한 부분으로 기본적인 가설만 제시한다.

〈그림2〉 핵무기 포기거부모델과 북한 핵문제



특정한 핵무기 포기거부 가설이 모든 국가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의 변화를 통해 핵무기 포기 거부 가설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 어떠한 조건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핵무기의 포기거부를 이끄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핵무기 포기거부에 이르게 하는 조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북한 핵문제에 적용하여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후 진행할 북한과 관련한 핵무기 포기 거부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대외안보환경의 변화는 핵포기 거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외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2.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거부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 가령 미국의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혹은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의 지속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거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북한이 강조하는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으로서의 국제적 위신 및 자존심은 핵무기 포기 거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4. 북한이 핵문제를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핵무기 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정권의 성격변화가 없는 이상 북한의 핵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5.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경우 핵무기 포기 거부에 대한 유혹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석,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윤영관, 신성호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서울: 한울, 2008).
- 박기덕, 이상현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세종연구소, 2008).
- 백선호,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사: 생존을 위한 선택, 우리들에 대한 시사점,” 『밀리터리 리뷰』 제36호 (2006).
- 윤영관, 신성호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서울: 한울, 2008).
- 이병욱, “미국-인도 원자력협력과 국제비확산체제,” 박기덕, 이상현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세종연구소, 2008).
- 조갑제, “이스라엘 핵개발 비화: 수에즈 운하 작전에 동참한 대가로 프랑스가 핵개발 지원,” 『월간조선』 2월호 (2011).
- 허남성, “핵 확산의 동기론적 배경 연구 - 이스라엘의 사례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함의,” 『교수 논총』 국방대학교, 제32집 (2003).
- 황지환,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0집 3호 (2012).
- Samina, Ahmed “Pakistan’s Nuclear Weapons Program: Turning Points and Nuclear Choices.” *International Security* 23(4) (1999).
- Robert T., Batcher “The Consequences of an Indo-Pakistan Nuclear Wa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6. (2004).
- Leonard, Beaton and Maddox, John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NewYork: Praeger, 1962).
- Syam, Bhatia *Nuclear Rivals in the Middle East*. (NY: Routledge, 1988).
- Chaim, Braun and Christopher F. Chyba, “Proliferation Rings: New Challenges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nternational Security* 29(2) (2004).

- William J., Broad and David E. Sanger, “The Bomb Merchant: Chasing Dr. Khan”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6, (2004).
- Cohen, Avner, *Israel and the bomb*(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 John M., Deutch “The New Nuclear Threat” *Foreign Affairs*, (Fall 1992).
- Lowell, Dittmer “South Asia’s Security Dilemma” *Asian Survey* 41(6) (2001).
- Benjamin, Frankel “The Brooding Shadow: Systemic Incentives and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Security Studies* 2(3/4) (1993).
- Sumit, Ganguly “India’s Pathway to Pokhran II: The Prospects and Sources of New Delhi’s Nuclear Weapons Program” *International Security* 23(4) (1999).
- Sumit, Ganguly and Kent L. Biringner, “Nuclear Crisis Stability in South Asia” *Asian Survey* 41(6) (2001).
-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Cambridge: MIT Press, 2005).
- Greenwood, Ted, Harold A. Feiveson, and Theodore Taylor, *Nuclear Proliferation: Motivations, Capabilities, and Strategies for Control*. (New York: McGraw–Hill, 1977).
- Timothy D., Hoyrt “Pakistani Nuclear Doctrine and the Dangers of Strategic Myopia” *Asian Survey* 41(6) (2001).
- Jihwan, Hwang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U.S. Foreign Policy: Should the U.S. Resolve the North Korean Security Dilemma?” *Pacific Focus* 18(2) (2003).
- Jihwan, Hwa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RI Review* 13(1) (2008).
- Jacques E. C., Hymans *The Psychology of Nuclear Proliferation: Identity, Emotions, and Foreign Polic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S. Paul., Kapur “India and Pakistan’s Unstable Peace: Why Nuclear South Asia Is No Like Cold War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30(2) (2005).
- S. Paul., Kapur *Dangerous Deterrent: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Conflict in South Asia*(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 David J., Karl “Lessons for Proliferation Scholarship in South Asia: The Buddha Smiles Again” *Asian Survey* 41(6) (2001).

- Khan Feroz Hassan “Nuclear Proliferation Motivations: Lessons from Pakistan” *Nonproliferation Review* 13(3) (2006).
- Yuen Foong, Khong *Analogies at War: Korea, Munich, Dien Bien Phu, and The Vietnam Decisions of 1965*(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Gary, King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Stephen M., Meyer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Deepa M., Ollapally “Mixed Motives in India’s Search for Nuclear Status,” *Asian Survey* 41(6) (2001).
- T. V., Paul “Why has the Indian–Pakistan Rivalry Been so Enduring?: Power Asymmetry and an Intractable Conflict” *Security Studies* 15(4) (2006).
- George, Perkovich *India’s Nuclear Bomb: The Impact on Global Proliferation*(Berkeley and Los Angele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Mitchell, Reiss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5).
- Scott D., Sagan “The Perils of Proliferation: Organization Theory, Deterrence Theory,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Security* 18(4) (1994).
-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21(3) (1996/97).
-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New York &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3).
- Jaswant, Singh “Against Nuclear Apartheid” *Foreign Affairs* 77(5) (1998).
- Etel, Solingen *Nuclear Logics: Contrasting Paths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Yaacov, Vertzberger “Foreign Policy Decision–Makers as Practical Intuitive Historians: Applied History and its Shortcoming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0(2) (1986).
- Kenneth N., Waltz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3) (1990).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지역 안보”를 읽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보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표문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능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논쟁사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목하여, 목차에 따라 토론과 질문을 제기하고자 함.

I. 서론

핵확산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소개한 것과 관련, 왈츠의 주장은 일본과 같은 강대국의 핵무기 보유와 같은 핵확산을 상징한 것으로 북한, 이란 등과 같은 불량국가들로의 핵확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핵확산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견해는 왈츠와 상반된 것이라기보다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Ⅱ. 북한 핵개발과 전쟁양상의 변화: 전략, 능력, 사용 가능성

1. 북한의 전략적 노선 변화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 악화 이후 전략적 노선이 변화된 것으로 보는 판단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또한, 지난 4월 18일 북한 국방위원회와 조평통이 대화하려거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본 발표문에서 정의한 대로 “NPT체제 하에서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부합됨.

다만, 북한의 전략적 노선 변화를 “정권의 생존전략 및 체제 안정화 전략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미 북한의 핵개발 초기부터 갖고 있던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보유국화 의도가 한국과 일본을 핵 인질화하여 미국과의 정치·군사·경제 문제를 타결하여 정권의 생존권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설명이 부족함.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국 전략을 “대남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북 주도하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으로 평가한 부분, “북핵은~ 통일 대업 완수를 가능케 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현재의 남북한 국력(군사력 포함)이나 동북아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음. 특히 그 근거로 ‘김정일 유서’를 제시한 점이 더욱 설득력을 떨어뜨림. (*“‘김정일 44개 유서’ 신빙성 논란: 지난해 탈북자 책에서 공개 ... 정보당국, 신빙성 없다. '경계령', 『내일신문』 2013년 1월 31일 참조)

소소한 것일 수 있으나, ‘2.29 합의’를 어느 일방의 파기라고 보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음. 2월 26일 미·북 대화 이후 곧바로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고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 따로따로 발표했으며,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미 백악관 관리들이 비밀리에 평양에 들어가 미·북 접촉을 했고, 미 대선 뒤에 북측이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비난했던 것으로 볼 때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함.

2. 북한의 현존 핵능력

미 DIA의 북한 핵미사일 보유 평가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에 대해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발표자의 견해는 올바른 것으로 생각함. 이는 이미 <38North>

등에서도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만 발표자가 그 근거로서 “ICBM급 탄도미사일 대 중량의 trade-off”를 제시한 점에는 의문이 듦. 사거리를 줄인다고 그대로 중량을 늘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미사일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임.

북한의 핵물질 확보 추정량과 관련, 발표자는 북한의 보유 Pu총량을 40~43kg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미 북한이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2008년 6월 신고한 Pu양이 38kg(여기에는 당시 첫 핵실험 때 사용한 Pu양 및 Loss분 포함)이라는 점에서 다소 많게 추정한 것으로 생각됨. 그렇다면 필자는 당시 북한의 신고량이 솔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궁금함.

북한의 핵탄두를 IL-28과 같은 구식 폭격기로 운반해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한 북한이 GPS 기술을 활용하여 수 m정도의 CEP를 확보코자 한다고 하지만, GPS는 미 국방성이 관할하고 있어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가능성이 낮다고는 생각되나, 그보다는 중국의 베이두(北斗) 위치관측 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함.

3.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고찰

토론자의 입장도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하게 답할 수 없다”는 평가에 동의함.

4.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분석

북한의 평기 핵도발 유형으로 핵테러, 핵위협, 핵확산, 핵실험을 들고 있는바,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하는 이상, 북한의 핵실험을 ‘북한의 평시 핵도발 유형’으로 볼 수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냉각시설 단전만으로도 엄청난 핵 재앙의 초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물질)이 아닌 남한의 원자로 등 핵시설에 대한 재래식 공격 가능성은 ‘북한의 핵도발’로 평가할 수 있을까?

〈표 1〉 북한의 핵공격 유형별 평가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것이지만,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개인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이러한 발표자의 평가 시도는 핵무기를 ‘정치적 무기’가 아닌 ‘군사적 무기’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임.

Ⅲ. 북한의 핵무장이 갖는 안보적 함의

1. 한반도 차원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이 됨에 따라 한반도 분단구조의 고착화 불가피하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대해 이견을 달고 싶음. 이러한 견해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갖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국' 지위는 '조기붕괴론'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이를 '분단구조 고착화'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는데도 이미 분단이 6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분단구조의 고착화에는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런 점에서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화로 인해 대북 유화정책 구사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동북아 차원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이 한미일 3각 협력구도의 유지 필요성을 부각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의문이 듦. 이는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고 군사 안보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임, 그보다는 북한의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대립하는 것으로 비치는 한미일 3각 협력구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보다는 미·중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런 점에서 "핵무장한 북한이 안정화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음. 여기서 '안정화'의 개념에 따라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북한체제의 안정화가 핵포기의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만약 발표자의 견해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정화'를 저지해야 할 것이고, 결국 이는 '북한 조기붕괴 유도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대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reasonable security concerns)를 해소해야 북핵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IV. 결론

북한의 핵무장이 국제 비확산체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의 붕괴’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왜냐면 이미 NPT밖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존재했음에도 국제비확산체제는 유지되어 왔기 때문임.

또한, 북한의 핵무장을 동북아 다자안보레짐 형성의 기회상실로 연결될 것이라는 발표자의 전망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으로 여겨짐. 오히려 동북아 다자안보레짐의 형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체제를 유지하는 길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임. 지난 4월 12일 한미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동북아 다자안보레짐 등을 약속한 ‘9·19공동성명’의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임.

이란 핵개발의 결정요인들

김성철 (서울대)

○ 핵연료 사이클(실질적 확보 또는 확보 의지)과 핵무기 개발의 상관관계

이란과 북한 모두 핵의 이중사용 문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두 나라 모두 “평화적 이용”을 내세우면서 핵무기 개발을 해왔거나 그렇다고 의심받기 때문이다. 다른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핵은 이중사용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엄중하다. 유익하게도 사용되고 대량살상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른바 핵의 “평화적 이용”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나라가 완전한 <핵연료 사이클>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이다.¹⁾ 여기에서의 핵심은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다. 핵연료 사이클을 완성했거나 이에 근접한 국가는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핵연료 사이클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핵연료 사이클의 기술을 이전받기란 쉽지 않고,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조건부적이거나 또는 밀매를 통해서 해야 한다. 자체개발한 경우라면 더욱이 그 기술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말하자면 매몰비용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핵연료 사이클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핵연료 사이클이 곧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가? 어떤 국가가 핵무기 개발로 가는가? 이를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이다.

(1) 하나는 핵에 관한 행위자(집단)가 많을수록 특히 이해관계가 다른 행위자(집단)가 많을수록 평화적 이용에서 핵무기 개발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다. 특히 상업적 목적에 관여하는 행위자가 중요한 거부권 행위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가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거부권 행위자 역할을 해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산성, 전력회사, 원전 관련 제조회사, 원자력위원회, 탈핵시민단체, 또한 원전 수출형의 구조). 한국은

1) 핵 연료 사이클을 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연료의 독자적 확보 및 운영이고, 다음으로는 누적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에서이다. 핵연료 사이클의 완성 특히 재처리가 경제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엇갈리고 있다. 재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처리를 안 할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비용 계산은 복잡해진다. 둘째, 핵과학기술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과학기술의 내재적 논리를 발전시키려는 요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원자력에 관여하는 기술자들이 핵연료를 스스로 성형하지 못하고 수입해 사용하는데 만족할 리는 없다. 어쨌든 핵연료를 성형하는 데 필요한 자체의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연료 사이클을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의 주된 수단으로 간주하고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 비해 보다 단순한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맺은 경우이다. (정부-한수원, 시민사회, 그러나 원전 수출형 구조). 반대로 북한은 정치-기술 행위자의 <일체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정치에 복무하는 상황이다. 기술의 밀수출(시리아)은 중요한 외화의 원천이 된다. 이란은 북한에 비한다면 복잡하다. 핵무기 국가로 가는가에 대해 최고지도자 (현재 하메네이), 대통령, 과학기술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전 대통령이자 온건과 성직자인 하타미는 다소 유연했던 반면, 현 대통령 아마디네자드는 성직자 출신이 아니면서도 매우 강경주의자로서 핵연료 사이클의 확보 특히 농축우라늄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약하지만 선거 등 절차적 민주주의 요소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도 전혀 무시할 수만도 없다. 이란 핵프로그램에 관한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에 따르면, 2009년 기준 38% 응답자가 원자력 및 핵무기를 동시에 원하고, 55%는 원자력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0%가 제재의 효과를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 응답자가 제재가 철회되는 조건하에 핵 프로그램의 포기 또는 개방에 협력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이란 내 행위자들은 북한과 달리 일체형이 아님이 틀림없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행위자가 어떻게 거부권을 행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디네자드와 같은 강경한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경우 이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란에서는 행위자들의 관계가 수렴(거부권을 행사할만한 행위자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2) 다른 하나는 그 국가의 정체성, 대외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존의 위협이라 할 수 있는데, 생존 위협이란 것도 자신 및 주변에 대한 인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 지도자의 대내외 인식과 심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나친 피해망상과 민족주의에 빠진 지도자, 또는 그 반대로 지역 맹주를 꿈꾸는 지도자와 그런 지도자를 가진 국가는 핵 연료 사이클을 핵무기 개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이란의 농축시설 확충, 유엔 및 미국의 제재, 이란의 강경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끼든 혹은 그런 식의 대외 인식이 형성되기에 충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로부터의 군사공격의 경고 위협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이란 압력을 주문하면서 이란 핵시설의 공습파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만일 공습을 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²⁾은 물론이거니와 레바논 내의 헤즈볼라 세력과 가자지구의 하마스로부터의 미사일 공격과 테러 공격을 막아내야만

2) 2009년 12월 실험 성공한 개량형 사질 미사일은 사거리 1,500마일 이상으로서 남부 및 동부 유럽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한다. 또한 이스라엘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란에 대한 장거리 공습의 완벽한 성공이 불확실하다고 보면서 공습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단지 몇 년 연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스라엘 군사공격의 실시 여부 및 성공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이라크 전쟁 이후 아랍권 내 이란 자신의 위상, 여기에 외부의 위협과 위협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핵무기 개발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 이란과 북한·비교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핵확산 연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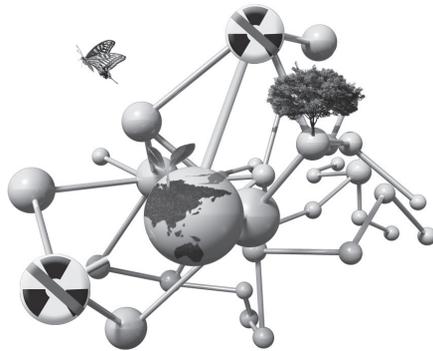
이란은 북한과 비교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두 국가 사이에 핵확산을 둘러싸고 충분한 연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007년 9월 6일 시리아의 알 키바르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목인이 있었던 반면, 북한은 며칠 후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공 침투를 비판했고³⁾ 이후 북한-시리아 커넥션을 부인했다. 이란에 의해 뒷받침되는 북한-시리아 커넥션은 시리아의 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의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의 2000년 장례식 때 이란과 북한의 고위 관리가 참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2002년부터는 북한-시리아의 밀접한 접촉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망에 포착되었으며, 이란은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를 소모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시리아에 차관 지원했다는 설명이 있다. 공습 후 북한의 보도는, 공습지역이 단순한 군사시설에 불과하다는 시리아 측 주장과 엇갈리는 것으로서 오히려 북한-시리아 연계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란 특히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시리아 지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기의식과 적대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질문: 대이란 제재의 효과는?

서정민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서방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돌이킬 수 없는 기점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유엔과 미국은 제재를 계속하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제재의 효과는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스라엘의 <군사적 옵션>을 가진 채 압박전략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석유개발을 위한 외부 기업의 출자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이란 <경제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는 핵미사일 관련 원자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자금의 흐름을 막는 것으로서 군사적 옵션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는바, 북한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선중앙통신 (2007년 9월 11일): “지난 6일 새벽 이스라엘군용기들이 수리아령공을 불법침범하여 동북부 시막지역에 폭탄을 던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수리아의 자주권을 람복히 침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로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리아령공침범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 제2회의 |

동북아 각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 China's Responses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차이젠 (蔡健, 푸단대)
-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일본의 대응
나카토 사치오 (리츠메이칸대)
-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박영호 (통일연구원)
- 지정토론
정재호 (서울대)
진창수 (세종연구소)
서주석 (국방연구원)

China's Responses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Jian Cai¹⁾

I. Introduction

The first Korea nuclear crisis had broken out in 1992 and had been eased up with the signing of Framework agreement by U.S. and DPRK in 1994, but when DPRK violated the Framework Agreement, the second Korea nuclear crisis broke out in 2002 and reached a climax when DPRK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on Oct. 9, 2006. With all the efforts mad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urky crisis has eased up until DPRK launched another so-called satellite or a long-range missile on April 5, 2009.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demned DPRK's activity as a provocation, as usual DPRK retreated from the Six-party talks for a restart-up the frozen nuclear facilities. Furthermore, on May 25, 2009, DPRK conducted its second nuclear test. The Cheonan incident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increased the tensions sharply. Once again the Korea nuclear crisis caught the world's critical gaze. After that the world witnessed the death of the tough leader, Kim Jong Il and his son's hereditary in 2011. Since the successor Kim Jong-un is so young and had an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the international society anticipated that the young leader will change his father's hard line. But unfortunately the young leader adopted an even tougher policy. He changed his father's promise of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declared that DPRK is a nuclear state in its new constitution in 2012,²⁾ according to the new strategy,

1) 1 Jian Cai, Ph.D, associate professor, executive director of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Fudan University.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1/2012053102832.html

DPRK launched another missile at the end of 2012 and conducted the third nuclear test. The Korean nuclear crisis again peaked on the international stage. What purposes underlie these actions of the DPRK, which in the short run has increased tensions? Whatev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for Pyongyang, the most important go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focus on how to cope with the nuclear crisis. This article analyzes the reasons and purposes for the DPRK's nuclear tests, consider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Six Party Talks, and concludes that the talks, while frustrating to various parties, have not been a total failure since they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The article examines the changing Sino-DPRK relationship and concludes that China should develop a long-term strateg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change its diplomatic policy toward the DPRK.

II . DPRK Nuclear Crisis

1. The reasons of DPRK developed nuclear weapons

People kept asking why the DPRK has carried out the nuclear test in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opposition. From my point of view, there are two important types of factors which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one is the objective factor and the other is the subjective. The objective factor is that the isolated DPRK should make an effort to strengthen its forces, and to deal with the threat of external hostile forces in order to maintain its safety. Basically, to protect its national security and to deal with the United States' long pursued hostile policy is the objective factor which spurs the DPRK to launch missiles and conduct nuclear weapons tests.³⁾ The subjective one is that DPRK wants to maintain internal stability and hence, maintain the regime.

As we know, the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place where the Cold War is still

3) Jian Cai, "How will China to cope with the nuclear crisis" *World Affairs*, Vol.9, (2009), p 27.

remaining, and military confrontation has existed since the Korean War. So the Korean nuclear issue can be seen as a continuation of the Cold War. There is a long history of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Korea peninsul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PRK. As early as in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repeatedly threatened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DPRK. After the war, the two sides signed an Armistice Agreement instead of a peace treaty. The United States not only stationed a large quantity of troops in the ROK, but also provided a nuclear umbrella to the ROK. In addition to that, the United States has even deployed several kinds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1958 to 1992.⁴⁾ It is the U.S. nuclear threat to DPRK that stimulated DPRK to begin to seek its own nuclear program from the 1960s on through the 20th century.⁵⁾

After the Cold War, with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normalization of Sino-ROK relations, the “north triangle alliances” disappeared, but at the same time, the “south triangle alliances” were enhanced.⁶⁾ DPRK’s security environment deteriorated. When George W. Bush took office, he pursued the notorious unilateralism worldwide and adopted a tough policy of containment towards DPRK.⁷⁾ Though this tough policy eased up at the latter part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kept pressuring DPRK to completely abandon its nuclear program.⁸⁾ It is this very hostile policy toward DPRK which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pursued for decades that posed a serious threat to DPRK’s security. Due to that DPRK couldn’t give up its pursuit of military power, especially the possession of missiles and nuclear deterrence capability. DPRK repeatedly said that it is precisely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threat of war and sanctions that compelled them to start “launching missiles and conducting the necessary nuclear test.”⁹⁾

4) Henry C K Liu, “China and the US: the DPRK perspective” *Asia Times*, (Feb. 2007).

5) Bin Li, “The developing armament of DPRK”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rms Control*, Vol.2, (2004), p 8.

6) During the Cold War, by three treaties, i.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The DPRK-Soviet Union Agreement on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the Sino-DPRK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China, Soviet Union and DPRK constructed a North triangle alliance to against the South triangle alliance, which consisted of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OK-American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7) Stephen Hoadley, “President Bush’s Foreign Policy: Innovation or consolidation?” *New Zealand International Review*, V.27 12, (March-April 2002), pp 6~8.

8)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5/43660.htm>

9) *Korean Central News Agency*, April, 30, 2003

Secondly, the launching of missiles and conducting of nuclear test is a product of DPRK' subjective needs. By doing this, Kim Jong-Il and Kim Jong-en aims to strengthen its political and social control of DPRK in order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regime.¹⁰⁾

As a result of long-term international sanctions, domestic natural disasters, and also the rigidity of its economy, DPRK' s economic base is very fragile.¹¹⁾ The DPRK leader believes that a moderate economic reform is necessary, but economic reform and an open door policy may lead to social and political reforms which may cause his people to doubt about the legitimacy of his rule, and may finally shake its foundation. That is an outcome which the leaders of DPRK may be unable to face with. Therefore, implementing military-first politics, launching missiles and conducting nuclear tests is the effective means to consolidate Kim' s political power and to bolster the spirit and morale of the people. And this is just because nuclear weapons are regarded as a symbol of national strength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wess. For example, on April 9, 2009, DPRK held the Plenary Meeting of the 12th Supreme People' s Assembly, and Kim Jong-Il was re-elected as chairman of DPRK' s National Defense Commission.¹²⁾ It is not difficult to see that DPRK chose to launch the missile or "satellite" on April 5, just a few days before the convening of the 12th supreme people' s Assembly, to encourage its people, boost national morale, raise the prestige of the ruling party and thus enhanc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t' s no doubt that the young leader Kim Jong-un fully inherited his father' s strategy.

But what are the real purposes of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Does DPRK really want to possess nuclear weapons or is it merely a politic means?

10) Jinwook Choi, "The North Korean domestic situation and its impact on the nuclear crisis" *Ritsumeikan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ISSN 1347-8214, Vol.5, (2006), p 1.

11) Liu Ming and Liu Amin, "Korean nuclear crisis: assessment and prospect"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Review*, (January 2007).

12) Kim Jong-Il appointed to third term as DPRK' s leader, <http://www.guardian.co.uk/world/2009/apr/09/kim-jong-il-north-korea>

2. The purposes for DPRK's nuclear tests

For a long time there has been a theory that the DPRK claim about developing nuclear weapons was just a bluff, that it had neither the desire nor the ability to carry it through,¹³⁾ and that it was only wielding the political card. Later, the progress DPRK made in the field led to the theory that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as aimed at discouraging invasion, since the United States has labeled it as part of the “axis of evil”¹⁴⁾ and threatened its security. But now we can see clearly that the theory is neither accurate nor correct. The DPRK not only has the desire but also has the ability to possess nuclear weapons.

From the development of the DPRK's nuclear crisis during the past decade, it is easy to state that to possess nuclear weapons was a strategic decision made by DPRK and to claim abandonment of its nuclear program or denuclearization was just a tactic. DPRK sincerely wants to become a nuclear power, but just because of the adverse environ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PRK had to make full use of the so-called “nuclear card” tactics in order to achieve its main objectives - regime security, sovereignty recognition and non-aggression pact, that is to end the United States' hostile policy and to gain reliable security guarantees from the United States. Launching missiles and testing nuclear weapons is serving as a tactical means for the purpose of “taking the brinkmanship policy and pulling the United States' concessions on the negotiating table.”¹⁵⁾ After Obama took office, the United States adopted the “strategic patience” policy toward DPRK, the ignored DPRK considered that the United States is still insisting in Bush' s policy and once again resorted to his trump card, i.e. launching the “Satellite”, retreating from the six-party talks and resuming its nuclear facilities, in order to let the United States to make a decision.

The three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PRK revealed that DPRK's true aim is “to

13) Liangui Zhang, “Coping with a nuclear NK” *China Security*, (Autumn 2006), p 3.

14) “Axis of evil” is a term initially used by the former United States President George W. Bush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on January 29, 2002 and often repeated throughout the rest of his stay in office, in order to describe governments that he accused of helping terrorism and see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5) Jian Cai, “How will China to deal with the nuclear crisis” *World Affairs*, Issue 9, (2009), p 28.

16) Liangui Zhang, “Coping with a nuclear NK” *China Security*, (Autumn 2006), pp 3~4.

master a powerful instrument in order to constrain the surrounding big powers and work to transform its strategic relations with them.”¹⁶⁾ It is unlikely that they will give them up because nuclear weapons can offer them great benefits.

The first benefit that nuclear weapons can offer is to deter a potential adversary from invading or threatening a nation’s core interests. Faced with the external pressures DPRK wants to possess nuclear weapons for protecting its own national security. For them, possessing nuclear weapons and the deterrence it provides always seems to be more reliable than giving up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exchanging them for uncertain or empty security assurances.

The second one is that nuclear weapons may restore the strategic bala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en North and South Korea were founded in 1948, there existed an acute struggle over inheri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balance of aggregate national strength began to tip in the early 1970s, and widened dramatically with the increase of South Korea’s economic power which became 30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North. What frustrated the North most is that there is almost no conceivable reversal in the near future. DPRK leaders consider mastering nuclear weapons as the only possible measure to dispel the fear of failure in this competition and, even possibly to take the initiative in 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force.

The third one is that nuclear weapons will help alleviate the massive input of resources required for conventional weaponry and shift them to economic development.¹⁷⁾ Though in the initial stages of nuclear development a significant outlay is necessary, DPRK has made this investment and can now reap the economic benefits of its nuclear effort.

In addition to those benefits, DPRK’s bold mov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lso makes war on the Korean Peninsula more unlikely. DPRK leaders have always lacked confidence in their own security which has been exacerbated by the American invasion of Iraq. It believes that if Saddam Hussein had nuclear weapons at his disposal, the United States would not have dared to attack and topple his regime. Though DPRK has sufficient artillery and short-range missiles to cause massive casualties to the U.S. forces

17) Dingli Shen, “DPRK’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Autumn 2006), p 25.

in South Korea, the nuclear weapons constitute an additional deterrent, aimed at making the United States take DPRK more seriously. The balance of troops between DPRK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destructive force of nuclear weapons simply makes it hard for the United States to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DPRK.

For these reasons and purposes, DPRK has obscured its real intentions and has deluded all the concerned countries into believing that it could be persuaded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during the past years of negotiations. In this way, DPRK has bought itself more than a decade, safely passing unscathed through the period of tense security crisis, and successfully stepping over the nuclear threshold. And for the same reasons DPRK will not likely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so how to cope with the nuclear crisis?

Ⅲ. How to cope with the Korea nuclear crisis

1. Six-party talks

For a long time, how to solve the peace and security problem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one of the key problems in the minds of leader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society has made a lot of diplomatic efforts and attempts in years past; the Six-party talks were the most recent achievement. But when DPRK launched its “satellite” on April 5, 2009, conducted its second nuclear test on May 25, 2009 and quit the six-party talk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an to consider the six-party talks as a total failure. But in my point of view, the six-party talks were not a failure but just a frustration, because the direction of the six-party talks is correct. In fact the six-party talks have provided a powerful means to resolve the Korean nuclear crisis and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mechanisms in Northeast Asia.

2. Six-party talks as a historical choice

In the Cold War, there was a large scale hot war taking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Cold War,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only place that maintained the Cold War mechanism. The United States have not realize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DPRK; from international law's perspective, DPRK and the United States are still in a state of war. Both sides maintain a large quantity of military power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fter "the north triangle alliance" disappeared, in order to safeguard its security DPRK began to quicken its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which has finally resulted in a nuclear crisis. The nuclear crisis greatly intensified the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So the Korean peninsula issue is the key problem that hinders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past decades, those concerned countries continuously tried to establish 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this area. The six-party talks were the most recent achievement towards this direction and it was also a historical choice.

How to building a security framework in northeast Asia, those interrelated countries have put forward to a lot of proposals and assumptions. During the 1970s, "Nixonism" initiated a pull back from Asia; US president Nixon put forward to a proposal in the UN to hold a four-party talks involving China, DPRK, Korea and the United States.¹⁸⁾ Also in the 1970s, Kin Dae Jung put forward a proposal to set up a six-party framework which included China, USA, USSR, Japan, DPRK and Korea.¹⁹⁾ In June 1979, US president Jimmy Carter suggested holding three-party talks by the United States, Korea and DPRK. In 1988 Korean president Roh Tae-Woo put forward a proposal at the General Assembly of UN to hold a peace consultation conference including the USA, China, USSR, DPRK, Japan and ROK, namely 4+2 plan, in order to sign a Peace Agreement to replac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²⁰⁾ When the first Korean nuclear

18) Liping Xia, "The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and the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Observer*, the second issue, (2005), p 2.

19) Xiao Ren, "Six-party talks and the possibility of founding the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ternational Studies*, the first issue, (2005), p 40.

20) James L. Schoff, "Political Fences and Bad neighbors: DPRK policy making in Japan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the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2006), p 1.

crisis broke out, U.S. president Clinton suggested holding four-party talks by the USA, China, DPRK and Korea.²¹⁾ According to this suggestion the four countries held six rounds of four-party talks in Geneva.²²⁾ There were two objects of the four-party talks, one was to ease up the intens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ther one was to establish the peace mechanism. But, for various reasons the four-party talks did not gain any tangible achievements. Though the four-party talks failed, it had significance. Holding the multilateral talks meant that the endeavor to establish the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had taken the first step.

Japan and Russia felt dissatisfaction about the four-party talks since they were excluded. After DPRK launched a missile in 1998, Japan Prime Minister Keizo Obuchi put forward a clear suggestion to hold a six-party talks which would include Japan and Russia.²³⁾ In 2001, after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paid a political visit to Korea, in the association announcement he also requested a six-party talk. In October 2002, when the second Korean nuclear crisis broke out, U.S. president George W. Bush insisted on not to holding bilateral conversation with DPRK and stuck to multilateral negotiations which resulted in a serious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crisis severely challenged China's diplomatic strategy which aims to create a peaceful outside environment for domestic economic construction. For China, solving the Korean nuclear crisis through a peaceful conversation, mainta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and realiz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s a necessity for seizing the 20 years strategic opportunity period of the new century and for creating a favorable peripheral environment for domestic economic construction. China made a lot of diplomatic efforts between U.S. and DPRK and the three-party talks held in Beijing in April 2003. With the 'shuttle diplomacy'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effect, in August 2003, the six-party talks involving China, USA, Russia, Japan, DPRK and Korea were held in Beijing.²⁴⁾

21) "North east Asia: DPRK, ROK and Japan", Institute for defense& Disarmament Studies, <http://www.idds.org/issNucProlifNEA.html>

22) *People's Daily*, Dec. 3, 1997

23) Christopher B. Johnstone, "Paradigms Lost: Japan's Asia Policy in a Time of Growing Chinese Power"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1, (1999).

24) *People's Daily*, Aug. 27, 2003.

The Six-party talks were the result of sustained exploration and struggle by northeast countries, and it was a historical choice. The Six-party talks not only provided a diplomatic platform for resolving the Korean nuclear crisis, but also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3. From Three-party talks to Six-party Talks

The current Six-Party Talks originated from the three-party talks held in 2003. After the United States accused that DPRK had engaged in secret highly enriched uranium (HEU) program, the second Korean nuclear crisis broke up in 2002. As usual the DPRK demanded a solution to the emerging highly enriched uranium (HEU) crisis bilaterally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e United States refused to deal with Pyongyang directly and preferred to broaden the field of players.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did not want to repeat the ‘failure’ of the Clinton’s Administration’s Agreed Framework.²⁵⁾

In February 2003 when US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went to ROK to attend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Roh Moo Hyun, he stopped in Beijing and suggested that Beijing would be well positioned to organize and host multilateral talk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North and South Korea. The Chinese did not respond directly to his suggestion. They remembered the failure of the four-party talks in Geneva, when former Foreign Minister and Vice Premier Qian Qichen went to Pyongyang in early March of 2002 and offered five-party talks to DPRK. DPRK rejected that proposal at once, so Vice Premier Qian revised his suggestion on the spot and offered three-party talks instead. However, Pyongyang continued to request bilateral talk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Concurrently, China tried to convince Washington that the talks truly would be trilateral in every sense of the word and not simply an excuse for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to meet bilaterally. Given the fact that

25) The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signed on October 21, 1994 between DPRK (DPRK) and the United States. The objective of the agreement was the freezing and replacement of DPRK’s indigenous nuclear power plant program with more nuclear proliferation resistant light water reactor power plants, and the step-by-step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It was broken down in 2003.

Pyongyang and Washington were exchanging information through the New York channel, China needed to take part in the conversation to prevent their deception. China stressed that the trilateral talks would be the official and only channel of communications dealing with the nuclear crisis. But because the United States did not want to negotiate with DPRK directly, when DPRK sent comments or requests through its UN Mission in New York, the United States replied through China. This arrangement of communications concerning trilateral talks served Beijing's purposes well and brought the DPRK and United States together in Beijing in April 2003 at last for an initial round of talks aimed at resolving the emerging second nuclear crisis.

But when the three parties met in late April 2003 in Beijing, the DPRK's delegation head still insisted on meeting with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bilaterally.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on strict instructions, refused to meet the DPRK. Based on that refusal, DPRK ended their participation and returned to Pyongyang. What China hoped for did not occur at the end of the three-party talks.

Almost immediately after the failure of the April session, the Chinese began to resurrect the three-party talks, but this time, the United States insisted that any future rounds should include the ROK and Japan. Upon Moscow's insistence, the United States quickly added Russia to the list of future participants in any multilateral talks. In late July 2003, Chinese vice Minister Dai Bingguo suggested another round of three-party talks to Secretary Powell because Pyongyang insisted that it would not attend any five- or six-party talks. As a compromise the United States agreed that it could attend an initial three-party session if it were followed immediately by a full six-party round of talks.

In late August 2003, the first round of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 US and DPRK delegations held a brief talk for approximately thirty minutes. However, at the end the plenary talks, unable to reach agreement on a joint statement it ended with a chairman's statement, "The major result coming out of the talks is that all parties share a consensus with the following main points: All parties are willing to work for peaceful settlement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to work to safeguard peace and stability that brings about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All parties maintain that while a nuclear-free Peninsula should be realized, the DPRK's security concerns and other areas should be considered and resolved; All parties agree, in principle, to explore and decide on an overall plan for solving the nuclear issue in stages and through synchronous or parallel implementation in a just and reasonable manner; All parties agree that in the process of peace talks, any action and word that may escalate or intensify the situation should be avoided; All parties agree that dialogue should continue to establish trust, reduce differences, and broaden common ground; All parties agree that the six-party talks should continue, and the date and venue for the next round of talks should be decid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s soon as possible.”²⁶⁾

When the chairman of the six-party talks, Wang Yi, was asked by reporters in Manila a few days later what he thought the biggest obstacle to achieving a next round of Beijing talks was. He said frankly, “The American policy towards DPRK-this is the main problem we are facing.”²⁷⁾

On February 25-28, 2004, the second round of Six 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But this time, the six-parties could not gain a joint statement and Beijing had to issue a Chairman's Statement once again: “The Parties agreed that the secon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had launched the discussion on substantive issues, which was beneficial and positive, and that the attitudes of all parties were serious in the discussion. While differences remained, the Parties enhanced thei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position through the talks. The Parties expressed their commitment to a nuclear-weapon-free Korean Peninsula, and to resolving the nuclear issue peacefully through dialogue in a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consultation on an equal basis, so a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at large. The Parties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coexist peacefully. They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address the nuclear issue and the related concerns. The Parties agreed to continue the process of the talks and agreed in principle to hold the thir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no

26) *People's Daily*, 29 August 2003.

27) *Manila Chinese Commercial News*, 2 September, 2003.

later than the end of the second quarter of 2004. They agreed to set up a working group in preparation for the plenary session.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working group will be establish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²⁸⁾

After the end of the second round of Six-party talks the United States and the Russia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for this kind of idle negotiation. The Russian head of the delegation said, “If the negotiating process is stalled, a number of countries could take certain measures against DPRK, for example, a blockade, which could further exacerbate the political and even military atmosphere on the Korean Peninsula.”²⁹⁾ The United States also threatened that if Pyongyang did not admit to its HEU programme and “commitment to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its program”, all options were still on the table—a not so subtle threat that military action was possible.³⁰⁾ In a response, Chinese vice Foreign Minister Wang Yi said that all parties should make concerted efforts in three areas: First, they should carefully study key standpoints of substantial issues and solutions proposed during the talks, from which they could summarize positive factors. Second, a working group should be formed as soon as possible to prepare for the third round talks. Third, the parties should maintain a peaceful environment throughout the process of the talks and avoid words or actions that might intensify differences or provoke other parties.³¹⁾ These remarks criticized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indirectly.

The third round of Six-Party Talks in late June 2004 proved to be an important session. If the third round talks followed the pattern of the previous two sessions, many observers believed it could have been the end of the multilateral process. But this time the situation changed somewhat, the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made progress.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made a second trip to Pyongyang. China made public comments about the need for additional US flexibility in dealing with DPRK. The US administration also faced problems such as continued critical world opinion, the coming

28) *Xinhua News Agency*, Beijing, 28 February 2004.

29) Charles L. Pritchar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multilateral talks” *North-East Asian Security*, Second issue, (2005), p 31.

30) *Ibid.*

31) *Xinhua News Agency*, Beijing, 5 March 2004.

election which influenced the United States to make its first concrete proposal to resolve the nuclear crisis during the third round of talks. In an initial three months period, the DPRK would provide a complete listing of all its nuclear activities, and cease operations of all its nuclear activities; permit the securing of all fissile material and the monitoring of all fuel rods; and permit the publicly disclosed and observable disablement of all nuclear weapons/weapon components and key centrifuge parts. In return, other parties would take corresponding steps such as provide the heavy fuel to DPRK. DPRK eventually rejected the US proposal and sai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our ultimate goal, we once again made it clear that if the United States gives up its hostile policy against us through action, we will transparently renounce all our nuclear weapons-related programs. We presented a concrete plan on nuclear freeze, on the premise that if the United States withdraws the CVID demand and accepts our demand for reward.”³²⁾ Though the third round talks did not get any meaningful achievements, compared with the former two rounds talks, it had made progress that includes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having made proposals.

4. The Six-party talks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greatly

As we know, at first the six-party talks aim was to resolve the DPRK’s nuclear crisis, it was just a mechanism for solving a crisis, but while holding three rounds of Six-party talks, this mechanism kept developing. This mechanism might not only develop into a realistic and feasible form to solve the DPRK’s nuclear crisis, but also might even solve the security issues of northeast Asia. First of all, the Six-party talks seized the sticking point (DPRK’s nuclear issue) which affects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solving the DPRK’s nuclear issue has a crucial significance for maintain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in region. Secondly, the six-party talks have included all those countries which have important interests in this area. These countries negotiated

32) DPRK Spokesman’s 25 June press conference at Six-party Talks in Beijing, <http://www.xignite.com>

on an equal basis and consulted sufficiently to gain some agreement or consensus which will no doubt lay a solid foundation for future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past 6 years, the Six-party talks held six rounds successively, though the formula was not changed, the content and topics for discussion kept developing and deepening. In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he talks, the DPRK's nuclear issue was the key topic for discussion, but from the fourth round Six-party talks, something changed.

From July 26th to August 7th, and from September 13th to 19th, 2005,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gain. Unlike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Six-party talks, the fourth round of talks ended with a Joint Statement. In this joint statement, "the Six Parties unanimously reaffirmed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the DPRK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AEA safeguards." In return,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has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e ROK then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receive or deploy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ffirming that there exist no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observed and implemented."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 to the DPRK." "The Six Parties undertook promotion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trade and investment, bilaterally and/or multilaterally. China, Japan, ROK, Russia and the US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reaffirmed its proposal of July 12th, 2005 concerning the provision of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the DPRK."³³⁾

Maybe while in the negotiations these terms were familiar. In fact almost all these

3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fmprc.gov.cn/eng/zxxx/t212707.htm>

terms had been written in the Framework Agreement in 1994 reached by the United States and DPRK, but the 9.19 Joint Statements is different from the Framework Agreement in many aspects. It also included these point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The Six Parties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³⁴⁾

These three terms proved to be a milestone. Though the United States has regarded DPRK as one of the “axis of evil,” significant progress was mad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as both nations agreed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exist peacefully together.” (For the U.S., this is premised on the North's abandonment of its nuclear pursuits.) Japan's promise to normalize relations with DPRK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f September 2002 is equally significant as it came about through a multilateral framework. Apart from the relations normalization, the joint statement also brought forward clearly for the first time that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established to keep the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is statement pointed out the correct direction for solving Korea nuclear crisis by establishing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The 9.19 joint statement is just a jumping-off point, fulfilling what has been outlined in the joint statement now becomes crucial. But in the Oct. 2006, the nuclear test put the

3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fmprc.gov.cn/eng/zxxx/t212707.htm>

nuclear crisis to a climax.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PRK intensified rapidly and seriously threatened the peace of northeast Asia. Some People began to suspect the validity of the Six-party talks. However those countries didn't give up hopes but made more and more effects to promote solving this crisis. From February 8th to 13th 2007, the third session of the fifth round of Six-party talks held in Beijing and ended with an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At the very beginning the statement said that the Parties had held serious and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actions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September 19, 2005, and all the Parties had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and will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reiterated that they would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and the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³⁵⁾

Those kinds of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include:

--The DPRK will shut down and seal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and will discuss with other parties a list of all its nuclear programs

--The US and the DPRK will start bilateral talks and moving toward full diplomatic relations. The US will remove the DPRK from the list of the state-sponsor of terrorism and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o the DPRK.

--Japan and the DPRK will start bilateral talks and normalize their relations;

--the Parties agreed to cooperate in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and will provide emergency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at is 50,000 tons of heavy fuel oil (HFO) within next 60 days.

--The Parties agreed to establish five Working Groups: 1.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3. Normalization of DPRK-Japan relations; 4.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5. Northeast Asia Peace and

35) *The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2/13/AR2007021300508.html>

Security Mechanism.) For carrying out the initial actions and all these five working groups will meet within next 30 days.

--Once the initial actions are implemented, the Six Parties will hold a ministerial meeting to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and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Parties will take positive steps and make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³⁶⁾

Compared with 9.19 Joint Statement, the 2.13 Joint Statement had made a big progress. One of th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Joint Statements was that the six-party talks no longer take “the lasting peace of Korean peninsula” as an affiliated object or a bait for realizing the nuclear-fre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clearly indicated that the strategic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not only to realize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et up a security cooperative mechanism in northeast Asia.³⁷⁾ The concerned countries realized gradually that it is the lack of peace and security mechanisms in northeast Asia that resulted in the lasting intensity of Korean peninsula. Only when peace becomes a clear goal, can DPRK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To this point of view, 2.13 Joint Statement is a real milestone.

From 18 to 20 July 2007, the sixth round of Six Party talks were held in Beijing. In the press communiqué it said that the Parties will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the agreement of 13 February 2007. To fulfill the goals such a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and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Six Parties will take three steps: firstly, the five working groups will convene their respective meetings within August; secondly, In early September, the Parties will hold the Second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thirdly, following the

3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1.fmprc.gov.cn/eng/zxxx/t297463.htm>

37) Jian Cai, "The six-party talks and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mechanism" *Northeast Asia Forum*, issue 6, (2008), p 12.

Second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the Parties will hold a ministerial meeting to confirm and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the February 13 agreement and the general consensus, and explore ways and means to enhance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past five years the Six-party talks gradually developed from a mere mechanism for solving crisis to a forum for discussion and establishment of the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of northeast Asia. Scan the world, and almost every region in the world has their own regional security and cooperative mechanism such as EU, ASEAN, AU and etc, but there is not a similar mechanism to deal with the outburst of bilateral and region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an area where a lot of great powers had broken up conflicts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region, so it poses a significant potential trouble area to international security. Setting up the working group of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according to the 2.13 Joint Statements is an important breakthrough; it will no doubt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he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It will also affect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bears a long-range strategic meaning.

Though the six-party talks achieved a lot of progress, before we can celebrate the achievements, the six-party talks bogged down once again at the end of 2007 when DPRK refused to declare its nuclear program thoroughly. When DPRK launched its “satellite” at April 5, 2009 and conducted its second nuclear test at May 25, 2009,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sidered the six-party talks as a total failure and the mission of the six-party talks finished. They though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have to face to a nuclearized DPRK. But shall we? And as a chairman nation in the six-party talks and a country which has a great interest in Korean peninsula, when the Six-party talks seem likely to fail, how will China respond?

VI. The changing Sino–DPRK relations

1. The continuity of china's policy toward DPRK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in the Northeast Asian hub where the mainland and the sea powers meet with each other. The special lo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gives it particular strategic significance i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DPRK is adjacent to China, when the emperor of Ming dynasty moved his capital to Beijing five hundred years ago,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of particular importance in China's security during the past few centuries for a special geo-political reason. As a result,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as a consistent characteristic. That's why the Ming Dynasty used its army to help the Korean Lee Dynasty to fight against Japan in 1592, why the Qing government sent troops to the Korean peninsula for fighting against Japan in 1894, and why Chiang Kai-shek supported the Republic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And it is also why the newly founded China was involved in the Korean War in the 1950s. Due to geopolitical reasons these choices were inevitable.

Nowadays DPRK serves as China's strategic buffer zone in Northeast Asia. With a shared border of 1,400 kilometers, DPRK acts as a guard post for China, keeping at bay the tens of thousands of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This allows China to reduce its military deployment in Northeastern China regions and focus more directly on the issue of Taiwanese independence. To a certain extent, DPRK shares the security threat posed by U.S. military forces in South Korea and Japan. So the cooperation and assistance between China and DPRK is, at a minimum, mutual. There is an argument that China has helped DPRK without getting anything in return.³⁸⁾ This statement is partially wrong. There is no altru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fact, by providing aid to DPRK; China is in essence helping itself. It is said that “for approximately no more than a few billion dollars a year, China has been provided with more than 50 years of peace.”³⁹⁾

38) Nam Ju Lee, “Changes of DPRK 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Issue 9, (2005).

39) Philip Pan, “China Treads Carefully Around DPRK” *The Washington Post*, (Jan, 2003), A14.

China's interests in the Korean Peninsula are based in these two aspects: one is to keep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ther is to establish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Firstly, China's diplomatic strategy determines its interest in peaceful diplomacy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adopting reform and the open door policy, China set up a grand development strategy which mainly focused on economic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diplomatic policy should serve domestic affairs, China has been insisting on independent, peaceful, diplomatic policy during the past thirty years. The aim is to create a peaceful and benign outside political environment that does not hinder domestic economic reforms. China's concerns and attentions not only go to the Europe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but particularly to its neighbor countries, just because the peace and security of its surrounding region is directly related to its domestic economic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So China's first concer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o avoid war, to maintain the stability and peace. That is why China has always resolutely opposed resolution of the Korea nuclear crisis by forc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ny military strike could lead to a comprehensive Korean War, leading to regional instability which would undoubtedly affect China's economic construction seriously. If a war breaks out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 in accordance with the Sino-Korean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signed in 1961, China will face very difficult choices.

The outbreak of war would bring some awesome consequences. First, since China has very deep economic ties with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outbreak of war would destroy the prospects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Secondly, the outbreak of war is likely to lead to the collapse of the DPRK regime. The sudden collapse of the DPRK regime will not only bring tremendous economic and security consequences to China, at the same time, it will lead to the rapi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uncertain.

The war would present a serious refugee problem. At present,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illegal border violators from DPRK living in China due to sustained

famine. It has increased China's economic and social burdens, and if there is a war, the refugee problem will indeed become a very serious problem.⁴⁰⁾

China's interests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founded in these three reasons for not wanting DPRK to become a nuclear power:

A nuclearized DPRK may not serve its desire for safety, but may greatly increase the instability in the region and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nflict.

DPRK'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ould undermin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system, leading to a regional arms competition and nuclear proliferation. This will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follow-up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by Japan, South Korea and even Taiwan will be fatal to China's interests.

Deliberations on how to solve the DPRK nuclear crisis has caused China to experience tremendous diplomatic pressure. China is DPRK's traditional ally and the largest aid donor to the Korean economy. In the past decade,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hoped for and requested China's 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leverage to force DPRK not to play with dangerous brinkmanship. Therefore, the outbreak of the DPRK nuclear crisis not only increases the difficulty for China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PRK, but also the difficulty in handl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DPRK.⁴¹⁾

So we can find that it is China's vital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make China to insist in the consistent policy.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while China adhering to the policy consistency; it also has a certain degree of flexibility.

2. The flexibility of China's policy toward DPRK

For a long time, China has supported DPRK consistently,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is kind of support will continue under any conditions. As the situation changes,

40) Jian Cai, "How will China to cope with the nuclear crisis" *World Affairs*, Vol.9, (2009), p 28.

41) Jian Cai, "Korea Nuclear crisis tests the consistency and flexibility of China's policy toward Korea" *China and World Affairs*, Vol.2, (2009), p 147.

China's national interest also changes, and so does China's policy toward DPRK.

On the Korean issue, China faces a difficult tradeoff. These difficulties not only come from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other great powers, but also from Sino-DPRK relations. On the road to the rise of China,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increasing, but at the same time, because of lacking of mutual trus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conflicts are also gradually increasing. Nowadays, as the United States adopting a "pivot to Aisa" or "rebalancing toward Asia" and strengthened the allies with Japan and ROK, China felt more strategy pressure and need the DPRK's existence and stability in order to keep the strategic balance on Korean peninsula. DPRK knows well about China concer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knows well about the differing interest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Korean nuclear issue. Therefore DPRK often made use of China, if we didn't go so far as to call China a "hostage". In the years of the DPRK nuclear crisis, China has been trying everything to influence DPRK and hoping that DPRK will stand together with China. But the premise is that DPRK's brinkmanship will not violate China's national interests such as the stability and th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f DPRK's activities hurt the national interests of China, China will also say No to DPRK.

Therefore, when DPRK launched its missiles in July 2006, China withstood the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ven threatened to use its veto in the UN to protect DPRK. However, when DPRK conducted the nuclear test on October 2006, China carried out a strongly worded condemnation ahead of other countries and then supported the sanction resolution made by the UN because DPRK's nuclear test touched China's bottom line.

First, DPR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will hurt the interests of China. No matter how the Sino-DPRK relations will develop in the future, once DPRK has nuclear weapons, from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will likely be permanent. The United States and DPRK do not have much direct conflict in geopolitical interest. Only when U.S. interests step up in Asia, there will be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m. However, China and DPRK are eternally close neighbors;

DPR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will no doubt constitute constraints or even a threat to China's national interests at a geopolitical level.

Secondly, the DPRK's nuclear test would trigger the nuclear arms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Once DPRK really possesses nuclear weapons, the nuclear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d nuclear proliferation is almost inevitable; Japan and South Korea are likely to follow-up. Japan already has been clamoring to become a "normal country" and has made many efforts on that. Since Japan has acquired the nuclear technology, the money and nuclear materials,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is very easy. Once Japan and South Korea have nuclear weapons, China will becom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ich will be surrounded by nuclear weapons, and China's national security will be seriously threatened.

Therefore, China must know where its interests lie and when anyone violates these interests it should say "No" loudly. That is the limit of flexibility in China's DPRK policy.

3. The Boundaries of Sino-DPRK Relations

From the 1990s, though China's diplomatic strategy still adheres to traditional bilateralism, with the changes of times, especially the improvement of its national strength, China's diplomatic strategy has become more inclined to multilateralism. China increasingly sees itself as a stakehold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siders the anxieties and worri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a higher level perspective. In this case, how China defines its own national interests, how it cooperat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ursues national interest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nd the DPRK nuclear crisis has provided a lot of experiences and lessons to China.

As a large country, China not only must maintain its responsibility in the international arena, more importantly, it must be able to recognize and protect its national interests. In the DPRK nuclear crisis, to be a responsible great power and to protect its national interests have a high degree of consistency. In fac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lmost in accord with all countries' interest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not always the same, but there are also some areas of common ground. For instanc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shared interest. The United States' pursuit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determined by its tremendous interests in East Asia. Though Japan i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does not want Japan to possess nuclear weapons. The Japan which living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rather than possessing its own nuclear weapons is more in line with U.S. interests. At the beginning of the DPRK nuclear crisis, China believes that the crisis was caused by the United States, so China did not want to be involved in it. Many people accused the United States and even suspected a conspiracy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with the deepening understanding of China's international status, as well as its national interests, China no longer merely acted as a bystander, but to promote peaceful talks and took the initiative to adopt effective measures to resolve the DPRK nuclear crisis. On the one hand, China criticizes the United States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 it also condemns DPRK's extreme risk-taking behavior severely. While taking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its national interests, China maintained a large country's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well. This fully reflects the combination of principle and flexibility of China's foreign policy.

China and DPRK used to carry the responsibility of a "blood-bound alliance." But the Sino-DPRK relationship has been sharply weakened, since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without DPRK's understanding in 1992. Around the time of Kim Il Song's death, ties and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top officials decreased, and the two nations' relations soon became nothing better than mere friendly relations as China accelerated its open policies. When DPRK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China voted for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 resolution on DPRK's test and Sino-DPRK relations reached rock bottom. The allied cooperation seems to have greatly dissipated, though it is not abolished under international law. China appears uninterested in sustaining Article II of its Treaty with DPRK signed in 1961, which assures mutual military assistance in the case of aggression by a third party against either one of them.

An attack launched by DPRK on Sou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DPRK has nuclear weapons, would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mutual assistance required under the China-DPRK Treaty. But China will still maintain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DPRK due to several common interests. Even though DPRK has conducted a nuclear test it is still a security partner - albeit a difficult one - to China.⁴²⁾ China needs DPRK, and DPRK understands that well.

V. Conclusions

In the short term, a DPRK with nuclear weapons would not pose a direct threat to China because China has not threatened DPRK. Yet it is reasonable to ask what the long-term impact of a nuclear weapons-capable DPRK will have on China and the region. In the long term, to deal with the DPRK nuclear issue, China should develop a long-term strategy. This strategy should build on its own international status and the profound national interest, in order to use a variety of means to defend its own interests, therefore, China should think about these questions carefully and thoroughly:

First, China'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to keep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so DPRK's extreme risk-taking policy cannot be tolerated or accommodated.

Second,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 and practical developmen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evitable, China must pay close attention to which, South Korea or DPRK will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and in what way they aim to achieve the unification.

Third, from a long term view, the DPRK nuclear issue is not the conflict between DPRK and the United States, but China's developing strategy in response to the United States' Asia-Pacific strategy. Then The Sino-DPRK relations should be subordinate to

42) Dingli Shen, "DPRK'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Autumn 2006), p 27.

the Sino-America relations, China should pay high degree of attention to how to keep the balance between Sino-DPRK relations and the Sino-America relations.

Fourth, in the long run, China is to become a great power. To b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hina should not prioritize i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DPRK above thos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ly by thinking about these questions seriously can China work out a foreign policy with the stability, continuity as well as the flexibility to defend its national interests.

Principal References

- Bin Li, "The developing armament of DPRK"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rms Control*, Vol.2, (2004), p 8.
- Charles L. Pritchar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multilateral talks" *North-East Asian Security*, Second issue, (2005), p 31.
- Christopher B. Johnstone, "Paradigms Lost: Japan's Asia Policy in a Time of Growing Chinese Power"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1, (1999).
- Henry C K Liu, "China and the US: the DPRK perspective" *Asia Times*, (Jan. 2007).
- Jian Cai, "How will China to cope with the nuclear crisis" *World Affairs*, Vol.9, (2009), p 27.
- Jian Cai, "the six-party talks and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mechanism" *Northeast Asia Forum*, issue 6, (2008), p 12.
- Jian Cai, "Korea Nuclear crisis tests the consistency and flexibility of China's policy toward Korea" *China and World Affairs*, Vol.2, (2009), p 147.
- Jinwook Choi, "The DPRK domestic situation and its impact on the nuclear crisis" *Ritsumeikan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5 (2006), p 1.
- James L. Schoff, "Political Fences and Bad neighbors: DPRK policy making in Japan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the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2006), p 1.
- Liangui Zhang, "Coping with a nuclear NK" *China Security*, (Autumn 2006), p 3.
- Liu Ming and Liu Amin, "Korean nuclear crisis: Assessment and Prospect"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Review*, (January 2007).
- Liping Xia, "the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and the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Observer*, the second issue, (2005), p 2.
- Nam Ju Lee, "Changes of DPRK 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Issue 9, (2005).
- Philip Pan, "China Treads Carefully Around DPRK" *The Washington Post*, (Jan. 2003), A14.
- Stephen Hoadley, "President Bush's Foreign Policy: Innovation or consolidation?" *New Zealand International Review*, V.27, (March-April 2002), pp 6~8.
- Xiao Ren, "six-party talks and the possibility of founding the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ternational Studies*, the first issue, (2005), p 40.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일본의 대응 -대응형 관여(Responsive Engagement)의 관점으로부터-

나카토 사치오 (리츠메이칸대)

I. 들어가며

일본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립적 견해들이 존재한다. 첫째, 일본 대외 정책의 대미 종속적 측면을 강조하는 논의다. 이러한 논의는 일본에서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며, 우파 및 좌파 양쪽 모두로부터 일본을 종속국가로 규정하는 수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 외무관료인 아마키 나오토(天木直人)는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은 대미종속으로부터 자립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¹⁾ 그리고 호주국립대의 개번 맥코맥(Gavan McCormack)은 속국(Client State)을 「식민지도 괴뢰국도 아니고 외관으로는 독립국가의 모습이 있지만 자국의 이익보다 타국의 요구를 우선시 하는 국가」로 정의하면서, 일본이 미국의 지시를 따르고 미국 의존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²⁾ 이처럼 일본이 미국에 대해 종속적 측면이 있다는 것은 자주 논의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익이 대립할 경우 조차도 일본이 반드시 대미협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다.

한편, 일본의 대외 정책을 둘러싸고 일본의 반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도 존재한다.³⁾ 특히,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와 일본 국내에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부시 정권에서 핵불확산 문제를 담당한 존볼튼 전 국무차관은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논문을 월가 저널지에 기고하여 일본 및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정책 선택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계에서 역시 이 문제는 제기되고

1) 天木直人, 『さらば日米同盟』, 講談社, 2011.

2) 전형적인 논의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ガバン・マコーマック, 「アジアの問題児: 属国の苦悩」, 徐勝・中戸祐夫編, 『朝鮮半島の和解・協力10年』, 御茶ノ水書房, 2009. 이 논문은 다음 책의 핵심부분을 서술한 것이다. Gavan McCormack, Client State: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 New York and London, 2007.

3) 맥콜마크는 위의 논문에서 속국과는 모순되지만 천황 중심의 아이덴티티와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측면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이중성을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한편으로, 이러한 일본의 반동적 혹은 대미 종속과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속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의 주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아베 수상도 이전에 일본의 핵무장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적 있다. 2002년 2월, 당시 관방부장관은 와세다대학의 비공개 강연회에서 「소형이면 원자 폭탄을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였고, 이것과 관련하여 후쿠다 관방장관 역시 「내 개인의 논리대로라면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일본의 핵병기 보유는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금까지도 일본의 핵무장론은 여러가지 맥락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일본 자신이 핵무장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측 가능한 장래에 일본이 핵무장에 착수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⁴⁾

이와 같이 대립된 견해가 나타나거나 개념을 규정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가 결여된 것과 같이, 여러 국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나 일본 보수파의 견해가 미디어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한편으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따르기만 하는 종속국가이며 그것은 일본의 대북 정책에서도 나타난다고 규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과는 전혀 달리 핵무기로 무장한다는 공격적 및 반동적 일본의 국가상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 정책에 대한 상반된 논의의 혼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고는 ‘대응형 관여 (responsive engagement)’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일본의 대북한 정책을 둘러싼 몇 가지 개념 규정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전에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정권의 대북정책을 ‘대응형 관여’ 의 개념으로 규정했지만, 본고에서는 일본의 대북 정책에 관련된 두 가지 논점을 다루면서 이에 관한 기존의 개념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⁵⁾ 먼저 I장에서 일본의 대북 정책의 목적 및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개념화한다. 다음으로 II장에서는 국제적 요인, 양국 간 요인, 국내적 요인 등을 포함한 일본 대북 정책의 구조적 제약요인에 대해 밝힌다. 그리고 III 장에서는 1. 일본의 핵무장론, 2. 일본의 경제 제재, 3. 미·일간의 정책 차이의 세 부분을 지적하고, 대응형 관여의 관점으로부터 검토를 시도한다. 일본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속국론 혹은 핵무장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것들을 대응 국가론의 관점으로부터 재검토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논의를 요약한다.

4) 일본의 핵무장은 일본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반핵감정이 일본 국내에서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핵무기 개발에 따른 비용이 방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경우 일본은 중국에 대응할수 있는 핵을 보유해야 하며 그 비용은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좀더 포괄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Mataka Kamiya, "Nuclear Japan: Oxymoron or Coming Soon?", The Washington Quarterly, 26:1, 2003, pp 63~75.

5) Sachio Nakato, "Responsive Engagement," Ritsumeikan International Affairs, vol. 2, 2004, pp141~157. 본고의 논의는 필자의 이 연구에 의거해서 대응형 관여에 대한 재고를 시도하는 것이다.

II. 일본의 대북한 정책 : 대응형 관여

1.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목적

여기에서는 일본의 대북 정책의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일본 대북 정책의 목적은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위험한 대외행동을 관리하고 무효화 시킨다는 것이다.⁶⁾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있으며 군사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점진적인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 및 핵개발과 생산,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미사일 및 미사일 부품, 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 등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또한 북한의 간첩선박이 일본 영해에 침입하거나 외화 위조 내지 마약 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 정치경제 시스템의 성격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일이다.⁷⁾ 북한이 변화하는 분위기는 2001년 이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2002년 7월에 경제개혁 조치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 배급제도가 정지되고 임금이나 곡물 가격 등의 상승을 초래했다. 최근에는 화폐개혁을 단행하거나 북중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북한이 좀 더 열린 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 정책의 목적은 북한이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것이 되었다.⁸⁾ 그런 맥락에서 일본의 경제원조나 협력은 북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을 후원하고 또 북한의 정치경제체제를 더욱 개방적으로 만들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일본 대북 정책의 목적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역사문제 청산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⁹⁾ 우선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한반도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일본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철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인 납치문제나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들의

6) Task Force on Foreign Relations for the Prime Minister, Basic Strategies for Japan's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New Era, New Vision, New Diplomacy, November 28, 2002, p 13.

7) Ibid., p 13.

8) Kenji Hiramatsu (2003), "Leadup to the signing of the Japan-DPRK Pyongyang Declaration," Gaiko Forum, Winter, p 24.

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lue Paper (Gaiko Seisho), several issues.

대우 등 인도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실현하려면 일본은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2. 대북한 정책의 세 가지 원칙

이상과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본은 어떤 원칙에 따라 대북한 정책을 이행해 나가야 하는가? 본고는 일본의 대북 정책이 다음의 세 가지 운용원칙에 적용되고 있다고 상정한다.¹⁰⁾

첫째, 납치문제, 핵문제, 미사일과 같은 일본과 북한 사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포괄적 해결이란 납치문제, 일본 영해에 대한 북한의 침입문제, 미사일이나 핵개발 프로그램 등 북·일 간의 모든 현안이 북·일 교섭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납치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납치문제가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은 국교정상화 교섭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납치문제 해결이 국교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납치문제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역시 북·일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은 북·일 국교정상화의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은 북·일 평양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평양선언 제2항에서는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국교정상화 이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에 걸쳐 경제협력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제협력에는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공여 및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일본과 북한은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경제협력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데, 그 조건은 일본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을 때 한국에 제공한 것보다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의 대북 정책은 미국 및 한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과의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핵이나 미사일 등 군사안전보장 문제에서는 미·일동맹이나 한·미·일의 정책협조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문제에는 북·일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적 비확산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 차원의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핵개발, 미사일개발이나 미사일실험, 대량살상무기는 모두 세계적 비확산 시스템의 현안으로 취급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런 문제는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

10) Yasuhiro Nakasone and Hisahiko Okazaki, "Negotiating Patiently with North Korea," Japan echo, pp 10~12.

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일동맹 및 한·미·일의 정책조정을 통해 안전보장 차원의 현안에 대처함과 동시에 대북한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일의 3개국 협조 속에서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3. 대응형 관여의 정의

일본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생존이라는 국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국제적인 의제 설정이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제창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세계질서를 통해 촉진 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주어진 국제환경 속에서 국익을 획득하고자 한다.¹¹⁾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미국이 형성한 국제 질서 및 세계 전략 속에서 미국에게 맞추는 형태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북한이나 타국에 대해 관여할 때, 일본은 동시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나 아시아 정책의 요구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대북 정책을 「대응형 관여」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¹²⁾ 물론 일본의 대응형 관여는 국내의 염려나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응형 관여라는 개념은 관여 대상국, 미국, 국내요인에 대한 대응의 조합을 포함한다. 즉 대응형 관여는 미국과 국내 및 국제적 현안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다방면적 대응 시스템이며 그 안에서 일본은 자신의 국익을 추구한다고 상정한다.

앞 절에서 본 운용원칙에 근거하여 보면, 본고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대북 정책의 기본적 요소는 (1) 일본은 미국 요인에 의해 자립적 혹은 자주적 대북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2)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할 때 일본의 대북정책은 국제적 요인 및 국내적 요인에 의해 비체계적이며 불완전한 형태가 된다, (3) 일본은 북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 미·일관계 및 한·미·일의 정책협조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 한다. 따라서 지원자 내지는 조정자 역할을 지향한다 등 이상 세 가지이다.¹³⁾

일본의 대북 정책에서 대응형 관여는 김대중 정권의 적극적 관여, 즉 포용정책과는 구별된다. 김대중 정권의 화해협력 정책은 인내심을 가지고 화해,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을 평화적,

11) Gerald L. Curtis, "Japan's Cautious Hawks: Why Tokyo Is Unlikely to Pursue an Aggressive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92, no. 2 (March/April, 2013) p 77.

12) 일본의 대외 정책은 확실히 수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수동적 관여」(passive engagement)는 어떤 국가가 수동적이면서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고, 납치 문제 등 문제 영역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또, 쾨트카르다는 일찌기 일본의 대외 경제정책을 「반응형」이라고 개념화했지만, 「반응형 관여」(reactive engagement)이라고 하는 용어는 핵문제의 문맥에서는 북한이나 대두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반동」 혹은 「반항」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져 일본이 핵무장 한다라고 하는 문맥으로서 파악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미·일 동맹의 해체라고 하는 상황이 없으면 일본의 핵무장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정책을 개념화할 때, 반응형 관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3) 대응형 관여의 정의를 구축할 때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Kent E. Calder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vol.40, no.4 (1988) pp 517~541.

개방적 개혁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스스로 변화하도록 촉진하는 적극적정책이었다.¹⁴⁾ 반면 대응형 관여는 포용정책과 유사한 정책목표 혹은 방향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관여하기보다 국내적·국제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해당 문제에 관여한다. 그리고 대응형 관여는 봉쇄, 선제적 징벌적 요소를 포함한 부시 정권 초기에 표방된 ‘강경한 관여’ (Hawk engagement)와도 다르다.¹⁵⁾ 일본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한정적으로 군사지원을 제공하지만, 궁극적 상황이 아닌 이상 일본의 대응형 관여는 군사분야에서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 글의 서두에서 살펴 본 일본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개념규정은 모두 일본의 대북 정책의 성격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이나 일본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미·일동맹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일본이 핵보유를 지향할 것 같지 않다. 또한 일본에는 독자적 대북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미국의 정책을 반영하기만 하는 속국이라는 규정은 표면적 혹은 일면적이다. 일본은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한·미간의 정책 격차를 조정하고 시도하거나 납치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 이해를 성공적으로 획득하는 것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Ⅲ. 반응형 관여의 요인

여기에서는 일본의 대북한 정책이 위에서 규정한 반응형 관여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명확히 한다.

1. 대·미관계

일본의 대북 정책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지만 현재 미국과의 관계는 주요 이익이자 주된 제약요인이다. 일본은 자본, 기술, 시장을 포함한 국제경제분야와 외교적 지원 등의 영역에서

14) Chung-in Moon,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Changes in Inter-Korea Relations - In Defense of the Sunshine Policy," Korea and World Affairs, winter, 2001, p 516.

15) See Victor D. Cha (2002), "Hawk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summer), pp40~78, and Victor D. Cha (2002), "Korea's Place in the Axis," Foreign Affairs, May/June, pp 79~92.

미국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통해 자국의 안전보장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본은 사실상 대북한 정책에 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및 한국과 안전보장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일본에게 필수적이다. 미국이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할 때면 일본은 교묘하게 그것을 자신들의 정책 의제에 넣거나 채택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문제는 당초 일본의 대북 교섭전략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안전보장 차원의 우려에 대응해서 북·일 평양선언에 명시적으로 안전보장에 관한 항목을 넣었다고 전해진다.¹⁶⁾ 일본은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개발 프로그램의 봉쇄에 강한 관심을 쏟고 있다. 워싱턴은 이 문제에 대한 동경의 명시적 협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 국무부장관이었던 리차드 아미티지는 「미국의 우려는 일본의 우려」라고 다짐했다.¹⁷⁾ 일본은 미국의 우려사항과 군사분야에서 자국 능력의 한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 자신도 미국과 일본 양쪽과 관련된 안전보장 현안은 일본이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이전에 명확히 해둔 바 있다.¹⁸⁾

앞의 사례는 일본 대외정책의 대응형 관여라는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일본의 대북 정책에서 미국 요인은 많은 제약요인들 가운데 단순한 하나가 아니다. 물론 일본은 국내외 관련 요인들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북한문제를 포함한 일본 대외정책의 규정요인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 한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조정하여 통일된 대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일본에게는 이익이다. 왜냐하면 한·미·일 3국의 정책조정을 거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일본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진척시키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우려사항이나 이익에 대응하는 것은 자국의 안전보장 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일본의 우려와도 조응하는 것이다.

2. 북한 요인

일본이 아직 과거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일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16) 이 경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북일 평양선언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나카 히토시(田中均元) 전 외무심의관의 저서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田中均, 『外交の力』, 日本経済新聞社, 2009, pp 118~124.

17) Asahi Shimbun, September 14, 2002.

18) Asahi Shimbun, October 18, 2002.

있으나, 북한은 분명히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통한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동반된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일 평양선언이 체결된 후 개최된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정태화 북·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북·일교섭 과정에서 「국교정상화와 함께 경제협력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¹⁹⁾ 그 후의 교섭에서도 북한은 「납치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된 문제이고 핵문제는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이 납치문제나 안전보장 차원의 현안 해결만을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근본적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견해가 일본 국내에도 존재한다.²⁰⁾

그러나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를 일본에 의한 과거 식민지 지배 청산에 한정하는 견해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이 일본의 안전보장 현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의미한다. 전통적 국제관계론의 관점에는 국가가 추구하는 국익에 국가의 생존, 번영, 핵심적 가치 보전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생존이 모든 국가들에 해당하는 사활적 이익으로 파악된다. 이 견해가 옳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협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문제가 미해결인 상태에서 일본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진전시킨다는 것은 상정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가령 과거의 식민지 지배 청산과 그에 따른 조치가 자국의 안전보장 차원의 우려를 악화시키거나 미국의 세계전략과 모순된다면 일본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하는 일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북·일관계는 과거 청산은 비핵화 진전과 관계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한편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현 체제의 생존은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다.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협력이나 지원을 받는 것은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 불가결하지만, 북한에게 절박한 전략적 우선과제는 역시 안전보장 영역과 관련된 문제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위협을 느껴 왔다. 특히 초기 부시 정권의 강경정책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및 핵실험 실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마찬가지로 악의 축으로 명명된 이라크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도 작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반복해서 미국과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해 왔다. 북한 입장에서 안전보장 차원의 최대 우려는 여전히 미국이고, 핵이나 미사일 등 안전보장에 관한 영역에서 일본을 교섭 상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점에서도 일본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제안전보장의 맥락에서 일본의 경제카드를 핵문제 해결에 충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없다. 따라서 북·일 국교

19) Asahi Shimbun, October 31, 2002.

20) 예를 들면 姜和中·水野直樹·李鍾元編, 『日朝交渉』, 岩波書店, 2003, pp 104~114.

정상화 및 핵과 미사일문제와 같은 북·일 간의 현안문제는 북·미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도 일본이 단독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다.

3. 국내정치 요인

일본은 납치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여 왔다. 북한이 인정한 납치피해자 13명 중 8명이 사망했다는 북한의 발표는 일본에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관한 일본 여론의 분노가 이토록 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아마 일본 여론의 분노의 정도는 일본정부의 예상조차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납치라고 하는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했고, 납치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동정을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타협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즉, 납치문제에서 타협적으로 인식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일본 정부나 정치가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는 국제연합, 한중일 정상회담, G8 등 다국간의 틀을 통해 국제적 지지와 일본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얻는 데에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아마 일본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북 정책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 것이 가장 두드러진 외교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타국의 관심은 일본이 바라는 만큼 높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국민감정을 고려하면 일본이 납치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보일 필요성은 있지만, 미국이나 기타 주변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는 납치문제보다 핵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적극적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더 중요한 현안사항 앞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지지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국내압력에 반응하는 납치문제 관련 정책에 있어 일본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항상 하지는 못한다. 우선 일본은 납득할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행방불명 된 납치피해자 모두가 생존해있다는 전제 하에 납치피해자의 즉시 귀국과 진상해명 등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결될 전망이 조금도 열리지 않은 채로 있다. 다음으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6자 회담 참가국들에게 반드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이나 한국은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6

자 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에너지 지원에 불참을 표명하거나 납치문제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비핵화라는 중요과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있다. 더욱이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을 지원해온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는 정책과제의 달성을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를 상실했다. 그 결과, 일본은 납치문제를 둘러싸고는 강한 국내감정이 존재하고 항상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국제환경 속에서 북한의 대외행동에 따라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비체계적이고 불완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응형 관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개의 일본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응하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대두되어 온 일본의 핵무장론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일본이 실시해 온 경제 제재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실질적으로 유일한 대북 압력인 대북 경제 제재의 특징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미·일 간의 정책 차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대한 것이다. 일본의 독자적인 대응과 그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해야한다.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일본의 대북 정책에 관해 이상의 3개의 논점을 대응형 관여로 규정하여 검토하는 동시에,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현재 일본의 위치를 확인한다.

IV.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대응

1. 일본의 핵무장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대응의 기축은 견고한 미·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혼자서 북핵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응이다. 미국은 일본 방위에 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일 협력을 유지해 왔다. 이번 북한이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도 아베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전화를 통한 회담을 실시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조기 채택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과 동시에, 오바

21) The Daily Yomiuri, February 14, 2013.

마 대통령은 「미국은 핵보호를 통해 일본을 방위한다」고 약속했다.²¹⁾ 또한, 2월 22일에 실시된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의 고위관계자들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일련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동맹국인 일본이나 한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견고한 코미트먼트(commitment)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일 관계의 협조에 중점을 두었다.²²⁾

이와 같이 미·일간에 정책 협조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의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본의 핵무장론은 일본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²³⁾ 우선 일본의 핵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미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첫째, 일본의 핵무장은 핵비확산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이 용인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일본의 핵무장은 동북 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 혹은 군비 확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 역시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 또한 일본 스스로 여전히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와 비핵 3원칙을 국내 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NPT 체제로부터의 탈피나 핵에 대한 일본내에서의 인식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본의 핵보유는 일본 안보의 근간인 미·일 관계를 붕괴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정체성이나 규범에 반하는 선택이 된다.

일본의 여론도 미·일 동맹에 대해 긍정적 평가 하는 한편,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12년 내각부의 「자위대·방위 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관심사로서 「한반도 정세」가 64.9%로 가장 많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일본의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81.2%가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은 일본의 안전하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회답해, 일본국민의 대부분이 미·일 안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었다. 한편, 자위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은 전회 조사보다 상승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23.4%에 머무르고 있다. 즉, 일본의 여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일본 안보의 최대의 관심사로 하는 한편, 일본의 안보를 담보하는 것은 핵무장을 포함한 자국의 자위력 강화가 아니라 미·일 안전 보장에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일 관계가 견고하고 미국의 핵보호가 기능하고 있는 한, 일본이 핵보유나 군사

22)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3, 2013.

23) 정남구 「한국내 핵무장론을 반기는 일본 보수세력」 『한겨레』 2013년 2월 15일, 정남구 「한국의 핵무장론」 『조선일보』(Chosun Online) 2013년 2월 24일.

력 강화로 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월에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미·일 정상회담도 이 점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 물론, 이른바 「반미 보수」나 국수주의자들 중에는 핵무장을 포함한 일본의 자위력 강화나 군사 대국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의 이후에도 이러한 세력이 정치력을 가지거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상황은 형성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주류인 「친미 보수」 및 대다수의 여론은 여전히 일본의 안전 보장의 근간으로서 미·일 안보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 요인 및 국내 요인의 어느 쪽에서 봐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한 일본의 핵무장은 상정 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2.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언론이나 전문가 사이에서 다루어지는 일본의 핵무장론이나 일본의 우경화라는 선풍적인 견해가 과장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일본이 대북정책에 대해 융화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본은 이전에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및 납치 문제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제재 조치 및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적용해 왔다. 먼저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에 북한이 북한사람의 입국 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2009년 4월의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5월에 북한이 2번째의 핵실험을 했던 것에 대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도 전면 금지 시켰다. 그 결과, 현재 북·일간의 무역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조총련의 허종만 의장과 북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겸하는 총연합 관계자 4명에게 북한 방문했을 경우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 경제 제재로서 북한에 사람, 물건, 돈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아베는 2월 12일에 북한의 핵실험의 발표를 받고 「우리 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동시에, 동북 아시아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해친다」라고 북한을 강하게 비난 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서 (1)정보 수집·분석, (2)국민에게의 정확한 정보 제공, (3)부족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 (4)방사선 물질의 모니터링, (5)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6)재일의 북한 당국 직원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사람을 북한으로부터 재입국 원칙 금지, (7)향후, 새로운 대응의 검토를 들었다.²⁴⁾ 지금까지 조총련의 의

24) 「내각총리대신성명」, 2013년 2월 12일.

장들 4명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일본 입국을 금지 시켰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로서 새롭게 조총련의 부의장 5명이 도항 제한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결정했다. 게다가 이번 북한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도발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수출입 및 북한적의 선박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2년간 연장할 방침을 나타냈다. 향후 유엔 안보리로 채택된 북한에의 추가 제재로서 북한과의 금융거래 제한의 강화 등 새로운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북 경제 제재는 일본의 여론으로부터도 대체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이 중요시하는 핵, 미사일,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행사할 수 있는 대북 압력은 경제 제재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 일보가 실시한 「2013년 한일 국민 의식」 합동 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핵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일본국민은 84.7%, 한국국민은 76.7%으로, 한국보다 일본이 높았으며, 북한에의 대응방안에 대해 한국은 「대화 중시」를 우선시켰지만(50.5%), 일본은 경제 제재 등의 압력 중시하는 비율이 보다 높았다(52.6%). 일본에서는 핵무장론이나 자국의 군사력 강화나 대북 군사적 대응을 지지하는 여론은 형성되지는 않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싸고는 대화보다 압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국내에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일본 국민은 북한의 공격적인 대외 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군사적 조치나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선택사항보다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압력의 행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하여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의 특징을 다음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의 실시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같이 국제사회의 동향에 맞추어 신중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는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 등 국제 협조에 의하는 것 나오지 않으면, 제재 조치는 강구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현재는 북한의 납치 문제 등을 근거로 해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내각회의에 따라 대응 조치를 강군령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일본의 독자 제재도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부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²⁵⁾ 그렇다고는 해도, 둘째, 일본 독자적인 경제 제재는 실질적 효과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북·일간의 금융 규제는 제3국을 경유하는 자금을 제한하지 못하고, 북·일간의 무역은 중국이나 한국 등과의 무역에 의해 대체되어 왔다. 오히려 북·일간의 왕래의 상징인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나 조총련 간부의 재

25) 2004년 외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단독적인 경제 제재가 가능해졌다.

입국 금지 등은 북한에의 정치적 메세지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²⁶⁾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3. 미·일간의 정책 차이

일본의 대북정책이 미국과의 협조를 전제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해 미·일간에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책 과제나 우선도에 대해 차이가 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최대의 우려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이지만, 일본의 대북정책은 핵 문제 및 미사일 문제와 함께 납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2012년도의 「외교 청서」는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은 2002년 9월에 체결된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하고, 납치 문제, 핵 및 미사일 문제라고 하는 북한을 둘러싼 제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북·일 국교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또한 「이 방침은 2011년 12월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사망 후도 변하지 않다」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²⁷⁾ 즉, 2002년의 북·일 평양선언은 여전히 일본의 대북정책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있어 핵과 미사일 등 안전 보장 문제가 주요한 한편, 일본은 핵·미사일 문제를 미국과 협조하면서,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역사 문제와 납치 문제라고 하는 북·일 관계 특유의 과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둘째, 상기의 이유와 관련하여 핵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미국과 납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 사이에는 정책상의 우선도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할 때 일본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일본의 딜레마는 2007년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가 리스트로부터 해제할 때에 명확해졌다.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싶은 미국과 이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서 활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테러 지원국가 리스트에 두기를 바라는 일본과의 사이에 정책 차이가 처음으로 생겼다. 일본은 납치 문제에 진전이 나타날 때까지 북한을 테러 지원국가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 부시 정권에게 일년 이상에 걸쳐서 요구하였다. 또한, 2007년 2월에 합의된 6자 협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행동 원칙에 따라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지만, 일본만이 납치 문제를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은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

26) 후쿠다 관방장관(당시) 2004년 11월 21일의 회견에서 「한 국가(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나라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27) 외무성 「외교청서」, 2012년.

우, 일본이 반드시 미국의 정책이나 관심에 맞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직접적인 위협으로서 경계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본 전 국토를 사정에 두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에 대해서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안전보장상의 위협 대상의 차이는 미·일간의 정책 협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발전하여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현실이 되는 것에 따라, 이전에는 일본 본토의 미사일 방위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 미국의 관심은 미국 본토의 방위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즉,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 대상으로 위협할 때, 미국이 일본 방위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본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염려로 인해 일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것은 북한 미사일의 일본 영토에 대한 공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 선제 공격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가능하다는 논의이다. 현재 이 「적기지 공격론」은 기술적 및 정치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일본의 정책 옵션은 되지 않고 있다.²⁸⁾ 오히려, 현단계의 「적기지 공격론」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일 방위에 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확실히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미국이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자립을 바라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또한, 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가지는 것은 논리상 있을 수 있지만, 타국의 판단으로 전쟁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위해서 미국이 용인한다고 상정 하기는 어렵다.²⁹⁾

따라서, 미·일간에는 위와 같은 정책 차이가 존재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일 사이에는 중요한 규정 요인이 존재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정책적 우선도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미국의 정책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은 납치 문제 등 독자적인 과제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대일 방위에 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에 일본이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는, 적기지 공격론 등 독자적인 자위력 강화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기술적 및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인 정책 선택은 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은 미국의 대일 방위에 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확실히 하는 것일 것이다.

28) Tomohiko Satake,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Security Perspectives of Japan," Kyuryoon Kim and Jae-Jeok Park eds.,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2), pp 129~131.

29) 『산케이신문』 2013년 4월 1일.

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몇가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북핵문제에 국제사회가 집중할 때면, 일본의 핵무장론이 자주 제기되지만 대응형 관여는 미·일 동맹이 존재하고, 핵병기에 대한 국내 규범이 계속하고 있는 한 일본의 핵무장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미·일 동맹을 통한 일본의 외교 정책은 이익과 제약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핵무장은 미국의 이익과 정면으로부터 대립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또한 일본 국민의 감정이나 핵병기국을 목표로 할 때에 수반하는 비용에 대응하는 경우, 일본의 핵무장은 결코 일본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일본 방위에 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핵무장론은 비현실적이다.

둘째, 대응형 관여는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는 국내 정치 요인을 반영하면서 국제 협조를 기본으로 한 범위 안에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밝힌다. 우선, 일본은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는 국제 협조를 기본으로 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납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고려한 일본의 독자적 경제 제재는 효과 그 자체보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함께 국내 여론의 대응에 근거하여 부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대응형 관여는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기축으로서 북한으로부터의 보복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외의 정치적 요소에 대응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 등 핵개발 계획에 대응하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압력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신중한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응형 관여는 북한 정책을 둘러싸고 미·일간에 정책 과제나 우선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속국론과는 달리 일본은 독자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동시에, 자위력의 강화는 미국의 전략의 범위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핵과 미사일 문제에 중점을 두지만, 일본은 과거의 청산 문제와 납치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것이나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 할 지라도 납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국과의 정책 협조에 참여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동시에, 핵무장이나 「적기지 공격 능력」의 유지 등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는 미국의 전략에 지장을 미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즉, 대응형 관여는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미국의 정책 목표의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일본이 독자적

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넷째, 대응형 관여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하고 있는 현재 일본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일본과 북한은 여전히 평양선언을 유지하고 있으며, 6자 회담에서 합의된 9·19 성명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관계를 파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그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납치 문제에 관한 국내 상황에 대응하여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비핵화의 전개 상황에 따라 관계가 재개될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즉, 일본은 최소한의 대북 관여를 유지하면서 미국 요인과 국내 요인에 대응하면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대응형 관여는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 일본의 대북 관여도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박영호 (통일연구원)

I. 서론

국제사회의 자제 촉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결의 2087호)에 반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단행한 1차와 2차 핵실험에 앞서 각각 7월 5일과 4월 5일에 장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동전의 양면 관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일의 통치 기간에 김일성의 유훈임을 내세우며 비핵화를 말하고 북미협상이나 6자회담에 나서기도 했지만 북한의 핵개발 전략은 오래전부터의 계획이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그의 3대 업적으로 핵과 위성(미사일),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을 들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존엄’을 강조하였다.¹⁾ 김정은을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2011년 12월 30일의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핵보유국, 위성발사국’의 성과를 ‘불멸의 업적’이라고 찬양한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2012년 4월 13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는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3차 핵실험 이후 열린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겠다고 강조하고 “우리(북한)의 핵무력은 지구 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이다.”라고 선언했다.²⁾ 그리고 2013년 4월 1일 열린 최고

1) “김정일 동지의 혁명 유산,” 『노동신문』, 2011. 12. 28.

2) 『조선중앙통신』, 2013. 3. 31.

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전략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때문에 자위적 억제력을 개발한 것이라면서 대내적으로 핵보유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대외적으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다”고 선언했다.³⁾ 이미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6자회담 불참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같은 해 3월 31일에는 핵무기 보유국 간 군축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위협공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2013년 3월 연례적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연합 방어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전쟁 상황’이 조성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전면대결전의 최후단계에 진입한다”고 위협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핵 타격의 결불을 맞볼 것”이라고 위협했다.⁴⁾ 이어 4월 4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했다.⁵⁾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서의 대응도 단호해지고 강해졌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 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한 북한 비핵화의 추진을 강조하였으나,⁶⁾ 북한은 이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으로서의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정책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국사회 내에서의 논의의 폭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1차 및 2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하자거나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주장하는 의견 등이 나오기는 했으나, 3차 핵실험은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증강전략은 남북 간의 전력구도는 물론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나타난 한국사회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3) 『조선중앙통신』, 2013. 3. 31.

4) 『연합뉴스』, 2013. 3. 27.

5) 『연합뉴스』, 2013. 4. 4.

6)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2013. 4. 12.

II. 한국 사회의 인식

1. 정부와 정치권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를 2주 앞두고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이 확인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을 확인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 핵포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영향을 확충하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⁷⁾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 차원의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도발로써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⁸⁾

신규 정권의 대통령들이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났다. 정권 교체기의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북한이 정부 교체시기에 무모한 행동을 하여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 정부와 야당 측과 외교 및 안보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⁹⁾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2월 13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7) 『연합뉴스』, 2013. 2. 12.

8) 『연합뉴스』, 2013. 2. 12.

9) 『연합뉴스』, 2013. 2. 12.

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여도 그걸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뢰를) 실행하려고 해도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걸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⁰⁾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함을 보이면서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또 미·일 정상과의 전화통화, 미국 출장 중인 외교통상부 장관을 대리한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주한 미국대사 및 한미연합사령관과의 긴급 협의, 외교장관의 중·일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 국방장관과 미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의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2월 13일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남북교류 사업과 남북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¹¹⁾

정치권의 반응도 즉각적이며 과거보다는 단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상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깨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감행한 만큼 북한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미국과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분명한 공조로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주도”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차원의 제재 이외에 추가 제재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¹²⁾

10) 『연합뉴스』, 2013. 2. 13.

11) 『연합뉴스』, 2013. 2. 13.

12) 『연합뉴스』, 2013. 2. 12.

2월 13일 열린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남북 간의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개진되었고, 그 방안으로 독자적인 핵보유나 핵무장 필요성, 북핵 해결 시 폐기를 전제로 한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 미국의 전술핵의 한반도 재전개,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재검토, 한국형 방어체계구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¹³⁾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은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서 보다는 북한의 핵개발이 가져온 안보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의 마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또 집권 새누리당 내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하여 위험한 발상이자 현실적이지 않은 구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오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소집하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북한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으로는 남북통일을 실현할 수도, 세계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핵 도발로 초래될 국제사회 제재 등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¹⁴⁾

군소야당인 통합진보당은 비상대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국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관계, 파탄 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면서 “대북 강경책으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라고 주장했다.¹⁵⁾ 통합진보당의 논평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은 담지 않은 채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해 대화를 촉구했다.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월 12일 오후에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가 강력한 대비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선언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13) 『연합뉴스』, 2013. 2. 14.

14) 『연합뉴스』, 2013. 2. 12.

15) 『연합뉴스』, 2013. 2. 12.

복귀하며, 정부가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¹⁶⁾

이어 국회는 2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석 18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채택하였다.¹⁷⁾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북한에 대해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 보호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⁸⁾

전반적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북한 핵개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은 1차 및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북한의 핵개발의 상당한 진전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셋째,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매우 심각한 군사적 도발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도발의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독려하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 시 9·19 공동선언의 공약 이행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여섯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도발과 위협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통 인식을 가져왔으며 초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각성시켰다.

16) 『연합뉴스』, 2013. 2. 13.

17) 6명의 의원을 보유한 통합진보당은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2013. 2. 14.

18) 『연합뉴스』, 2013. 2. 14.

2. 국민 여론

(1)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느끼는 위협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된 직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개발 또는 핵실험에 대해 느끼는 위협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민 10명 중 6~7명 내외의 비율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거나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2월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¹⁹⁾ 응답자의 42.7%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으로 군사적 위기감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이어 ‘도발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경계심 정도를 가졌다’는 33.4%, ‘북한의 상투적 위협으로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23.9%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²⁰⁾ 우리 사회의 위협요인 중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위협요인으로서 북한의 핵실험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강력범죄 34%, 암 등의 중증질환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였기 때문에 가장 위협한 요인으로 지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3.2%였으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은 35.7%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이 핵실험이 불안을 가져다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이유로는, 34.6%가 북한의 핵은 대미 협상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2.1%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불안감이 증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72%로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더욱 불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대북관계에 대한 조사에서는²¹⁾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한 응답이 76%(‘매우 위협적이다’ 51%, ‘약간 위협적이다’ 25%)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19) 모노리서치, “[핫이슈분석] 북한 3차 핵실험 긴급 여론조사,” 2013. 2. 18. 일반전화 RDD (무작위 임의결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98\%$ p. (http://www.pollster.co.kr/hotIssueView.mono?ARTL_CD=2390) (검색일: 2013.3.14).

20) 아산정책연구원 보도자료, “3차 핵실험 이후 여론동향 파악을 위한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2013. 2. 19. 휴대전화, 유선전화 RDD방식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3.1\%$ p. (http://www.asaninst.org/04_news/news_detail.php?seq=2151) (검색일: 2013.3.14).

21) 한국갤럽, “북한 3차 핵실험과 대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2013. 2. 20.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392>) (검색일: 2013.3.15).

3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1%(‘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 18%,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3%)에 불과하였다.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82%와 8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는 68%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40대도 10명 중 7명은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조사해 4월 6일 발표한 ‘2013 한일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²²⁾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76.6%가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우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29.2%로, 3년 전의 18.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민의 경우 84.7%가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2)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우리 국민들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 문화일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인 2월 5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²³⁾ 조사 결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조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8.1%로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39.7%보다 높았다. ‘제재 강화’ 대 ‘대화를 통한 해결’이 6:4의 비율을 보인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52.2%)가 찬성(43.4%)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이하의 계층에서 강경대응(65.3%)과 군사적 대응(54%)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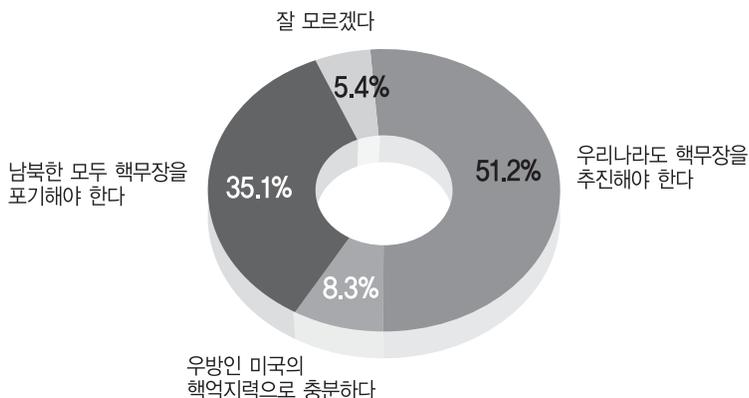
2월 13일의 모노리서치 조사는²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과반수인 51.2%가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한 모두 핵무장을 포기해야 한다’ 35.1%, ‘우방인 미국의 핵 억지력으로 충분하다’ 8.3%, ‘잘 모르겠다’ 5.4% 순이었다(<그림 1>참조).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으로는 ‘유엔 및 주변국가와 협력하는 외교 강화’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선제타격 검토 등 이전보다 강경한 대응’ 28.1%, ‘경제협력 확대 등 대화와 포용정책으로 전환’ 22.1%, ‘잘 모르겠다’ 6.4% 순이었다.

22) “2013 한일 국민의식 여론조사,” 『뉴스웍스』, 2013. 4. 6. <<http://news1.kr/articles/1078499>> (검색일: 2013.4.10).

23) 『문화일보』, 2013. 2. 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07010302230370010>> (검색일: 2013.3.15).

24) 각주 19) 참조.

[그림 1]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



아산정책연구원이 2월 13~15일 기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및 핵무기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²⁵⁾ 북한 핵에 맞서 우리나라도 핵무기개발이 필요한가에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6.5%가 찬성하고 31.1%가 반대하였다. 모름·무응답은 2.4%였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견해는 ‘지지한다’가 67.0%, ‘지지하지 않는다’가 28.8%, 모름·무응답이 4.2%였다. 핵무기개발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의 비율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참여 지지’가 18.9%인데 반해 ‘한국형 MD로도 충분하다’는 견해가 72.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8.6%였다.

한국갤럽이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²⁶⁾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4%, ‘반대’ 28%로 나타났다. 앞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3명 중 2명의 비율로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 것처럼 3명 중 2명의 비율로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대북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가 46%,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가 47%로 두 가지의 견해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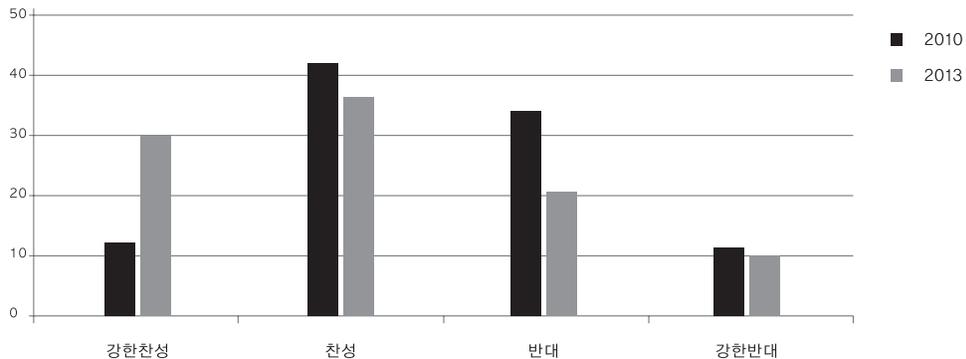
25) 아산정책연구원-리서치앤리서치 “데일리풀” 여론조사,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센터 강중구 연구원 제공 자료, 2013. 2. 15. 가구전화 및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조사,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26) 각주 21) 참조.

아산정책연구원이 2월 16~18일 기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국인 의식조사'에서²⁷⁾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대안으로 응답자의 38%가 '협상과 협력의 병행추진'을 선택하였으며, 이어 '경제제재' 30%, '단호한 군사적 대응 고려'가 22%,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 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 또는 군사적 대응 고려라는 압력 수단의 사용이 5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데 반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지지의견은 2010년 56%('강한 찬성' 13%, '찬성' 43%)에서 2013년 66%('강한 찬성' 30%, '찬성' 36%)로 증가한 반면, 반대의견은 2010년 45%('강한 반대' 11%, '반대' 34%)에서 2013년 31%('강한 반대' 10%, '반대' 21%)로 줄어들었다. 특히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강한 찬성이 13%에서 30%로 대폭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그림 2]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지도(%)²⁸⁾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4월 6일 공동조사에서²⁹⁾ 북핵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응답자의 50.5%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했고 경제 제재 등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26.7%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일본 국민들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2.5%였으며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 Kim Jiyeon, Karl Friedhoff, and Kang Chungku, "The Fallout: South Korean Opinion Following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The Asan Institute Policy Studies ISSUE BRIEF, No. 46, (2013. 2. 25), pp10,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RDD방식 전화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http://www.asaninst.org/03_publications/publications_detail.php?seq=2263&ipage=2&nums=7) (accessed on 11 April, 2013).

28) Kim Jiyeon, Karl Friedhoff, and Kang Chungku, "The Fallout: South Korean Opinion Following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p10, (그림 5) 재구성.

29) 각주 22) 참조.

요약하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들의 결과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독자적인 핵개발의 필요성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를 질문한 경우, 상당한 정도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한 제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추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한국의 대응 방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1,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지난 20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등장하고 북핵 게임의 틀이 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한은 ‘핵무기보유’를 헌법에 규정하고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경제건설과 함께 핵무력건설을 공식화하였다. 핵무기의 증강을 자위적 억제력의 증강으로 내세우고 전 세계의 비핵화가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이 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의 논의도 새롭게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응 방안은 대체적으로 ‘독자적 핵개발론’, ‘전술핵 재도입론’, ‘핵우산 강화론’ 또는 ‘강화된 확장억제론’, ‘선제 핵타격론’, ‘북한체제 변화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독자적 핵개발론

독자적 핵개발론은 안보적 차원의 자위적 핵주권론으로도 부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핵무력 증강을 정책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한국이 더 이상 비핵화 추진에 매달릴 수는 없으며,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국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의 ‘공포의 균형’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주장자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이다. 정 의원은 핵무기는 군사무기이자 정치무기라면서 “북한 핵이 자위용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고,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잘못된 주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틀렸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도 폐기됐음을 공포하는 등 과거 같은 노력으로는 북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³⁰⁾ 정 의원은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데 중국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사전에 잘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핵도미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³¹⁾ 따라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²⁾ 한미동맹이 매우 긴밀하지만 국가이익이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자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독자적 핵보유의 진지한 검토를 주장하였다.³³⁾

북한이 소규모의 핵능력으로 핵강대국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이론상으로 일견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³⁴⁾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면, 북한의 핵은 이론상으로도 쉽게 포기시키기 어렵다. 독자적 핵개발론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선택이므로 북핵 문제 해결 시 우리도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 핵개발론을 현실화하려면 NPT 체제를 탈퇴해야 하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북한 비핵화의 명분이 사라지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추락하고 따라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써 반박되고 있다. 또 “핵무장은 국제법상 불법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 한미동맹체제에서 불필요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³⁵⁾

2. 전술핵 재도입론

전술핵 재도입론 또는 전술핵 재배치론은 지난 1991년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하여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실질적인 위협이 된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핵 억제력의 보유가 필요하지만, NPT 체제 아래서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론은 송대성 박사처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때까지 잠정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고,³⁶⁾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처럼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 등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

30) 정몽준, “北 막기 위해선 우리 핵무장 허용해야,” 『머니투데이』, 2013. 2. 13.

31) 정몽준, “北 막기 위해선 우리 핵무장 허용해야,” 『머니투데이』, 2013. 2. 13; 정몽준, “北核 해결할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조선일보』, 2013. 4. 15.

32) 정몽준, “北核 해결할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조선일보』, 2013. 4. 15.

33) 김대중, “한국도 핵보유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긴급토론회 자료, 2013. 3. 18.

34) 최소억제는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대규모 핵보유국을 억제시키기 위한 개념으로서,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소수의 표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억제를 달성”하는 개념이다. 박휘락,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2011년 여름), p107.

35) 전봉근, “핵무장은 옵션이 아니다,” 『한국일보』, 2013. 3. 7.

36) “핵에는 핵...北에 맞서 南도 핵무장해야,” 『동아일보』, 2013. 3. 19.

치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³⁷⁾ 정몽준 의원도 독자적인 핵개발론 이외에 전술핵 재도입론을 주장하고 있다. 송대성 박사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여 한국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전술핵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정몽준 의원은 “전술핵은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재도입하더라도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모든 것을 1992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뿐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³⁸⁾

3. 핵우산 강화론 또는 강화된 확장억제론

핵우산 강화론 또는 강화된 확장억제론은 현실론으로서 한국 및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리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또 전술핵 재배치론도 ‘핵 없는 세계’를 비전으로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볼 때 사실상 어려우며 만약 추진될 경우 국내적인 정치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을 선언하고 핵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연합방어훈련 과정에서 미국이 B-52, B-2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사이안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공개하는 등 군사적 무력시위를 강화한 것은 강화된 확장억제론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의 대표적인 주장자는 중앙일보의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이다. 그는 한국의 독자 핵개발론과 전술핵 도입론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전술핵을 탑재한 미국 핵잠수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해 북한을 위협·감시”하자고 제안하였다.³⁹⁾ 그는 동시에 선제핵타격 능력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4. 선제 핵타격론

선제핵타격론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찢어진 핵우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핵 이외의 방식을 통해 북한의 핵을 억제하려는 논리이다. 한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임시조직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능동적

37) “전략권 이양 연기·전술핵 재배치해야,” 『서울경제』, 2013. 2. 14.

(<http://economy.hankooki.com/service/print/Print.php?po=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2/e2013021417430696380.htm>) (검색일: 2013.3.14).

38) 정몽준, “모든 방법 강구 찢어진 핵우산 고쳐야,” 『뉴스스』, 2013. 2. 18.

39) 김영희, “전술핵과 독자 핵개발은 환상이다,” 『중앙일보』, 2013. 3. 1; 김영희, “전술핵으로 무장된 핵잠수함의 교대 배치가 현실적 대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간담토론회 자료, 2013. 3. 18.

억제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으로 도발하려 할 때 북한 지휘체계와 주요 공격수단을 미리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춰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이다.⁴⁰⁾

능동적 억제전략은 선제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고 주장되고 있다.⁴¹⁾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는 2013년 4월 1일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에 입각하여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면서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이 커지면 징후 포착 30분 이내에 도발 원점을 압도적으로 선제타격한다는 것이다.⁴²⁾

5. 북한체제 변화론 등 기타 방안

북한체제변화론은 북한 핵과 북한체제는 분리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생존의 전제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이 논리의 주장자는 새누리당의 이인제 의원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현 체제의 지속을 고수하는 한 핵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핵화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³⁾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 → 제재 → 물리적 수단 활용’이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즉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한 대북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그래도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면 중국이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그때 가서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이 밖에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북핵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로 연기하는 방안, 북한의 대남 도발 유사시 압도적 응징 보복전력 확보 등 첨단전력을 중심으로 군사적 억지력의 강화, 대중·대미 협상력의 강화 등의 방안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다.

40) 장일현, “안보총괄점검회의, 국방전략 수정 논의 ‘때리면 반격’서 ‘때릴 생각도 못하게 하겠다’로, ‘공격조짐엔 先攻’ 내세워 능동적 억제전략 추진,” 『조선일보』, 2010. 9. 4, p. A5; 박휘락,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2011년 여름), p. 102 재인용.

41) 박휘락, 위의 논문, p. 118.

42) 『조선일보』, 2013. 4. 2; 『중앙일보』, 2013. 4. 2.

43) 이인제, “비핵화 목표는 고수하되, 북의 내부변화 목표해야,”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긴급토론회 자료, 2013. 3. 18.

44) 송민순, “외교, 제재, 물리적 수단이라는 3단계 접근 방식이 바람직,”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 긴급토론회 자료, 2013. 3. 18.

IV. 결론

북한의 핵개발은 이제 북한의 체제 생존전략을 넘어 국가발전 전략으로 진화되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의 토대 위에서 경제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의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는 핵무기 능력의 증대에 있다. 북한의 유일 지배 통치논리가 지속된다면 김정은의 통치 아래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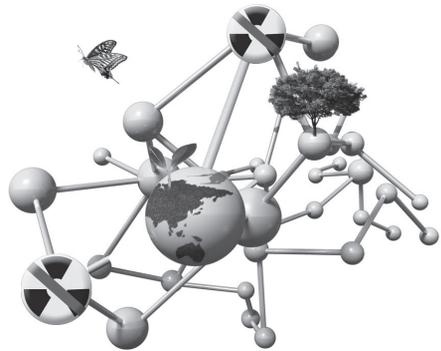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대로 “북한의 핵 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며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⁴⁵⁾ 북한 핵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나아가 국제질서의 안정에 도전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핵 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고 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한 번의 백가쟁명(百家爭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새로운 전략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자면, 무엇보다도 그 전략과 방안에 대해 국내·외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 대안의 콘세서스는 신뢰를 통해 쌓여질 것이다. 바로 신뢰가 문제 해결의 튼튼한 토대이자 열쇠의 역할을 할 것이다.

45) “차대통령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동아일보』, 2013. 3. 19.

정재호 (서울대)

진창수 (세종연구소)

서주석 (국방연구원)



| 라운드 테이블 |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

- 동북아의 대안적 아키텍처 구상
전재성 (서울대)
- 과학기술과 평화
이영희 (가톨릭대)
-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오수연 (소설가)
- 패널
변진흥 (종교인평화회의)
서균렬 (서울대)
이태수 (인제대)

동북아의 대안적 아키텍처 구상

전재성 (서울대)

I. 서론

동북아의 국제관계는 다양한 논리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화와 정보화 같은, 근대를 넘어서는 급변하는 조류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민족주의 심지어는 전통시대 동아시아를 모델로 하는 담론도 팽배해 있다. 더불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같은 거대한 세력균형의 변화 또한 일어나고 있다. 각 국가는 자국의 힘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가치를 실현하는 동북아의 아키텍처를 만들어가기 위해 각 이슈영역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문제가 동북아의 지역 단위 문제와 어떻게 결합하는가는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북핵 문제의 근원은 북한이라는 정치체의 성격과 운명에 관한 것이고 보면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북한의 지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다자주의 협력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비단 북한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발전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자주의 안보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동북아에서 북한 문제는 비단 부정적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동북아 국제관계의 기본 논리를 변화시킬 기회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과 북의 대결이 심화되고 북한의 미래를 둘러싼 미·중 간의 대결, 더 나아가 동북아의 분열이 심화된다면 북한 문제 자체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강대국 간의 전략적 불신도 심화될 수 있다.

작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동북아 국가 간의 안보협력과 경쟁을 종착점을 모르고 빠르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올해 2월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이후 빠른 속도로 한반도와 북미 관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동북아

모든 국가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첫 무대에서 북한은 최초의 본격적 행보를 시작한 주인공이 되었다.

한국은 21세기 들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중견국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단순히 단기적 국익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지역의 아키텍처, 그리고 지구적 규범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 문제를 다루어 갈 때, 단순히 남북관계 발전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역차원의 협력구도 창출, 미·중 간의 협력 증진, 그리고 핵비확산과 관련된 지구적 규범 강화의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I. 북한 병진전략의 도전

동북아 국가들이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지역 내 경제적 상호의존이 활발해지고, 시민 사회 간 교류가 빈번해지며, 지구적 차원의 거버넌스 흐름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전체의 제도적 협력을 추구하는 모습도 강해지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제도들을 만들어가며 나름대로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지식외교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북한만은 자신의 안위에 골몰하여 지역 단위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전략 역시 자국의 이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고, 중국이 한미와 협력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국면에 강한 불만을 보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 가운데 지역 국제정치를 고려하는 모습은 결여되어 있다.

북한이 향후 선택할 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의 선택은 주변국가의 대북 정책에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위 병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보는 세계는 “미국이...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핵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추구하고 있고, “적들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위협 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채택한다고 발표하였다.

병진전략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로선”으로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로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라는 논리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병진전략이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병진전략 첫째, 핵무기가 선군의 중요 수단이므로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경제강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병진로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려 한다고 논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이 김정일 정권 시기에 선군과 강성대국을 논할 때 군사에 대해 지나친 강조를 하는 것에 비해 병진전략은 경제에 대해 상당한 강조를 하고 있음은 일면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특히 자신의 자원을 국방보다 경제에 돌리려는 것은 정권 안정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보면 선군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주변국에 유리한 상황이 있다. 그러나 반면 저비용의 효율적 국방을 위해 핵무력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비핵화를 추구하는 주변국에 큰 도전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의 핵공격위협, 주변국의 제도전복 기도 등 안전에 관한 것이다. 북한이 핵에 기대지 않고 안보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가가 향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은 일단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장기 노선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주변국이 원하는 핵포기와 선경제로의 결단과는 다른 방향이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점은 첫째, 북한이 수차에 걸쳐 비핵화를 완전히 거부한다고 한 것이 향후 조건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점, 둘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 셋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가의 내구성에 관한 것, 넷째, 북한의 병진전략을 원론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주변국이 있는지 등이다.

III. 북한 문제와 동북아 아키텍처

1. 한·미 협력과 북한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최근 케리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으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전에도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노딜런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언급을 통해 대북 정책의 주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 북핵 불승인 및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 추진, 북한의 도발과 비랑끝 전술에 대한 외교적 보상 불용, 북한이 비핵화 등 노력 추진 시 북한에 대한 전면적 지원 고려 등이다.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국, 중국, 일본 방문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첫째,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둘째,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위협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고 논하고 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하여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넷째,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전략적 변화를 추구할 경우,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¹⁾

문제는 이러한 한미의 공동입장이 북한의 병진 전략 중 핵무력건설 부분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와 전략적 변화를 촉구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전제로 대북 협력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로 선회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가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핵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논하고 있다.²⁾ 이는 미국의 안보위협이 사라졌다고 북한이 판단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세계의 비핵화와 일맥상통한다면 논리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미가 향후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로 선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북한의 자체 논리상 비핵화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도록 출구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1)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 성명』, 2013년 4월 12일

2)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법령-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2013년 4월 1일

2. 미·중 협력과 북한 문제

북한 문제 해결을 둘러싼 한·미의 국제공조가 미·중의 국제공조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중요한 관건이다. 북한 문제는 미·중의 전략적 불신과 세력균형 상의 대결을 악화시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고, 북핵과 북한의 미래를 둘러싼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미중의 전반적 전략관계를 협력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케리 장관은 방한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이 이례적이며 중요한 합의라고 간주하며, 양국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며, 6자회담의 다음 회의가 열려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기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함께 요청한다는 점, 북한 문제 해결이 이란 문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중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평화적 비핵화의 공동목표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향후 9·19 공동성명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하며 양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를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좀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고위급에서 내실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다.³⁾

문제는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케리 장관의 순방 목적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⁴⁾ 중국은 미국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큼 미국 역시 중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더불어 케리 장관이 보다 유화적 대중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미 2기에 접어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속에서 입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과 북한 문제가 어떠한 형태의 연결점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은 이번 순방 중에 한국, 일본과의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3) John Kerry, "Solo Press Availability in Beijing, China" April 13, 2013.

4) *People's Daily Online*, "What's behind John Kerry's East Asian Tour?", April 17, 2013.

북한을 둘러싼 미·중 관계는 양국의 근본적인 전략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동맹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4월에 발표된 국방백서에서 상황 및 위협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동아시아 동맹체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중국은 다양한 복합적 안보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국가들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며 상황을 종종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리 및 이익에 관해 어떤 주변국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며 뒤이어 일본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동맹이란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자국 안보에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⁵⁾

미국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2+2 전략 대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미·중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케리 장관의 순방에서도 미국은 글로벌 경제안보와 재정안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 중국은 이미 강대국이며 국제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점, 중국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둔 건설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이슈들로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에 관해 긴장을 상승시키지 말고 평화와 안전,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일방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이 협력하여 북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미·중의 전략적 불신이 해소되고 향후 동북아의 세력전이 상황 속에서 한국의 안정과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 문제를 통한 미·중의 새로운 협력이 도모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괌과 하와이를 위협하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면 지금과 같은 방위태세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통해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강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한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것이다.

5) "China still faces multiple and complicated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The issues of subsistence and development security and the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threats to security are interwoven. Therefore, China has an arduous task to safeguard its national unification, territorial integ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Some country has strengthened its Asia-Pacific military alliances, expanded it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and frequently makes the situation there tenser. On the issues concerning China'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some neighboring countries are taking actions that complicate or exacerbate the situation, and Japan is making trouble over the issue of the Diaoyu Islands." The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China's cabinet,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s Armed Forces", *Xinhua* April 16, 2013.

한국이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병진을 넘어 선경제 전략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핵을 가진 한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무디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더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대중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신빙성 있게 전달되려면 한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지역이 강대국 간 협력, 특히 미중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⁶⁾

IV. 한국의 대북 전략 목표

한국의 대북 전략의 목표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핵선군 전략을 포기하고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표준에 맞는 사회로 탈바꿈하는 기초를 이루고 남북 간의 공존과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핵 프로세스가 불가역적 자리 잡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정립되는 동시에 북한의 국제화를 위한 주변국가들의 대북 협력 체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병진전략이 비핵화를 부정하고 핵무력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핵포기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향후 대북 전략과 양립가능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자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적으로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상 북한의 병진전략을 전제로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이 향후 대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은 불가피하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체제와 정권에 대한 위협을 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북한의 행위와 정책이 위협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6) 이 글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일본과 러시아가 취하는 대북 전략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미·일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북한 문제를 둘러싼 협력을 다짐했으며 더 나아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미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의 외교담당 보좌관 유리 우사코프와 회담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사코프는 '러시아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설정한다는데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전략적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불가침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관계이어야 한다. 또한 그간의 합의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 향후 한국이 설계하는 대북 전략 속에 남과 북의 장기적 관계 설정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⁷⁾

또 한가지 핵심적 사항은 북한이 설정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 스스로 깨닫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핵무력을 가지고 있는 한 주변국의 대북 지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 상 외부지원 없는 장기적 경제건설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경제는 북한 정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경계하겠지만 지금부터 보다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병진이 가져올 파국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핵 없는 안보를 확신하도록 유도하고 경제건설을 통해 정상적인 발전의 행로를 택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주변국 역시 북한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다 합리적 과정을 통해 추구할 수 있도록 전략과 인식, 정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대북 전략은 미래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외교정책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의 핵심 전략목적이지만, 이를 통해 지역 내 한국의 지위가 제한되거나 정책자원을 소비하게 된다면 이는 또한 삼갈 일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 내 한국의 외교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 차원을 결합해야 한다.

북한 문제는 이제 성격상 동북아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고, 향후 지역 세력균형의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지구적 비확산 레짐의 문제와도 상통한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를 위한 북핵평화체제구축, 북한의 선경제로의 변환 등을 위해 국제협력체제를 마련하는데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의 한반도가 주변국들의 이익에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야 할 것이다.

7) 『북한국제화 201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pp 21~22

과학기술과 평화

이영희 (가톨릭대)

통상적으로 과학기술, 특히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는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서 객관적인 진리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또는 사회적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과학자사회의 전통적 믿음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믿음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이 주장한 과학자사회의 네 가지의 규범구조였다. 머튼에 따르면, 과학자사회는 첫째, 과학의 성과가 개인이 아니라 과학자공동체 전체의 것이라는 의미의 공유주의(communism), 둘째, 과학활동에 있어서 성, 인종, 계급 등의 특수주의적 가치의 배제를 의미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 셋째,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학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불편 부당성(disinterestedness), 넷째, 최종 증명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엄격한 규칙에 따라 과학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직화한 회의주의(organized skepticism) 등의 에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지식은 여타의 지식과는 차별화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세기 과학기술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과학기술이 머튼이 주장했던 규범 구조에 항상 순응하면서 발전해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는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계약이 맺어진다. 국가는 과학기술이 사회적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대가로 과학기술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취하였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과학고문관을 지낸 바 있는 바네버 부쉬(Vannevar Bush) 박사는 1945년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 『과학: 끝없는 프론티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에서 이를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의 핵심적인 축 중의 하나가 바로 군사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였다.

그리하여 20세기의 중반 과학기술은 군사화의 거센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은 개인적이거나 소규모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른바 ‘빅 사이언스’)로 바뀌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은 국방성이 차지하였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자들 자신도 스스로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 결국 이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자체가 머튼이 강조하던 과학자사회의 규범이나 규제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활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냉전 시기 과학기술자들은 ‘조국방어’와 ‘자유체제수호’라는 명분에 따라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등 첨단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대량 살상무기들을 개발하는 데 동원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였다.

젊은 이론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이끈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약 3,000명의 과학자가 참여하였고 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 산물로 나온 우라늄 폭탄 ‘리틀 보이’ (Little Boy)와 플루토늄 폭탄 ‘팻 맨’ (Fat Man)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일본의 항복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두 도시에서 그해 말까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을 방사능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과학기술과 평화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진보의 상징이었다. 근대의 태동기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역설한 “아는 것이 힘이다”는 명제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둔 과학이 사회진보의 원동력을 갈파한 것이었고,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러한 과학주의에 기반을 둔 계몽주의적 이상은 근대성(modernity)의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진보의 상징이던 과학기술이 원자폭탄을 낳게 되고, 아울러 그 뒤를 이어 일부 핵과학자들의 주도로[대표적으로 에드워드 텔러, 그는 <Dr. Strangelove>라는 영화의 ‘미친 과학자’ 캐릭터의 탄생 배경이었다] 수소폭탄 개발 경쟁 격화되면서 사람들은 과학기술은 무조건 진보라는 생각을 접게 되고,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전통적으로 대중들은 과학기술에 대해 프로티어의 개척자이자 인류문명의 증진자라는 생산적·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지만, 맨해튼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인명과 윤리, 인간성, 인권의 파괴자라는 파괴적·부정적 이미지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과학기술자들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과학기술을 외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많은 과학자가 핵무기 통제와 핵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과학자들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원자

과학자연맹' (후에 '미국과학자연맹'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으로 개칭)을 결성하고 핵무기 통제와 핵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학문적으로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던 과학자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과학자는 연구만 하면 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이용은 정치가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에 반대하고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과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의 생각은 핵통제 평화주의 운동에 대한 그의 헌신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1955년에 핵무기로 인한 인류 절멸의 위기 상황에서 세계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소위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 그가 앞장서 서명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은 2년 뒤에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핵군축을 주장하는 평화주의 과학자단체인 '퍼그워시' (Pugwash)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도 1950년대 중반부터 핵실험 중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1963년 결국 대기권 내, 수중, 우주공간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한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TBT)이 체결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0~70년대 베트남전쟁 동안 네이팜탄과 같은 엄청난 살상무기를 만들고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데 과학기술이 동원된 것을 또다시 목격하게 된 많은 양식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우려하는 과학자연맹'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UCS)이나 '민중을 위한 과학' (Science for the People, SftP), '사회·정치 행동을 위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Social and Political Action, SESPA),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영국 협회' (British Society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Science, BSSRS)와 같은 과학기술자 단체를 만들어 전쟁을 위해 과학기술이 쓰이는 것에 반대하고 과학기술은 평화를 위해 활용되어야 함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이처럼 2차 대전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자사회 내에 과학기술의 군사 무기화에 대한 성찰성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자들 스스로에 의한 과학기술의 평화화 운동이 확산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새로운 흐름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나는 1970년대 이후에 학술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인문사회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이에 따라 많은 대학에 '과학기술과 사회'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혹은 '과학기술학'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이라는 이름의 학문적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되어 과학기술의 인문학적이고 사회적인 함의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과학기술과 전쟁, 혹은 과학기술과 평화라는 주제도 거기에서 다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정책이나 연구개발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의 등장이다. 인권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의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운동들이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과 평화라는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둘러싸고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혹은 ‘재활용’)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과학기술과 평화의 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1953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내세워 원자력발전의 길을 열었다. 우리나라도 그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을 위한 기술들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는데, 미국은 핵확산 우려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마침 2014년까지는 이 협정이 새로 체결되어야 하므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핵주권’을 보장받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처리는 핵무장 가능성을 높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현재 포화상태에 가까이 쌓여가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단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지역주민이나 일반시민도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프로세스를 곧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진정성이 담보된 발표라면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원자력이나 핵폐기물과 같이 언 듯 보기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과학기술 이슈들이 그러하듯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 혹은 정치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엉켜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는, 설혹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재처리 요구가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문제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의 관점에서 핵무장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요구는 과학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또 다른 시민적 권리, 즉 ‘과학 기술적 시민권’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과학 기술적 시민권’의 개념이 과학기술에 평화의 가치를 더 많이 불어넣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오수연 (소설가)

젊은 회사원들은 걱정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엇그제 어떤 분이 외국에서 입국했기 때문이다. 북한, 이란, 미국, 핵, 핵..... TV에서야 뭐라 하건 그들은 그 분이 귀국하기 이전부터도 차라리 봄 패션이 관심이었으니, 그분의 집안사람들이 출국한다는 뉴스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정원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텐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지 말지 제일 잘 아는 그분은, 모 재벌 총수다. 그의 귀국은 곧 전쟁이 안 난다는 지표가 되며, 그의 가족들이 해외로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심이 된다. 반대로 혹시 그가 일가를 이끌고 출국한다면, 그건 전쟁이 난다는 지표일 터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도 도망갈 수 있을까? 젊은이들은 웃었다.

“그럴 리가!”

우리와 함께

2003년에 나는 ‘한국작가회의’의 파견 작가로서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에 갔었다. 내가 본 팔레스타인 분쟁은 막상막하 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점령이었으며,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일방적인 침공이었다. 무엇보다 양자 공히 TV에 흔히 나왔던 무력 충돌 장면, 땅과 하늘에서 무기가 작렬하는 극적인 순간만이 아니었다. 그전과 이후의 길고도 지루한 과정 전체였다.

부상자로 넘치는 이라크 종합병원에 약품, 음식, 담요는 물론, 화장실을 유지할 물이 없었다. 가정에서는 프로판 가스를 구할 수 없어 주부들이 조악한 석유 버너로 밥을 짓다가 버너가 터져 전신 화상을 입었다. 기름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셈이라는 산유국의 국민이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 앞에서 밤을 새우고, 종종 서로 칼부림까지 했다. 칼부림은 신호등도 교통정찰도 없는 사거리에서도 벌어지기 마련이었다.

모든 관공서, 특히 '석유청'은 폭삭 주저앉고 남은 집기는 인근 주민의 하루 생계를 위해 들러나갔다. 미군의 포탄은 수메르 유적이 있던 국립 박물관의 정면 벽을 비롯하여 다리와 고가도로에도 정확히 구멍을 뚫어놓아, 아슬아슬 지나다 보면 시퍼런 유프라테스 강물이 내려다보였다. 걸핏하면 여기저기 잔해에서 불이 나고, 마땅히 끝 방도도 없고, 구리를 꺼내어 팔려고 전선을 잘라다가 태우는 연기까지 더해져 하늘은 늘 검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아 있지 않으리라는 구약의 매서운 저주가 구현된 듯했다. 한국의 몇몇 건설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었을지라도 몰라도, 그 돌들은 이라크 사람들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수 대에 걸쳐 쌓아놓은 것이었다. 그 당시 이라크에 있는 동안만큼은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저지른 불효를 많이 반성했다. 6·25 전쟁을 겪은 그 세대는, 돌 위에 돌 하나씩 다시 올려놓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5월 1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걸프만에서 귀환하는 미군 항공모함에 올라 이라크전 주요전투 종료, 즉 사실상의 전쟁 종료를 멋지게 선언했지만, 이라크에서는 기온이 45도에 육박하는 8월까지 수도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이없는 인플레이션 채소 한 다발을 사려도 돈을 뭉치로 내야 하는데, 상인들은 돈을 받으면 조폐국이 폭격당했을 때 대량으로 밀반출되었다는 무효 지폐가 아닌지 번호를 확인하곤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가떨어졌다. 자존심 강한 무슬림 문화권에서 여자들이 구걸에 나서고, 머리를 노랑게 물들인 아가씨가 미군 탱크 사이를 누비며, 어디서나 아동 노동은 기본이요 코흘리개들까지 담배 상자를 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나오지 못한 아이들은 집안에서 조용히 시들어갔을 것이다. 의료봉사를 오신 한국 의사들이 당뇨병을 앓는 소녀에게 꿈도 못 꿀 인슐린을 주고 간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인슐린을 적절히 냉장 보관하기 위해 자가 발전기를 24시간 동안 돌릴 능력이 소녀의 부모에게도, 동네 보건소에도 없었다.

전쟁은 국가적 차원의 일이겠으나, 그렇다고 그 피해를 전 국민이 n분의 1씩 골고루 분담하는 건 아니었다. 강풍이 불어 닥쳤을 때 어린나무와 약한 잎이 먼저 뜯겨나가듯이, 평소에도 가까스로 버티던 대다수 빈곤층이 우선 붕괴했다. 전쟁을 겪어내는 데도 계급적 차이가 있다. 부자들은 전쟁 전에 달아날 기회를 잡는 데나, 심지어 징병을 기피하는 데나, 또 전쟁 후 피해를 견디는 데나 유리하다. 그리고 더욱 불리한 사람들일수록, 말하자면 더욱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전쟁을 할까 말까 같은 국가적 결정권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들은 사회 권력층, 권력자와 부자들이다. 그들이 전쟁을 결정

하면, 가난한 이들이 그들보다 먼저 죽는다.

사람 후세인이 최후로 ‘결사 항전’을 택했을 때,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나? 저 자신과 패거리였다. ‘이라크의 아들’을 자처한 그는 아버지로도 머무르지 않고 결국 이라크 자체가 되었다. 장기간 미국의 경제 봉쇄로 쫓쫓 굶은 이라크 사람들은 다 그 이라크의 부속물에 불과해서, 전부 그보다 앞장서서 결사하고 항전해야만 했다. 아마도 그는 처형장에서 억울했을 터, 자기가 없어지는데 어찌 이라크에 인간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 그가 정말로 이라크의 아들이었다면 다른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다.

누구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감수하시려거든, 우리와 함께하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려거든, 그 무슨 이유로도 전쟁을 택하지 마소서.

제일 모를 것

나는 오히려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되어버렸다. 이를 테면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맘 놓고 비난하지 못하겠다. 핵폭탄은 당연히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당연히, 모든 국가에서 말이다. 지구를 수백 번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을 미국이, 중동 전역을 그만큼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을 이스라엘이 가진 상황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은 그들의 명백한 타깃 이란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의 인권 문제는 외세 침략의 빌미가 되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아사드가 독재자임을 모르지 않는 헤즈볼라가 어쩔 수 없이 그를 지원하는 등등. 내가 만나본 아랍인들 중에는 서양 언론에서 아랍 인권 문제를 떠들면 알레르기가 돋는다는 이들도 있었다. 그다음에는 침략이 이어지고, 침략이 더 큰 인권 유린이므로, UN의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미국의 ‘이라크 민중의 해방’ 처럼 명분이야 좋으나, 그 UN이 어떤 UN인가? 하지만 그렇다고 아랍에 있는 인권 문제를 외세 침략에 반대하기 위해 떠들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호전적인 세력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통렬히 제기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쪽이 침묵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을 돌아보면 평화가 올고, 평화를 돌아보면 인권이 우냐? 정녕 그럴 수밖에 없을까?

작년 말까지 나는 팔레스타인에 네 차례 갔었는데 적어도 서안 지구는 점차 평화로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일상을 옥죄던 이스라엘 검문소가 점점 줄어들었고, 한밤중에

이스라엘 탱크가 들이닥치는 일도 이제는 드물다고 한다. 거리는 활기차고 상점마다 물건이 그득하다. 그렇지만 요즘이 제2차 인티파다 와중이던 2003년보다 평화롭다고 말하는 나의 지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북부 3대 도시에서 총구를 치켜든 이스라엘 병사들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팽팽히 대치하고 골목을 걸어갈지라도 어디선가 날아올 총알을 의식해야 했던,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고 외국인 평화운동가도 3명이 죽었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살공격자의 폭탄이 펑펑 터지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검문소를 떠났지만 시설은 남겨두었다. 그들은 언제라도 자기들이 원할 때 돌아올 수 있으며,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이제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가를 굳이 이스라엘 탱크가 들어와서 잡아갈 필요가 없으니, 팔레스타인 경찰이 대신 잡아주는 덕분이다. 지난번에 나는 라말라에서 버스를 타고 나블루스로 가다가 놀랐다. 한 시간가량 차가 달리는 동안 거의 내내 왼쪽 아니면 오른쪽, 혹은 양쪽에 이스라엘 점령촌이 늘어서 있기 때문이었다. 정치 좋고 전망 환한 봉우리, 곧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는 이스라엘 점령촌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 하루 이들의 일도 아니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버스에 탄 팔레스타인 승객들은 대개 자고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제닌으로 가는 길도, 제리코로 가는 길도 역시 그랬다. 나는 이 사람들이 매일 눈뜨고 그걸 쳐다보다가는 답답해서 못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또 다른 인티파다를 예감하거나 기대하고 있었다.

시끄럽지만 않으면 평화일까. 테러나 소요가 안 일어나기만 하면 될까. 강압 아래 짝소리 못하는 굴종, 부당한 줄도 모르고 희희낙락하는 마비, 대충 악수하고 넘어가는 타협이 평화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평화라 일러 추구해야 하는가. 가장 난감하다.

막내가 자랄 때까지는

지난 3월 20일은 미국이 이라크에 폭격을 개시한 지 10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그 며칠 전에 당시 “전쟁은 답이 아니다(사담 후세인의 독재에 대한 해결책이 전쟁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뭉쳤던 ‘한국-이라크 반전 평화팀’의 일원 중에 나를 포함하여 셋이 모였다. 10년 전 그즈음 한 명은 국내에서 뒤늦게 출발할 팀원들에게 고추장 따위를 챙겨주고 있었고, 또 한 명은 선발팀으로 이라크로 들어가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요르단으로 나와 편집 중이었고, 나는 팔레스타인에 있었다. 전쟁이 날까? 이래도 날까? 이래도? 난다, 난다, 난다..... 이른바 D-day가 다가올수록 한국 인사동 반전팀 사무실의 병역거부자들 및 요르단 숙소의 반전팀원들과 담배 연기

뿌연 팔레스타인 카페의 손님들은 TV에서 눈을 떼 수 없었다. 마침내 이라크의 항구 바스라가 TV 화면 속에서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순간, 세 군데 다 잠잠했다. 세 군데 어디서든, 그 누구도, “아!”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외국인의 짧은 간접 경험이 이랬을진대, 2차대전 이후로 늘 전쟁이 난다, 난다, 난다, 하면서 살아온 아랍인들은 어떨지. 이라크의 한 정신과의사는 “걸프전 이전부터 이라크전 후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 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직 이라크는 복구되지 못했으니 그 의사의 치료 대상 인구는 엄청 늘어났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도 교육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바가 아이들의 정신적 상흔이었다. 그런데 반세기 넘게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 종전되지 않은 휴전 상태로 살아온 우리는 정상일까?

원로학자 장희익은 국가가 ‘불과 몇 천년 전에 탄생하여 진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의 지혜가 없는 존재’, 또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으면서도 막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런 존재’ 라 했다.

이라크 파병 논란이 일어났을 때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는데,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답변도 똑같은 70%였다. 하지만 그 국익이라는 것도 전쟁의 피해처럼, n분의 1로 공평히 분배될 리가 없다. 어쩌면 국가는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의지마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럼 누가 지켜주지? 힘없고 별다른 정보를 얻을 재간도 없는 우리 자신 말고는, 나는 다른 답을 찾지 못하겠다.

변진홍 (종교인평화회의)

서균렬 (서울대)

이태수 (인제대)



| 부 록 |

- 北朝鮮の核開発計画に対する日本の対応
中戸祐夫(命館大学国際関係学部)
- 참가자 약력

北朝鮮の核開発計画に対する日本の対応

— 対応型関与 (Responsive Engagement) の観点から —

中戸祐夫(命館大学国際関係学部)

はじめに

日本の対外政策をめぐっては次の二つの相反する見解が存在する。第1に、日本の対外政策の対米従属的な側面を強調する議論である。こうした議論は日本では決して珍しいものではなく、右派および左派の両方から日本を従属国家として規定する議論は数多く存在する。たとえば、元外務官僚の天木直人は最近の著書で日本は対米従属から自立すべきであるとの議論を展開している¹。また、オーストラリア国立大学のガバン・マコーマックは属国 (Client State) を「植民地でも傀儡国でもない、うわべだけでも独立国家の体裁があるが、自国の利益よりは、他国の要求を優先させる国家」と定義し、日本が米国の指示に従い、米国依存を取り入れている点を主張する²。このように、日本が米国に対して従属的な側面があることはしばしば議論されるが、米国と利益が対立する場合においても日本が必ずしも対米協調を示すとは限らない事例を探すことはそれほど困難ではない。

一方、日本の対外政策をめぐっては日本の反動的な側面を強調する見解も存在する³。とりわけ、日本の核武装論については諸外国および日本国内においてもその可能性について様々な機会に議論されてきた。北朝鮮の第3次核実験後、ブッシュ政権下で核不拡散問題を担当したジョン・ボルトン元国務次官は「北朝鮮の脅威にどう応えるか」という論文を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に寄稿し、日本および韓国の核武装という政策選択を提起している⁴。また、日本の政界においてもたとえば安倍首相もかつて日本の核武装の可能性について言及したこともある。2002年2月、安倍晋三官房副長官(当時)が早稲田大学の非公開講演会で「小型であれば原子爆弾の保有も問題ない」と発言し、これに関連して福田官房長官(当時)が「私個人の理屈から言えば持てるだろう」と日本の核兵器保有は可能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た。これまでも日本の核武装論は様々な文脈で提起されてきたが、日本自身が日本の核武装を放棄しており、少なくとも予見しうる将来において日本が核武装へ踏み切る可能性は極めて少ない⁵。

以上のように日本の対外政策をめぐって対立する見解や概念規定が生じる要因は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のプレゼンスの欠如と同様に、諸外国の対日認識や日本の一部保守派の見解がたびたびメディアによって大きく取り上げられるからでもある。すなわち、一方では、日本は米国の要求に従うだけの従属国家であり、それは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ついても同

様であると規定されている。他方では、それとはまったく異なって核兵器によって武装するという攻撃的かつ反動的な日本の国家像が提起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対する相反した議論の混在を理解するために、本稿では「対応型関与」(responsive engagement) という観点から北朝鮮の核開発計画に関連した問題に対する日本の対応について検討する。

筆者はかつて小泉政権下の北朝鮮政策を対応型関与と概念規定したが、本稿では北朝鮮の核開発プログラムに関連する 3 つの事例を取り上げて、対応型関与の観点から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関するいくつかの議論を検討する⁶。本稿では、まず、I において日本の対北朝鮮政策の目的および運用原則を明らかにしながら日本の対北朝鮮政策を概念化する。次に、II では、国際要因、二国間要因、国内要因などを含む日本の対北朝鮮政策を規定する制約要因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そして、III は (1) 日本の核武装論、(2) 日本の経済制裁、(3) 日米間の政策相違一の 3 点を取り上げて、対応型関与の観点から検討を試みる。日本の対北朝鮮政策をめぐるのは、属国論あるいは核武装論といった点から議論がなされてきたが、これらに対応国家論の観点から再検討してみよう。最後に、本稿の議論を要約する。

I. 日本の対北朝鮮政策：対応型関与

(1) 日本の対北朝鮮政策の目的

ここでは日本の対北朝鮮政策の目的を次の 3 つの点に要約する。第 1 に、日本の北朝鮮政策の目的は北朝鮮の体制を転覆することではなく、むしろ北朝鮮の危険な対外行動を管理し、無効化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⁷。その意味で、日本もまた朝鮮半島との平和的共存を追求しており、それゆえに軍事的紛争を避ける漸進的な外交的アプローチを選好している。これらの理由によって、日本は北朝鮮が核開発プログラムおよび開発、生産、中長距離ミサイルの配備、ミサイルおよびミサイル部品、ミサイル関連技術の輸出などを終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日本はまた北朝鮮のスパイ船が日本の領海に侵入したり、外貨の偽造や麻薬取引を行ったりすることなどを防ぐ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る。

第 2 に、北朝鮮の政治および経済システムの性質を少しずつ変化させることである⁸。北朝鮮の変化の兆候は 2001 年以降、断続的に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北朝鮮は 2002 年 7 月には経済改革措置を実施したが、その結果、配給制度は停止されて賃金や穀物の価格などの上昇をもたらした。近年ではデノミを断行したり、中朝合同プロジェクトを推進したりしている。とりわけ、新たに指導者となった金正恩第一書記の開放的な統治スタイルによって北朝鮮の変化の可能性に対する期待も高まっている。このような北朝鮮の変化は北朝鮮がより開かれた体制へと変化する可能性を含むものであったために、日本の対北朝鮮政策の目的は北朝鮮が改革開放の方向へ進むことを促進することにある⁹。そのような文脈から日本の経済援助や協力は北朝鮮経済の活性化に寄与するだけでなく、南北経済協力を後押しし、また、北朝鮮の政治経済体制をより開かれたものにするために活用される

べきものと位置付けられている。

第 3 に、日本の対北朝鮮政策の目的は北朝鮮との国交正常化を成立させることである。北朝鮮と国交を正常化するためには歴史問題の清算と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と安定に寄与する方法で懸案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¹⁰。まず、日本は過去の植民地支配を通して朝鮮半島の人々に対して多大なる被害と苦しみ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があるために、北朝鮮と国交正常化を行うということ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責任を果たすことを意味する。次に、北朝鮮との国交正常化は日本の安全保障に直接的な影響を及ぼす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に寄与すると想定される。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は日本に対する直接的な脅威であり、日本の安全保障の点から撤去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日本人拉致問題や日本に在住する朝鮮人民の扱いなど人道的問題が改善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らの目的を現実化するためには、日本は北朝鮮を孤立させるのではなくて北朝鮮との対話を促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

(2) 対北朝鮮政策実施の 3つの原則

以上のような目的を実施するために、日本はどのような原則に基づいて対北朝鮮政策を実施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か。本稿では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ついては次の 3つの運用原則が適用されていると想定する¹¹。第 1 に、拉致問題、核問題、ミサイルといった日本と北朝鮮の諸懸案を包括的に解決することである。包括的解決とは、拉致問題、日本領海への北朝鮮の侵入問題、ミサイルや核開発プログラムなど日朝間のすべての懸案事項が日朝交渉の過程で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する。とりわけ、日本においては拉致問題が最大の関心になっているために、拉致問題が日本の納得できる範囲で解決されない限り日本は国交正常化交渉を進展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しかしながら、拉致問題の解決は国交正常化を意味するわけではない。日本は拉致問題のみならず核・ミサイル問題を含むその他の懸案事項も解決されない限り日朝国交正常化はしないという原則である。

第 2 に、日本の対北朝鮮経済協力は日朝国交正常化の最終段階においてな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点である。この原則は日朝平壤宣言に明確に述べられている。日朝平壤宣言の第 2 項では、「日本側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側に対して、国交正常化の後、双方が適切と考える期間にわたり、経済協力を実施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この経済協力には無償資金協力、低金利の長期借款供与及び国際機関を通じた人道主義的支援等が含まれている。また、日本と北朝鮮は国交正常化交渉の過程で経済協力の規模や内容について具体的に議論することになるが、その条件は日本が韓国と国交を正常化した際に韓国に提供されたものよりも寛大なもので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点がある。

第 3 に、日本の対北朝鮮政策は米国および韓国との協調を通して北朝鮮との交渉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ある。日本は軍事的な影響力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に、とりわけ核やミサイルなどの軍事安全保障の問題では日米同盟や日米韓の政策協調を追求せざるを得ない。北朝鮮問題には日朝関係だけではなくて北東アジアおよびグローバ

ルな不拡散システムに影響を及ぼす安全保障上の懸案が含まれている。すなわち、核開発、ミサイル開発やミサイル実験、大量破壊兵器はすべてグローバルな不拡散システムの懸案として扱われる問題であり、これらの問題は国際社会がもっとも関心を寄せている分野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は日米同盟および日米韓の政策調整を通して安全保障上の懸案に対処するとともに、対北朝鮮政策をめぐる日米韓の三カ国協調のなかで自らの国益を追求している。

(3) 対応型関与の定義

日本も他の国家と同様に国家の生存といった国益を追求するが、米国や他の大国が国際的な議題の設定や特定のイデオロギーを提唱したり、世界秩序に対する自らのビジョンを促進したりすることで自らの利益を獲得しようとするのとは異なって、日本は所与の国際環境にプラグマティックに対応しつつその中で国益を獲得しようとする¹²。とりわけ、日本は第二次世界大戦以後、覇権国である米国と同盟を締結し、米国の形成した国際秩序および世界戦略のなかで米国に歩調を合わせる形で自国の利益を最大化することを追求してきた。したがって、日本が北朝鮮や他国に対して関与する際に、日本は同時に米国の世界戦略やアジア政策の要求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に、こうした日本の北朝鮮政策を「対応型関与」と規定することは可能であろう¹³。むしろ、日本の対応型関与は国内の懸念や要求にも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意味で、対応型関与という概念は関与する対象国、米国、国内要因に対する対応の組み合わせを含んでいる。すなわち、対応型関与は米国と国内および国際的懸案の複雑な関係によって規定される多面的な対応のシステムであり、そのなかで日本は自らの国益を追求すると想定する。

前節でみた運用原則を踏まえて本稿の分析における日本の対北朝鮮対応型関与の基本的な要素は(1) 米国ファクターによって日本は自立的あるいは自主的な対北朝鮮政策を遂行することに制限が加えられている、(2) 日本は北朝鮮に対して能動的に関与するよりも日米関係および日米韓の政策協調のなかで自国の利益を確保しようとする、(3) 朝鮮半島をめぐる国際環境に対応する際に、日本の北朝鮮政策は国際要因および国内要因によって非体系的かつ不完全な形となる—の3点である。

このように定義された対北朝鮮政策における日本の対応型関与は金大中政権下における積極的な関与、すなわち包容政策と区別される。金大中政権下の和解協力政策は忍耐強く和解、交流、協力を通して北朝鮮を平和的、開放的、改革の方向に漸進的かつ自ら変化することを促す能動的な政策である¹⁴。一方、対応型関与は包容政策と類似の政策目標あるいは方向性をもっていたとしても、積極的に北朝鮮問題に関与するよりは、与えられた国際環境を所与とし、国内および国際的に政治、社会、経済環境の変化に対応しながら当該問題に関与する。また、対応型関与は封じ込め、先制的、懲罰的な要素を含むブッシュ政権初期に掲げられた「強硬な関与」(Hawk engagement)とも異なっている¹⁵。日本は北朝鮮問題に関連して米国や国際社会がとる行動に限定的な軍事的支援の提供や政策協調を実

施するが、究極的な状況で無い限りは日本の対応型関与は軍事分野において北朝鮮に対して強硬な姿勢をとることは想定しない。

こうして見ると、冒頭でみた日本の対北朝鮮政策をめぐる二つの相反した概念規定の何れも日本の対北朝鮮政策の性質を適切に把握しているとは言いがたい。日本は北朝鮮の核兵器に対応するのみならず、米国のグローバル戦略や国内の懸案事項に対しても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に、米国の日本防衛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が揺るがないものである限り日本が核保有に向かうことは想定し難い。また、日本には独自の北朝鮮政策が存在せず、自国の利益よりも他国の要求を優先させるといった属国としての規定は誇張されている。日本は北朝鮮問題に対して能動的に関与はしていないが、米国の対北朝鮮政策に関する要求や課題に対応しつつ、日本独自の課題である拉致問題に関しては国際的な理解を獲得したり、北朝鮮に対する独自制裁を実施したりすることで自らの国益を追求している。

II. 対応型関与の規定要因

ここでは日本の対北朝鮮政策が上で議論したような反応型関与となるいくつかの規定要因について明確にする。

(1) 対米関係

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影響を及ぼす制約条件は数多くあるが、現存する米国との関係は主要な利益でもあり、主たる制約要因でもある。日本は資本、技術、市場を含む国際経済分野における外交的支援などの領域で米国に依存しているばかりではなく、日米安全保障条約を通して日本の安全保障もまた米国に依存している。とりわけ安全保障の分野では、日本は事実上対北朝鮮政策においてテコを有しておらず、それゆえに米国と韓国と安全保障政策を調整することは日本にとって不可欠である。米国が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対して強い懸念を示すときには、日本は巧みにそれらを自らの政策アジェンダに組み入れたり採用したりしていくことになる。

たとえば、北朝鮮の核開発計画の問題は当初、日本の対北朝鮮交渉戦略には組み込まれていなかったが、日本は米国の安全保障上の懸念に対応し、日朝平壤宣言のなかで明示的に安全保障に関する項目を含めたといわれている¹⁶。日本は拉致問題と国交正常化問題に対して多くの関心を示す一方で、米国は北朝鮮の核兵器とミサイル開発計画を封じ込めることに強い関心を払っていた。ワシントンはこの問題に対する東京の明示的な協力は当然のこととして捉えていた。小泉首相が平壤を訪問する前に、米国の国務副長官であったリチャード・アーミテージは「米国の懸念は日本の懸念」と念を押している¹⁷。日本は米国の懸念事項と軍事分野における自国の能力の限界について十分に認識していた。小泉首相自身も米国と日本の両方にとっての安全保障上の懸案は日本単独では扱う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前に明確にしてもいる¹⁸。

上記の事例は日本の対応型関与という特質を端的に示していよう。日本の対北朝鮮政策

における米国ファクターは数多くある制約要因の単なる一つではない。もちろん、日本は関連する国内外の要因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米国との関係は北朝鮮問題を含む日本の対外政策の規定要因となっている。実際に、米国と韓国との緊密な連携のなかで調整統一した対北朝鮮政策を遂行することは日本の利益である。なぜなら、日米韓の三方国による政策調整を通じた北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と安定の維持は日本が北朝鮮と国交正常化を進める際の前提条件であるために、日本が米国の懸念事項や利益に対応することは自国の安全保障政策や北朝鮮に関する日本の懸念にも合致するのである。

(2) 北朝鮮ファクター

日本がまだ過去の植民地支配の清算を行っていないという点で日朝関係は特別な意味を持っている。日本は拉致問題を優先課題とし、北朝鮮の核開発プログラムに対する懸念を示しているが、北朝鮮は明らかに植民地支配の清算を通じた日朝国交正常化とそれに伴う経済協力に焦点を当てている。日朝平壤宣言が締結された後に開催された第12回日朝国交正常化交渉において鄭泰和日朝国交正常化担当大使(当時)は日朝交渉の過程で「日朝国交正常化と経済協力が優先されねばならない」と述べていた¹⁹。その後の交渉においても北朝鮮は「拉致問題は原則的に解決した問題であり、核問題は米国との交渉を通して解決されるべき問題である」との立場を繰り返し強調している。実際に、日本が拉致問題や安全保障上の懸案事項の解決のみを繰り返し主張することは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根本的な目的からは逸脱しているとの見解は日本国内にも存在する²⁰。

しかしながら、日朝国交正常化の問題を日本による過去の植民地支配の清算に限定する見解も同様に、北朝鮮との国交正常化の過程は日本の安全保障上の懸案と密接に関連しているという事実に対する認識の欠如を意味する。伝統的な国際関係論の観点では、国家が追求する国益には国家の生存、繁栄、核心的価値の保全などが含まれるが、そのなかでも国家の生存をすべての国家にとっての死活的利益と捉える。この見解が正しいとすれば、北朝鮮の核問題が解決しないまま北朝鮮に対する経済協力を実施することは自国の安全保障が危険にさらさ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に、核問題が未解決のままで日本は北朝鮮との国交正常化に進むことは想定しがたい。換言すると、かりに過去の植民地支配の清算とそれに伴う措置が自国の安全保障上の懸念を悪化させたり、米国のグローバル戦略と矛盾したりするものであれば、日本が北朝鮮と国交正常化することはない。その意味で、日朝関係では過去の清算も非核化の進展とは無関係に進め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る。

一方で、北朝鮮にとっても現体制の生存は重要かつ緊急な課題である。日本を含む他国からの経済協力や支援は北朝鮮経済を活性化するうえで不可欠であるが、北朝鮮にとっても差し迫った戦略的優先課題はやはり安全保障の領域に関わる問題である。北朝鮮はこれまで米国の対北朝鮮「敵視政策」に脅威を感じてきた。とりわけ、初期のブッシュ政権下で追求された強硬政策は北朝鮮の核保有宣言および核実験の実施をもたらす要因として機能したし、同じく悪の枢軸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イラクの二の舞を避けるための口実にも

なった。こうした文脈から北朝鮮は繰り返し米国との不可侵条約や平和協定の締結を要求してきた。北朝鮮にとって安全保障上の最大の懸念は依然として米国であり、核やミサイルなど安全保障に関わる領域において日本を交渉者としてみなしてはいたないために、この点においても日本は米朝関係の従属変数に成らざるを得ない。このような国際安全保障上の文脈においては、日本の経済カードは核問題の解決には十分な道具として活用しうるものとは言い難い。したがって、日朝国交正常化および核・ミサイル問題といった日朝間の懸案問題は米朝関係に組み込まれているのであり、何れの問題も日本が単独で北朝鮮との関係を進展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

(3) 国内政治要因

日本は拉致問題を理由として北朝鮮に対して強硬な姿勢を示してきた。北朝鮮が認める13人の拉致被害者のうち8名が死亡しているという北朝鮮の発表は日本にとって極めて大きな衝撃であった。北朝鮮は日本人拉致被害者に関する日本の世論の怒りがこれほど大きくなるとは想定してい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おそらく、日本の世論の怒りの大きさは日本政府の予想をはるかに超えるもの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ほとんどの日本人は拉致という北朝鮮の犯罪行為に対して怒りを感じ、また、拉致被害者および被害者の家族たちに対して同情を示した。このような状況下では、日本は北朝鮮との関係において拉致問題で妥協をすることは国内政治的に許されない状態となってきた。すなわち、拉致問題で妥協的とみられる姿勢をとることは政治的な自殺行為となるのであり、日本政府や政治家はそのことをよく理解している。

したがって、日本はこの問題に対して積極的に取り組まざるを得ない。日本政府は国際連合、日中韓サミット、G8などの多国間の枠組みを通して、国際的な支持と日本にとってこの問題の重要性に対する理解を得ることに成果を上げてきたといえる。おそらく、日本政府の立場からみると、対北朝鮮政策において拉致問題に対する認知を得てきたことは最も顕著な外交的成果といえるであろう。ただし、残念なことに他国の日本人拉致問題に対する関心は日本が望むほど高いとは言えない。言うまでもなく、日本の国民感情を鑑みると日本が拉致問題において北朝鮮に対して確固たる姿勢を示す必要があるが、米国やその他の周辺国、そして国際社会は拉致問題よりも核問題により高い関心を有している。日本の積極的な外交活動にもかかわらず、国際舞台においてより重要な懸案事項の前では拉致問題への支持は象徴的あるいは限定的にならざるを得ない。

このような国内圧力に反応した拉致政策において、日本は必ずしも体系的かつ効果的に問題解決に向けて対応できていない。まず、日本は納得のいく説明がなされていない限り、安否不明の拉致被害者はすべて生存しているとの前提で拉致被害者の即時帰国、真相解明などを北朝鮮に要求しているが、北朝鮮はすでに解決した問題であるとするので一向に展望が開かれないままである。次に、日本の拉致問題に対する姿勢は6者協議参加国のなかでも必ずしも支持されていない。とりわけ、中国や韓国は日本が拉致問題を理由として6

者協議で合意されたエネルギー支援に不参加を表明したり、拉致問題を繰り返し取り上げることが非核化という重要課題の障害となったりしていることに不満を抱いている。さらに、拉致問題に対して支援をしてきた米国が北朝鮮の非核化の進展という政策課題を達成するために、北朝鮮をテロ支援国リストから除外することで、日本は拉致問題解決のための重要なテコを喪失した。その結果、拉致問題をめぐっては強い国内感情と必ずしも望ましくない国際環境のなかで、北朝鮮の対外行動に応じて制裁措置を強化していくといった非体系的かつ不完全な拉致への対応となっている。

以上のような対応型関与という概念を用いることで、北朝鮮の核実験に対する次の3つの日本の対応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第1に、北朝鮮の核開発計画に対応する日本の核武装の可能性についてである。北朝鮮の第3次核実験を契機として再び台頭してきた日本の核武装論の妥当性について検討できよう。第2に、北朝鮮の核実験に対応して日本が実施してきた経済制裁についてである。日本の実質的に唯一の対北朝鮮圧力である対北朝鮮経済制裁の特徴を明らかにできよう。第3に、北朝鮮の核開発計画をめぐる日米間の政策相違に対する日本の対応についてである。日本独自の対応とその限界について明確にできよう。以下の分析において、日本の北朝鮮政策に関する以上の3つの論点を対応型関与という点から検討するとともに、日朝国交正常化交渉や北朝鮮核問題に対する現在の日本の位置を確認しよう。

III. 北朝鮮の核実験に対する日本の対応

(1) 日本の核武装論

北朝鮮の核実験に対する日本の対応の基軸は強固な日米関係を維持するという点である。これは日本が単独で北朝鮮の核に対応できないために、日本がとりうる唯一の現実的な対応である。米国は日本防衛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を明確にすることで対北朝鮮政策をめぐる日米協調が維持されてきた。今回、北朝鮮が2013年2月12日に第3次核実験を実施した際にも安倍首相とオバマ大統領はただちに電話会談を行い、北朝鮮の核実験に対する国連安保理決議の早期採択に向けて共に努力することを合意するとともに、オバマ大統領は「米国は核の傘で日本を防衛する」ことを約束した²¹。また、2月22日に実施された日米首脳会談に先立ってホワイトハウスの高官らも「北朝鮮の核実験や一連の挑発に対する我々の対応は同盟国である日本や韓国の安全保障に対する米国の堅いコミットメントから始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ることで、北朝鮮の核問題に対する日米関係の協調に力点を置いた²²。

このように日米間で政策協調が確認される一方で、北朝鮮の核実験を契機として日本の核武装論が再び提起されているが、このような日本の核武装論は日本の現状を的確に反映したものとは言い難い²³。まず、日本の核保有は次の2点から米国の国益に反するために、米国は日本の核武装を望ましいと考えていない。第1に、日本の核武装は核不拡散体制の崩壊を意味し、これは米国の世界戦略に反するために米国が容認するとは想定し難い。第

2に、日本の核武装は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ドミノ現象あるいは軍拡を奨励する可能性が生じるために米国の国益に反する。また、日本自身は依然として核拡散防止条約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と非核三原則を国内規範としており、現状において核武装論が国内で支持を得ているとは言い難い。北朝鮮の核実験後であっても NPT 体制からの脱却や核に対する日本国内での認識に大きな変化は現れていない。すなわち、日本の核保有は日本の安全保障の根幹である日米関係を崩壊させるばかりではなく、日本のアイデンティティや規範に反する選択となる。

次に、日本の世論も日米同盟に対して肯定的評価をする一方で、自国の軍事力強化に対しては慎重な姿勢を取っている。2012年の内閣府の「自衛隊・防衛問題に対する世論調査」によると、日本の平和と安全に対する関心ごととして「朝鮮半島情勢」をあげるものが64.9%と最も多く、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が日本の安全保障に及ぼす影響に対する関心が高いことが伺える。また、81.2%が日米安全保障条約は日本の安全に役立っていると回答し、日本国民の多くが日米安保を支持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一方で、自衛力が不十分であるために日本が戦争に巻き込まれると回答したものは前回調査より上昇したとはいえ23.4%にとどまっている。すなわち、日本の世論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を日本の安全保障の最大の関心事とする一方で、日本の安全保障を担保するのは核武装を含む自国の自衛力強化ではなくて日米安全保障にあることを受け入れているのである。

したがって、日米関係が強固であり米国の核の傘が機能している限りは日本が核保有や軍事力の強化へと向かう可能性は高くない。2月に行われたオバマ大統領と安倍首相の日米首脳会談もこの点について十分に意識されたものとなっている。むろん、いわゆる「反米保守」やナショナリストの中には核武装を含む日本の自衛力強化や軍事大国への復帰を主張する論者が存在する。しかしながら、北朝鮮の核実験の後においてもこれらの勢力が政治力をもったり国民の支持を獲得したりという状況は形成されていない。日本の主流である「親米保守」および大多数の世論は依然として日本の安全保障の根幹として日米安保を支持している。米国ファクターおよび国内要因の何れからみても北朝鮮の核実験への対応とした日本の核武装は想定しえない選択である。

(2) 日本の対北朝鮮経済制裁

北朝鮮の核実験に対してメディアや専門家の間でも取り上げられる日本の核武装論や日本の右傾化といったセンセーショナルな見解が誇張であると認識することは必ずしも日本が対北朝鮮政策において融和的であることを意味しない。むしろ、日本はこの間、北朝鮮に対しては核・ミサイルおよび拉致問題を理由に国連安保理決議に基づく制裁措置および日本の独自の制裁措置を適用してきた。まず、2006年7月のミサイル発射と10月に北朝鮮が核実験を実施したことを受けて、北朝鮮国籍を有する者の原則入国禁止、北朝鮮籍の船舶の入港禁止、北朝鮮からの輸入を全面禁止した。また、2009年4月の「人工衛星」(ミサイル)発射に続いて5月に北朝鮮が2度目の核実験をしたことに対して日本からの輸出

も全面禁止になった。その結果、現在、日朝間において貿易は実質的に行われていない状況である。さらに、朝鮮総連の許宗萬（ホジョンマン）議長ら北朝鮮の最高人民会議代議員を兼ねる総連関係者 4 人を対象として、訪朝した場合の日本への再入国を禁止している。以上のように、日本は対北朝鮮経済制裁として北朝鮮との間でのヒト・モノ・カネの移動を制限する措置を講じている。

今回の北朝鮮の核実験を契機として、日本政府は北朝鮮への経済制裁をさらに強化する方針を示している。まず、安倍首相は 2 月 12 日に北朝鮮の核実験の発表を受けて「我が国の安全に対する重大な脅威であるとともに、北東アジアや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著しく損なう」として北朝鮮を強く非難した。次に、日本政府の対応として（1）情報収集・分析、（2）国民への的確な情報提供、（3）不足の事態への準備、（4）放射線物質のモニタリング、（5）米国、韓国、中国、ロシアとの協力強化、（6）在日の北朝鮮当局職員の活動を実質的に補佐する者の北朝鮮からの再入国原則禁止、（7）今後、さらなる対応の検討を挙げた²⁴。これまで朝鮮総連の議長ら 4 名が訪朝した際の日本への入国禁止対象とされていたが、今回、日本政府の独自制裁として新たに朝鮮総連の副議長 5 名が渡航制限の対象となることを決定した。さらに、今回の北朝鮮による一連の行動について「挑発の度が超えている」との理由で日本政府は北朝鮮との輸出入および北朝鮮籍の船舶入港を禁じる対北朝鮮制裁の 2 年間延長を実施する方針を示した。今後、国連安保理で採択された北朝鮮への追加制裁として北朝鮮との金融取引制限の強化などさらなる措置も検討されている。

こうした日本政府の対北朝鮮経済制裁は日本の世論によってもおおむね支持されていると言えるであろう。実際に、日本が重要視する核、ミサイル、拉致問題をめぐって日本が行使しうる対北朝鮮圧力は経済制裁以外には想定しにくい。北朝鮮の第 3 次核実験以後に実施された読売新聞と韓国日報による「2013 年韓日国民意識」合同調査によると、北朝鮮の核の脅威を感じていると回答した日本国民は 84.7%、韓国国民は 76.7%と韓国よりも日本が高い一方で、北朝鮮への対応方式について韓国は「対話重視」を優先したが（50.5%）、日本は経済制裁などの圧力重視の比率がより高かった（52.6%）。日本では核武装論や自国の軍事力強化や北朝鮮への軍事的対応を支持する世論は形成されてはいないが、対北朝鮮政策をめぐっては対話よりも圧力を通して対応することが国内で受け入れられているといえる。換言すれば、日本の国民は北朝鮮の攻撃的な対外行動に対する対応策として軍事的措置や自国の防衛力強化という選択肢よりも経済的手段を活用した圧力の行使を選好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以上の点を踏まえて日本の対北朝鮮経済制裁の特徴について次の 2 点について指摘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第 1 に、日本の対北朝鮮経済制裁の実施は国連安保理決議など国際社会の動向に合わせて慎重に実施され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実際に、日本の経済制裁措置はこれまで安保理決議など国際協調によるものでなければ、制裁措置は講じることができないとされていた。現在は北朝鮮の拉致問題等を踏まえて日本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閣議において、対応措置を講ずべきことを決定することがで

きる。」とし、日本の独自制裁もこうした方向性にそって付加的に実施されている²⁵。とはいえ、第2に、日本独自の経済制裁は実質的効果というよりも政治的側面が強いという点である。日朝間の金融規制は第三国を経由する資金を制限することはできず、また、日朝間の貿易は中国や韓国などとの貿易によって代替されてきた。むしろ、日朝間の往來のシンボルであった万景峰号の入港禁止や朝鮮総連幹部の再入国禁止などは北朝鮮への政治的メッセージとしての意味合いが強いと考えられよう²⁶。同様に、北朝鮮に対して断固たる姿勢を示すことを要求する国内世論に対する対応という側面も存在しよう。

(3) 日米間の政策相違

日本の対北朝鮮政策が米国との協調を前提に形成されているのは確かであるが、少なくとも次の3点において日米間には北朝鮮政策をめぐる政策課題や優先度において相違がある。第1に、米国の対北朝鮮政策における最大の懸念は北朝鮮の核およびミサイルであるが、日本は対北朝鮮政策において核問題およびミサイル問題と併せて拉致問題を同時に解決しようとしている。2012年度の『外交青書』は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ついて「日本は2002年9月に締結された日朝平壤宣言に基づいて、拉致問題・核・ミサイル問題といった北朝鮮をめぐる諸懸案を包括的に解決し、不幸な過去を清算し、日朝国交正常化を図ることを基本方針とし、また、「この方針は2011年12月の金正日国防委員長の死去後も変わらない」ことを明確にしている²⁷。すなわち、2002年の日朝平壤宣言は依然として日本の対北朝鮮政策の基本方針である。したがって、米国にとっては核・ミサイルなど安全保障問題が主である一方で、日本は核・ミサイル問題を米国と協調しつつ、植民地支配といった歴史問題と拉致問題といった日朝関係特有の課題を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2に、上記の点と関連して、核問題の解決に重点を置く米国と拉致問題を同時に解決しようとする日本との間には政策上の優先度に相違があり、とりわけ北朝鮮の非核化が進展する際には日本はジレンマに陥る状況があるという点である。この日本のジレンマは2007年に米国が北朝鮮をテロ支援国家リストから解除する際に明確になった。北朝鮮の非核化を進展させたい米国と拉致問題解決のためのテコとして活用するために引き続きテロ支援国家リストへの指定を望む日本との間で政策齟齬が生じたことは記憶に新しい。日本は拉致問題に進展が見られるまで北朝鮮をテロ支援国リストから削除することを思いとどまるようにブッシュ政権に対して一年以上にわたって働き掛けた。また、2007年2月に合意された6者協議では北朝鮮の非核化に向けた行動に応じてエネルギー支援を実施することになったが、日本のみが拉致問題を理由に不参加の立場を維持しつづけたのである。こうした日本の対応は、米国と日本の利害が一致しない場合において日本が必ずしも米国の政策や関心に歩調を合わすとはいえない一つの事例を示している。

第3に、米国は米国本土に到達する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を直接的な脅威として警戒しているが、日本は日本全土を射程に収める中距離弾道ミサイル「ノドン」に対してより関心を払っている。こうした安全保障上の脅威対象の相違は日米間での政策協調に影

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のはいうまでもない。たとえば、北朝鮮のミサイル能力が発展し米国本土への攻撃が現実のものになるにつれて、かつては日本本土のミサイル防衛に力点が置かれていたが、米国の関心は米国本土の防衛へと力点が移りつつある。すなわち、北朝鮮が米国本土を攻撃対象にすると威嚇する際に、米国が日本防衛をためらうのではないかと懸念が日本にはある。こうした懸念から日本では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施設を攻撃できる「敵基地攻撃能力」についての議論が提起されてきた。これは北朝鮮のミサイルによる日本領土への攻撃が現実のものであると判断される場合には、北朝鮮のミサイル基地に対して先制攻撃を行うことは憲法上可能であるという議論である。現在のところ、この「敵基地攻撃論」は技術的および政治的制約があるためあくまでも議論のレベルにとどまっており、実際の日本の政策オプションにはなっていない²⁸。むしろ、現段階での「敵基地攻撃論」はこうした問題を提起することで、米国の対日防衛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を確実にするひとつの手段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側面がある。実際のところ、米国はこのような日本の軍事的自立を望んでいるとは言い難い。また、日米同盟を維持しつつ「敵基地攻撃能力」を有することは論理上ありうるが、他国の判断で戦争に巻き込まれる可能性が生じるために米国が容認するとは想定し難い²⁹。

したがって、対北朝鮮政策をめぐって日米間には以上のような政策相違が存在するが、次の2点について指摘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第1に、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おいて日米関係は重要な規定要因であるが、日本と米国の対北朝鮮政策における政策的優先度は必ずしも同一ではなく、米国の政策目標に影響を与えない範囲で日本は拉致問題など独自の課題や国益を追求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いう点である。第2に、米国の対日防衛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に日本が不安を感じる場合には、敵基地攻撃論など独自の自衛力強化が検討の対象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ながら、現状では技術的および政治的制約のために現実的な政策選択とはなっておらず、また、日本が取りうる現実的な政策は米国の対日防衛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を確実にするという点であろう。

おわりに

以上の議論を通していくつかの結論を導くことが可能であろう。第1に、北朝鮮の核問題に国際社会の関心が集まる際に、日本の核武装論がしばしば提起されるが、対応型関与は日米同盟が存在し、核兵器に対する国内規範が継続している限り、日本の核武装という可能性を議論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という点も明らかにする。まず、日米同盟を通して日本の外交政策は利益と制約を同時に受けているが、核武装は米国の利益と真っ向から対立するために、米国が日本の核武装を容認することは想定できない。また、日本の国民感情や核兵器国を目指す際に伴うコストに対応する場合に、日本の核武装は決して日本にとって望ましいものではない。したがって、米国の日本防衛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が信頼性のあるものである限りにおいて、北朝鮮の核問題への対応を目的とする日本の核武装論は非現実的である。

第 2 に、対応型関与は日本の対北朝鮮経済制裁が国内政治要因を反映しつつ国際協調を基本とした範囲で北朝鮮に対して圧力を行使する手段として適用さ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まず、日本は核問題やミサイル問題といった国際社会の懸案については国連安保理決議に基づく国際協調を基本とした経済制裁を実施している。次に、拉致問題への対応を考慮した日本の単独経済制裁はその効果それ自体よりも北朝鮮に対する政治的圧力とともに国内世論への対応をふまえて付加的に実施されている。すなわち、対応型関与は日本の対北朝鮮経済制裁が米国を中心とする国際社会との協調を基軸として、北朝鮮からの報復をもたらさない範囲で国内外の政治的要素に対応する形で実施さ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その意味では、日本が北朝鮮の核実験など核開発計画に対応してとりうる唯一の圧力は軍事的対応ではなくて慎重な経済制裁といえるであろう。

第 3 に、対応型関与は北朝鮮政策をめぐって日米間に政策課題や優先度に相違が存在することを示すことで、属国論とは異なって日本は独自の課題を追求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同時に、自衛力の強化は米国の戦略の範囲内でのみ遂行しう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米国は北朝鮮問題において核・ミサイル問題に重点を置くが、日本は過去の清算の問題と拉致問題を含めて包括的な課題を追求することや北朝鮮の非核化に進展があっても拉致問題への対応が不十分であると判断する場合には、他国との政策協調に参加しないことも可能である。同時に、核武装や「敵基地攻撃能力」の保持など日本の独自の軍事力強化は米国の戦略に支障を及ぼすために容認され得ない。すなわち、対応型関与は米国が関心を払わなかったり、米国の政策目標の障害になったりしない限り、日本が独自に政策を遂行でき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第 4 に、対応型関与は強硬な立場を継続している現在の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対しても説明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まず、日本と北朝鮮は依然として日朝平壤宣言を維持しており、また、6 者協議で合意された 9.19 声明に対してコミットし続けている点で関与を破棄したわけではなく、現在でもその方向性は維持されていることを示すことができる。次に、日本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計画に重点を置く米国の対北朝鮮政策や拉致問題に関する国内状況に対応して関与が進展しない状況にあるが、非核化の展開次第では関与が再開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内包している。すなわち、日本は最低限の対北朝鮮関与を維持しながら米国ファクターと国内要因に対応しつつ、日朝国交正常化交渉が再開するための機会を待っているという説明になろう。したがって、米朝関係が進展すれば日本の対北朝鮮関与も進展する可能性が高いことも同時に対応型関与は示している。

1 天木直人『さらば日米同盟』講談社、2011 年。戦後の日本外交を「自主」と「対米追従」とのせめぎあいとして捉えた元外務省情報局長の興味深い著書として次の文献がある。孫崎享『戦後史の正体』創元社、2012 年。

2 典型的な議論としては、以下のような研究がある。ガバン・マコーマック「アジアの問題児：属国の苦悩」『朝鮮半島の和解・協力 10 年』徐勝・中戸祐夫編（御茶ノ水書房、2009 年）。この論文は以下の著書

のエッセンスを描いたものである。Gavan McCormack, *Client State: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 New York and London, 2007.

³ マコーマックは上の論文で属国と矛盾するが、天皇中心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日本の軍国主義的な側面を同時に議論している。これは日本の二重性を的確に指摘している一方で、こうした日本の反動的あるいは対米従属とは異なる側面については、属国という概念では説明できないことを自らの主張によって結果的に証明している。

⁴ John Bolton, "How to Answer the North Korean Threat,"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1, 2013. また、米国の著名なコラムニストであるチャールズ・クラウサマーは北朝鮮の第2次核危機が発生した際に、北朝鮮が核を放棄するために中国が米国に協力しない場合には、米国は日本が核抑止能力を保有しようとする試みを支援する必要があると主張した。 *The Washington Post*, January 3, 2013.

⁵ 日本の核武装は日本の国益の観点から見て少なくとも次の3つの理由で望ましくない。まず、反核感情が日本国内において依然として強く残っ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次に、核兵器開発に伴うコストが膨大なものになるという点である。かりに日本が米国の核の傘に依存せずに自国で核兵器を保有しようとした場合に、日本は中国に対抗しうる核を保有せざるを得なくそのコストは計り知れない。さらに、日米安全保障条約が存在するからである。日本の核武装は米国の利益に反するために、米国は決して容認しない。より包括的な分析については次の文献を参照のこと。Matake Kamiya, "Nuclear Japan: Oxymoron or Coming Soon?" *The Washington Quarterly*, 26:1, 2003, pp. 63-75.

⁶ Sachio Nakato, "Responsive Engagement," *Ritsumeikan International Affairs*, vol. 2, 2004, pp. 141-157. 本稿の議論は著者による上の研究に依拠して対応型関与の観点から北朝鮮の核問題への対応を検討するものである。

⁷ Task Force on Foreign Relations for the Prime Minister, *Basic Strategies for Japan's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New Era, New Vision, New Diplomacy*, November 28, 2002, p. 13.

⁸ *Ibid.*, p. 13.

⁹ Kenji Hiramatsu (2003), "Leadup to the signing of the Japan-DPRK Pyongyang Declaration," *Gaiko Forum*, Winter, p. 24.

¹⁰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lue Paper (Gaiko Seisho)*, several issues.

¹¹ Yasuhiro Nakasone and Hisahiko Okazaki, "Negotiating Patiently with North Korea," *Japan echo*, pp. 10-12.

¹² Gerald L. Curtis, "Japan's Cautious Hawks: Why Tokyo Is Unlikely to Pursue an Aggressive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92, no. 2, March/April, 2013, p. 77.

¹³ 日本の対外政策は確かに受動的な要素を有している。しかしながら、「受動的関与」(passive engagement)はある国が受動的でありながら関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めに矛盾を含んでいるし、拉致問題など問題領域によっては積極的な要素があるために適切な用語ではない。また、ケント・カルダーはかつて日本の対外経済政策を「反応型」と概念化したが、「反応型関与」(reactive engagement)という用語は核問題の文脈では北朝鮮や台頭する中国のような国々に対する脅威から「反動」あるいは「反抗」というニュアンスを持って日本が核武装するというような文脈として把握されてしまう懸念がある。日米同盟の解体というような状況がなければ日本の核武装は想定しがたいために、この用語は適切ではないように思われる。したがって、日本の対北朝鮮政策を概念化する際に、反応型関与というのはそれなりの妥当性があると思われる。

¹⁴ Chung-in Moon,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Changes in Inter-Korea Relations – In Defense of the Sunshine Policy," *Korea and World Affairs*, winter, 2001, p. 516.

¹⁵ See Victor D. Cha (2002), "Hawk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summer), pp. 40-78, and Victor D. Cha (2002), "Korea's Place in the Axis," *Foreign Affairs*, May/June, pp. 79-92.

¹⁶ この経緯については実際に日朝平壤宣言の作成過程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田中均元外務審官の著書等でも論じられている。田中均『外交の力』日本経済新聞社、2009年、pp. 118-124.

¹⁷ *Asahi Shimbun*, September 14, 2002.

¹⁸ *Asahi Shimbun*, October 18, 2002.

¹⁹ *Asahi Shimbun*, October 31, 2002.

²⁰ たとえば、姜和中・水野直樹・李鐘元編『日朝交渉』岩波書店、2003年、pp. 104-114.

²¹ *The Daily Yomiuri*, February 14, 2013.

²²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3, 2013.

²³ チョンナムグ「韓国内核武装論を喜ぶ日本の保守勢力」『ハンギョレ』2013年2月15日、チョングォンヒョン「韓国も核武装の議論を」『朝鮮日報』(Chosun Online) 2013年2月24日

²⁴ 「内閣総理大臣声明」平成25年2月12日

²⁵ 2004年に外為法の改正の伴って日本単独での経済制裁が可能となった。

²⁶ 福田官房長官（当時）は2004年11月21日の会見で「一国だけで（経済制裁を）やるのは、国の意思を表明することでは意味がある」と述べている。

²⁷ 外務省『外交青書』外務省、2012年。

²⁸ Tomohiko Satake,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Security Perspectives of Japan,” Kyuryoon Kim and Jae-Jeok Park eds.,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2, pp. 129-131.

²⁹ 『産経新聞』2013年4月1日

참가자 약력

개회식, 개회사

박명규 (Park, Myoung-Kyu)

[현직]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전공) 문학박사
- Harvard University, Yenching Institute, Visiting Fellow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전공) 문학석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문학사

[경력]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이사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 UC Berkeley Visiting Professor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부학장
- UC Irvine, Visiting Scholar,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 Harvard University, Yenching Institute, Visiting Fellow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주요저서 및 연구 업적]

-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창비, 2012.
 -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2012. (공저)
 -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공저)
 - 『식민권력과 근대지식:경성제국대학연구』,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공저)
 - 『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0. (공저)
 - “현상과 이미지-북한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 평화』, 3집 1호 (2011) (공저)
 - “21세기 통일한반도를 위한 전략적 준비”, 『통일과 법률』, 제 7호 (2011), pp 1~15
- 그 외 다수

[현직]

- 통일부 장관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주요경력]

- 북한연구학회 회장
- 국가미래연구원 외교안보분과 회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장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정책자문위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 북한연구학회 총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교수·부교수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A Turning Point: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e ROK and Strategic Readjustment in the US-ROK Alliance, th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y, 2005. (공저)
- 『남북한 관계론』, 한울, 2005. (공저)
- 『북한연구방법론』, 한울, 2003. (공저)
- 『김정일 시대의 북한』,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예외국가’의 제도화:군사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현대북한연구』, 4권 1호 (2001).
- “북한의 개혁가능성과 남북한 관계:정상회담과 북한의 개혁 전망,” 『사회과학논집』 31권 (2001).
- 그 외 다수

[현직]

- 서울대학교 총장
-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학력]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 미국 뉴욕대학교 (N.Y.U) 석사 및 박사(MPA, Ph.D.) (전공:재정관리)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 (재) 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이사장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및 선임이사
-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특위 위원장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
- 국회, 재단법인 『한국위회발전연구회』 이사장
-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 세계은행(The World Bank)민영화 담당 자문관
- 기획예산위원회 위원
- 한국조세학회 회장
- 독일 베를린 대학교 초빙교수
-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행정고시 합격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강한시장과 건강한 정부』, 올리브앤앰비, 2009
- 『재정개혁의 전망과 재산세제의 개선과제』, 집문당, 1996
- 『한국조세론』, 박영사, 1992

[현직]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학력]

- 미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 석사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정치학사

[주요경력]

- 한민족 어린이 돕기 네트워크 공동대표
- 통일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교수
-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조교수, 부교수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부교수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북미대립:탈냉전 속의 냉전대립』,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공저)
- 『전후한일관계의 전개』, 아연출판사, 2008. (공저)
- 『김정일 체제의 북한:정치·외교·경제·사상』, 아연출판부, 2004. (공저)
- “중국의 부상과 중-일 간의 파워게임”, 『일본비평』, 창간호 (2009).
- “한반도의 냉전 엔드게임(Endgame)과 북미대립”,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2호 (2009).

- 그 외 다수

[현직]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학력]

- 미 MIT대학 핵공학 박사
- 미 MIT대학 핵공학 석사
- 육군사관학교 학사

[주요경력]

-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센터 현역연구위원
- 국방부군비증검단 핵검증 담당 역임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남북한 군사력의 현재와 미래』, 한국국방연구원, 2010. (공저)
 -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한국국방연구원, 2009.
 - “PSI의 국제동향과 한국의 활용방향,” 『국방정책연구』, 96권 (2012).
 -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2009).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상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제78호 (2007).
- 그 외 다수

[현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학력]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박사
-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대학 정치학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학사

[주요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
- 2003 중앙일보 편집국 국제부 카이로특파원
- 2002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 2001 옥스퍼드대학교 유택학연구소 연구원
- 2000 옥스퍼드대학교 난민문제연구소 연구원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아랍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모시는사람들, 2012. (공저)
 -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중동』,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2009.
 - 『두바이 무한상상력과 창조적 리더십』, 글로연, 2006.
 - “아랍의 정세불안과 향후 전망,” 『외교』, 제97호 (2011).
 - “이란 핵개발, 중동지역 핵개발 도미노 야기,” 『통일한국』, 제27권 4호 (2009).
- 그 외 다수

[현직]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학력]

- 미 University of Colorado 정치학박사
- 미 University of Colorado 정치학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정치학석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사

[주요경력]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조교수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연성복합통일론:21세기 통일방안구상』,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2. (공저)
 -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2012).
 -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통일과평화』, 제3집 2호 (2011).
 - “선군정치와 북한 군사부문의 변환전략,” 『국제관계연구』, 제15권 제2호 (2010).
 -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국제관계연구』, 제14권 제1호 (2009).
 -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 그 외 다수

[현직]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학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 석사
-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주요경력]

- 한국정치학회 이사
- 한국세계지역학회 이사
- 평화재단 이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안보연구실 실장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관계연구센터 센터장, 기획실 실장
-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객원연구원
- 일본 도쿄대학교대학원 객원연구원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뉴 한반도 비전: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백산서당, 2012.
 - 『오바마 시대 변화하는 미국과 한반도』, 시대의창, 2009. (공저)
 - 『한반도 평화 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의 전망』, 푸른나무, 2007.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4권 1호 (2012).
 - “북한의 한반도 전략 분석,” 『국제문제』, 제41권 5호 (2010).
 -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입장: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2단계 평화 프로세스 구상,” 『북한』, 통권429호 (2007).
- 그 외 다수

[현직]

-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K professor

[학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Ph.D. in Political Science, December 1991.
- Dissertation: Dynamics of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he Fourth Republic of South Korea. Advisor: David Easton
- M.A. in Social Science, December 1990.
-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M.A. in Ethics Education, February 1985.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B.A. in History Education, February 1980.

[주요경력]

- Humanities Korea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eace, 2012–date
- Professor, Hiroshima Peace Institute, Hiroshima City University, 2007–2012.
- Associate Professor, Hiroshima Peace Institute, Hiroshima City University, 2003–2007.
- Visiting Fellow &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2–2003.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2001–2003.
- Fellow, KINU, 1997–2001.
- Associate Fellow, KINU, 1992–1997.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State Violence in East Asia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3 forthcoming, edited with N. Ganesan).
- “Japan’s Strategic Response to North Korea: Activistic Security Policy, Eroding Pacifism,” in Purnendra Jain and Lam Peng Er, eds., Japan’s Strategic Challenges in a Changing Environment, World Scientific (2012), pp 73~95.
- ひとつのアジア共同?を目指して (東京: 御茶ノ水書房, 2012)
- etc.

[현직]

- 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중동정치 및 테러리즘)
-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학력]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 연세대학교 석사 (정치학)
- University of Durham 박사 (중동정치학)

[주요경력]

- 이집트 알아흐람 (Al-Ahram) 신문사 정치전략연구소 (Centre For Political Science and Strategic Studies) 방문연구원
-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부교수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중동지역 정체성 증위와 구성주의 적용에 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2011.
- “21세기 국제안보와 신테러리즘:알 카에다의 성격변화와 미국의 새로운 대테러리즘 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타간행물』, 제 8호 (2011), pp 335~361.
-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중동지역의 세계관과 동맹”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제 35호 (2009), pp 1~29.

[현직]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학력]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주요경력]

- 전 유엔대사
- 외무부 군축원자력과 과장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국제협력부 부장
- 대통령 국제안보 비서관
-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 UN 평화구축위원회 부의장
- UN 환경정상회의(지속발전회의) 준비위원회 공동의장
- 주UN 대표부 대사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변영』(2008)

[현직]

- Executive Director of 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Fudan University

[학력]

- B.A. Suzhou University
- M.A. Nanjing University
- Ph.D. Fudan University.

[주요경력]

- Lectuer, Suzhou Normal School of Jiangsu Province
- Lectuer, Associate professor, Changshu College of Jiangsu Province
- Visiting scholar, Yonsei University of Korea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DPRK Nuclear Crisis and the Changing Sino–DPRK Relationship” Conference for Regional Peace 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Center for Asian pacific Studies (2010).

[현직]

- Professor,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Ritsumeikan University
- Management Member, Center for Korean Studies

[학력]

- B.A. fro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Oneonta.
- M.A. from Ritsumeikan/American University,
- Ph. D. from Ritsumeikan University

[주요경력]

- Fellow, Center for Asian Studies, American University
- Fellow,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Utsunomiya University
- Board member,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rea Studies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Costs and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for Japan: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in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2), pp 141~159.
- "Security Dynamics in Northeast Asia: Emerging Confrontation between U.S.-ROK-Japan vs. China-Russia-DPRK," in U.S.-China Relations and Korea Unificat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1), pp 37~61.

[현직]

- 한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정치·정보학회 부회장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미국 허드슨 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학력]

- 한국외국어대 (정치학)
- 한국외국어대 석사 (정치학)
- Univ. of Cincinnati 박사 (정치학)

[주요경력]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정책전문위원
-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21세기 정치학회 부회장
-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
-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21세기 동북아 정세와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공저)
-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통일연구원, 2005.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공저)

[현직]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학력]

- 서울대 국어교육과
- Brown University 석사 (역사학)
- University of Michigan 박사 (정치학)

[주요경력]

- 홍콩중문대학(CUHK) 방문연구원
- 홍콩과기대학(HKUST) 사회과학부 조교수
- 홍콩중문대학(CUHK) Centre of China Studies 객원연구원
- 홍콩이공대학(HKPU) 공공행정학과 초빙연구원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CNAPS Fellow
- 싱가포르 국립대학(NUS) 동아연구소(EAI) 방문선임연구원(Visiting Senior Fellow)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CIS) 소장
-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Korea Foundation Visiting Professor
-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소장
- 서울대 MacArthur Asia Security Initiative(SNU-MASI) Project Manager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Uncomfortable Allies or Uncertain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North Korean Relations, 1949–2009” *Pacific Review*, vol. 26, no. 3 (2013).
- “Korean Views of Korea–China Relations: Evolving Perceptions and Upcoming Challenges” *Asian Perspective*, vol. 36, no. 2 (April–June 2013), pp 219~236.
-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 출판부, 2011.
- 『중국을 고민하다? 한중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2011.
- *China's Crisis Management*, London: Routledge, 2011.
- *China's Local Administration: Traditions and Changes in the Sub-National Hierarchy*, London: Routledge, 2010.
- 그 외 다수

[현직]

- 세종연구소 부소장

[학력]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
- 서강대학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졸
- 토쿄대학대학원 국제관계론전공 박사과정 졸
- 토쿄대학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 일본문무성 국비 장학생

[주요경력]

- 현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
- 토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 연구원
- 교토대학 법학부 초빙학자
- 현재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센터 센터장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근현대 일본정치사』(진창수 · 하중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외교정책』(편), 세종연구소, 2008.
- 『Current State of Japanese Studies in Korea』(Jin, Chang Soo), Hanul Academy, 2007.
- 『미일동맹』(진창수 · 김철수 공역), 한울아카데미, 2006.
- 『일본 정치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편), 한울아카데미, 2006.
- 『1990년대 구조불황과 일본 정치경제시스템의 변화』(편), 한울아카데미, 2005.
- 『일본은 희생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03. (공저)
- 『현대 일본정치 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2. (공저)
- 『일본의 이해』, 태학사, 2002. (공저)
-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편), 세종연구소, 2002.
-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변화:아시아주의로의 복귀,” 『일본연구논총』 제27집 (2008)
- “90년대 이후의 일본 정치,” 현대일본학회 편, 『일본정치론』(논형, 2007)
- “동아시아 외교:화해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외교정책 지향,” 세종연구소 편,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세종연구소, 2006)

[현직]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KIDA)

[학력]

- Ph. D. in Political Science(IR),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요경력]

-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Former Assistant Secretary-General,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Office of the President.
- Former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A Study on the Korean Defense Strategy Guidance (2012).
- Korean-American Relations (2012).
-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Regime :Continuity and Change of Institution and Policy (2009).
- State Formation of the Modern Korea :The State Apparatus of the First Republic and the Effect of the Korean War (2008).

[현직]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학력]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자문위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정치는 도덕적인가』, 한길사, 2012
- 『한국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공저)
- 『국가의 품격』, 한길사, 2010 (공저)

[현직]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Senior Researche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eoul, Korea.

[학력]

- Ph.D. in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주요경력]

-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2Member of National Task Force for the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Korea.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Science, Technology and Democracy, Munjisa.(in Korean),(2011)
- Technoscience, Environment, and Public Participation, Hanul. (in Korean), (2002)
-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nul. (in Korean),(2000)

[현직]

- 소설가

[학력]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주요경력]

- 2006년 제5회 아름다운 작가상
- 2001년 제34회 한국일보 문학상
- 1994년 새로운 작가상
- 민족문학작가회 공식 종군문인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황금지붕』, 실천문학사, 2007.
- 『길에서 만난 세상:대한민국인권의 현주소를 찾아』, 우리교육, 2006. (공저)
- 기획번역, 『팔레스타인의 눈물』, 아시아, 2006.
- 『아부 알리 죽지마? 이라크 전쟁의 기록』, 향연, 2003.
- 『선물』, 명예의전당, 2002.
- 『부엌』, 이룸, 2001.
- 『빈집』, 도서출판 강, 1997.
- “난장이 나라의 국경일,” 『현대문학』, (1994)

[현직]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학력]

- 한양대학교 철학과 박사

[주요경력]

- 김수환추기경연구소 부소장
-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21세기, 어디로 가고 있나?,” 『사목정보』, 제4권 12호 (2011).
 - “북한 종교의 實相과 남북 종교 교류,”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제11집 (2008).
 - “대북 인도적 지원과 평화교류 확대방안,” 『통일로』, (2006).
 - “남북종교교류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 -종단별 특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7권 (2004)
 -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인간중심철학의 대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3).
 - “가톨릭 교회의 교회 일치 운동,” 『신학과 사상』, 제44호 (2003).
 - “통일시대와 원불교의 전망 ; 북한의 종교실태와 남북종교교류,” 『원불교학』, 제8권 (2002).
 - “민족 화해를 위한 한국 가톨릭 교회의 노력,” 『사목』, 259권 (2000).
 - “신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제11권 1호 (1999).
 - “민족통합을 위한 남북한 종교계의 과제,” 『인문과학연구』, 제3권 (1998).
 - “북방 및 북한선교 전략,” 『사목연구』, 제6권 (1998).
- 그 외 다수

[현직]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핵공학과 교수

[학력]

- Ph.D., Departments of Mechanical and Nuclear Engineering, M.I.T.
- M.S.,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M.I.T.
- B.S.,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요경력]

- Chair, American Nuclear Society Korea Se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Officer, Korean Nuclear Society
- Chair, APR+ R&D Steering Committee
- General Chair, Korea-Japan Symposium NTHAS6, Okinawa, Japan
- Technical Program Chair, International Conference NUTHOS7, Seoul, Korea
- Commissioner, National Fusion Research Committee
- Treasurer, American Nuclear Society Thermal Hydraulics Division
- Steering Committee Chair, Korea-Japan Symposium NTHAS5, Jeju, Korea
- Commissioner, Korean Nuclear Utilization and Development Committee
- Technical Program Chair, Korea-Japan Symposium NTHAS4, Sapporo, Japan
- Program Committee, American Nuclear Society Thermal Hydraulics Division
- Editorial Advisory Board, Nuclear Technology
- Director, PRINCIPIA Engineering Super Simulation Emulation Institute
-Production Research Initiative Neo-tech Cybernetics Integrated Power Informatics Agency
- CEO, PHILOSOPHIA, Inc. 4+D Technology™ for Systems Engineering
- Humanization Information Animation
- Korean Representativ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 Commissioner, Korean Nuclear Safety Committee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Evolutionary design of reactor vessel assembly for liquid metal cooled battery” Progress in Nuclear Energy, Volume 53, Issue 7 (Sep. 2011).
 - “Development of linked analysis system for PWR severe accidents utilizing RELAP5 and MAAP4” Annals of Nuclear Energy, Volume 37, Issue 5 (May 2010).
 - “THE DESIGN FEATURES OF THE ADVANCES POWER REACTOR 1400,”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41 NO.8 (OCT. 2009).
 - “RELAP5/MOD3.3 analysis of coolant depletion tests after safety injection failure during a large-break loss-of-coolant accident”,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ume 235, Issue 22, (Nov. 2005).
 - “Integral test and engineering analysis of coolant depletion during a large-break loss-of-coolant accident” Nuclear technology, vol. 149, no2, (2005).
 - “Natural Convection Heat Transfer in Two-Dimensional Semicircular Slice Pool”,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olume 40, Issue 10 (2003).
- 그 외 다수

[현직]

-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원장

[학력]

- 괴팅겐게오르크아우구스트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 서울대학교 철학 학사

[주요경력]

- 육군사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 교육부 대학정책실 실장
-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장
- 한국철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연구소 소장
- WCP2008 (The XXII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2008) 학술1분과 위원장
-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교수
-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원장
- 대법원 윤리위원회 위원장
- (사)한국학술협의회 이사장

[주요저서 및 연구업적]

- “알렉산드로스의 영혼이론:형상들의 형상,” 『서양고전학연구』 제41권, 2010.
- “회의주의적 태도의 일관성:자기논박 논변에 대한 쾨른회의주의의 대응,” 『서양고전학연구』제31권, 2008.
- “언어, 수사술 그리고 인문학,” 『수사학』 제2집 제1호, 2005.
- “보편과 개별의 사이,” 『현대이론과 비평』 제21권, 2004.
- “인문학의 두 계기:진리탐구와 설득,” 『삶, 반성 그리고 인문학』. 이태수 외, 태학사, 2003.
- “동서사상의 정체형성과 21세기 한국사상의 정립에 대한 연구의 의의,” 『철학사상』, 2003.
-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와 그 전승,” 『서양고전학연구』, 2002.